

2024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2024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목차

제1부

발간사

원내대표 010

정책위의장 012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회운영위원회 015

법제사법위원회 021

정무위원회 027

기획재정위원회 035

교육위원회 04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49

외교통일위원회 057

국방위원회 067

행정안전위원회 07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7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8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93

보건복지위원회 101

환경노동위원회 107

국토교통위원회 115

여성가족위원회 121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국회운영위원회 127

법제사법위원회 137

정무위원회 145

기획재정위원회 155

교육위원회 16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7

외교통일위원회 187

국방위원회 195

행정안전위원회 2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31

보건복지위원회 243

환경노동위원회 253

국토교통위원회 261

여성가족위원회 277





제1부

발간사



원내대표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국정감사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 전반을 감사하여 잘못을 따지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첫째도 ‘민생’ 둘째,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2024년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위중한 안보 환경, 기술 패권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면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국정감사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의 결연한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거버넌스 구축 및 전력망 확충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상 기후가 식탁 물가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 김장재료 수급안정방안, 수확기 쌀시장 격리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공유킵보드 관리 문제, 스미싱·딥페이크 피해 등에 대한 실태를 알리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미래를 키우기’ 위한 구조개혁 과제 추진에 집중했습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함에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구조개혁 과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입법부 차원의 지원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연금·의료·노동·교육의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위기 극복은 우리 세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면서 이후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4+1 개혁과제를 실현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여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대 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매몰되어 일방적 증인 채택, 무차별적 동행명령장 발부를 반복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정쟁과 막말, 갑질로 국정감사장을 오염시켰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치공세와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질의로 국정감사를 이끌어 주신 108분의 의원님과 보좌진, 당 정책위 및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는 작업도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내지도부도 필요한 법을 제·개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남긴 과제를 잘 실천하고, 국회가 민생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 경 호

정책위의장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입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특히 민생과 경제, 안보 등 나라 안팎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개최되는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더욱 중차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헌법이 부여한 국감의 취지에 따라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했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 즈음에 개최되었던 만큼 국민의힘은 국감 과정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다”라는 기조 속에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함과 동시에 생생한 민심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행태와 허위사실 유포, 막말·호통 등 일체의 정쟁 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경계하는 등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정책 국감·미래 국감’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백서에는 국감 현장의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차별적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의 정책 질의와 대안 제시로 민생 국감·정책 국감·미래 국감을 이끌어 주신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그리고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그리고 사무처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한민국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 성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제1야당 민주당의 입법권한 남용 행태 규탄

- 도를 넘은 야당의 의혹제기 등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비판
- 당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국감을 악용하는 제1야당의 문제점 지적
- 문재인 정권 당시 하명수사 의혹, 후보 매수 등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의 문제점 지적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적극 노력

-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한 4대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 과제 추진에 국회가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을 환기
- 2년 연속 국민총소득(GNI) 및 1인당 국내총생산(GDP) 일본 추월 등 견고한 대외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성과에 대한 강조
- 국회 차원의 적극적 입법 지원 필요성 제기

■ 면책특권에 기댄 야당의 가짜뉴스 및 괴담 살포 문제점 지적

- 국회 제1야당의 가짜뉴스, 조작·왜곡 행위 및 소위 녹취록 공개를 통한 ‘끼워맞추기식’, ‘아니면말고식’ 폭로 행위 규탄
- 야당발 가짜뉴스에 끼워 맞춘 증인·참고인의 과거 행적 및 증언에 대한 낮은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지적, 문제점 제기

■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등 도발행위 및 야당의 안보 무관심 행태 지적

-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파병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및 여야 공동의 대응책 마련 필요성 인식
- 북한 파병에 따른 향후 대남 도발·위협 행위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응책 마련 요구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능력 향상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가치공유국과의 연대적 안보협력 강조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권한 남용 행태 규탄]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권한 수단화 정쟁화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 도를 넘은 야당의 대통령 및 행정부 공격 비판

- 민주당 소속 위원장의 파행적·편파적 운영위 운영 비판
- ‘아니면말고’식 민주당 소속 의원, 폭로 남발의 허위성 논리적 지적
 - 자료출처, 증거능력 모두 불분명하고 임의의 편집 짜깁기 의혹까지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의 허위성 지적 및 수사의뢰 필요성 강조
 -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다가 모두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의원들이 있음을 환기
- 마구잡이식 동행명령장 남발, 헌정 사상 최초의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 등 정권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집중
- 국회사무처까지 동원, 24.9.27 국회에서 이른바 ‘탄핵의밤’ (민주당 강득구 의원 주최) 행사 개최에 대관을 허용한 행태 지적
 - 행사주최자(안진걸 전 정권퇴진운동본부 소속,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들의 과거 행적 상기
 -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에 관한 내규’상 허가제한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허용한 문제점 지적
 - 집회와시위에관한법을 조항 및 국회사무처 전결위임규정 등 개선 필요

■ 당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국감을 악용하는 민주당 지적

-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 등 사법절차 진행을 온갖 꼼수로 막아서려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환기
 - 쪼개기 후원, 재판 로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사법처리의 불가피성 지적
- 여당을 무시한 채 진행된,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반헌법적 국회관계법안 강행 날치기 처리 문제점 지적
 - 상설특검법상 규칙개정을 통한 민주당의 특검후보 추천권한 독점, 국회증언감정법상 동행명령권 강화를 통한 다수당 민주당의 사법권 남용, 예산부수법안 폐지를 통한 국가 살림살이 가로막기 등 논리적 지적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적 입법지원책 마련]
4대개혁 과제 추진 및 지속적 경제안정 노력 동참

■ 문재인 정권의 구태 및 정권 차원에서 벌어진 의혹에 대한 분명한 수사 필요성 제기

-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과 연관된 증인 채택 요구를 민주당은 모두 거부
- 김정숙 전 영부인 관련 사건(특활비 사용내역 미공개, 옷값 관봉권 지출 의혹, 소방공무원 격려방문, 인도 타지마할 관광, 대기업 CEO 초청 비공개 오찬 등), 불법 숙박업 운영·특혜채용·보은인사·뇌물수수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아들·사위 등과 연관된 의혹 검증 필요성 환기
- 하명수사·후보 매수 의혹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등 국가통계조작사건 등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의 구태적 사건들의 문제점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불체포특권 관련 국회법 개정
- 문재인 정권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필요성 강조(계속)

■ 주요 내용 및 성과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흔들림없는 추진에 적극 노력

-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한 4대개혁 과제 추진에 국회가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을 강조
-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의료개혁,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연금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늘봄학교 시행을 통한 국가돌봄체계 구축 등 의료, 연금, 노동, 교육개혁 추진에 입법부 차원의 적극 협력 요청

■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과에 적극 동참 입장 견지

- 최근 세계국채지수 편입, 민간 주도 시장경제 복원에 따른 수출 증가, 역대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 달성,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착 등 경제성과 지적
- 대한민국의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한 지적
- 미국 대선 등 점증하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파병 등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 필요성 언급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국회 차원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의 성공적 활동 지원

[민주당의 가짜뉴스 및 괴담 살포 행위 규탄]

면책특권에 기댄 민주당의 거짓말·괴담 유포의 허위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 거짓말·가짜뉴스에 기댄 제1야당의 국정감사 진행 문제점 제기

-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잣대를 피해 보려는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의 한계 지적
-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오로지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민주당식 ‘헛발질’, ‘해프닝’성 문제제기 지적
 - 특정인의 주장만으로 점철된, 민주당에서 공개한 자료의 허구성 및 해당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진행
- ‘고교 무상교육 중단’ 거짓말 현수막 게재 등 국민의 민생마저도 정쟁화하려는 민주당의 상습적 행태 지적

■ 면책특권을 악용, 국회관계법을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행태 지적

- 현행 국회관계법령마저도 도외시한 채, 증인·참고인 일방적 채택 및 국민의힘 요구 증인 모두 불허하는 등 불공정성 규탄
 -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들 증언내용의 허구성 및 비논리성 지적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 입맛에 맞는 증인·참고인 소환 및 폭로식 증언 청취의 문제점 제기
- 심지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증인의 보호)을 악용하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증인의 동반 변호사가, 증언하는 증인과 질문하는 민주당 의원 사이를 오가며 귓속말을 주고받고, ‘증인이 증언을 하겠으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언내용을 변질·수정, 또는 위증을 유도하려는 듯한 사태도 발생
 - 변호사와 질문한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하는 지인관계 확인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국회관계법 개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권력형 비리 사건, 탄핵 심판 등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재판 촉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대북송금사건, 배우자(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국정 발목잡기용 탄핵 남발 문제점 지적 및 신속재판으로 국정 마비 최소화 필요성

■ 민생 안전 확보 위한 적극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제도 개선, 형사공탁제도 악용 문제 개선
 - 유족구조금 지급 형량 감경요소 제외 필요
- 극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위한 엄중한 법집행 필요
 - 강력범죄 재판의 온정주의 지적, 재소자 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 및 시설 점검 필요
- 마약,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사건 대응 방안 마련

■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장추천제 등 법원 활력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검토
- 헌법연구관 충원 및 제도 개선 등 법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
- 3인의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에 따른 헌재 기능 중단 우려에 대한 합의 촉구

■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유발 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이재명 대표 관련 불법 대북송금 수사 관련 거짓 증언 규명
- 특검법 및 검사탄핵 관련 민주당 제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 감사원의 공정성 독립성 훼손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 회의록 공개 문제 제기

[수사 및 재판]

권력형 비리 사건, 탄핵 심판 등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재판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대북송금 사건, 배우자(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신속한 재판 촉구

- ‘법왜곡죄’, ‘검사탄핵’, ‘판사선출제’ 등을 통한 검찰 및 사법부에 대한 지속적 압박 문제점 제기

■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국정 발목잡기용 탄핵 남발 문제점 지적 및 신속재판으로 국정 마비 최소화 필요성

- 지난해 2월 이후 민주당 11건의 검사 탄핵안 발의는 대표방탄 목적임을 분명히 함.
- 주요 정치인 재판에 대한 신속 판결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법왜곡죄, 표적수사금지법 등 입법권의 사적 남용 법안 철저 감시

■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부 교체 등 재판 영향 미치려는 행위 문제점 제기 지속

■ 증거와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와 재판 지속적으로 촉구

- 국민 알 권리 위한 1심 재판 생중계 필요성 제기

[민생 안전]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 주요 내용 및 성과

■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제도 개선, 형사공탁제도 악용 문제 개선

- 영월 여자친구 살인사건 유족구조금 정상참작 사례 지적 등
유족구조금 지급 형량 감경요소에서 제외 필요

■ 극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위한 엄중한 법집행 필요

- 강력범죄 재판의 온정주의 지적
- 재소자 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 및 시설 점검 필요

■ 마약,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사건 대응 방안 마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재판 온정주의 개선을 위한 사법부 내 인식 민 제도 개선 촉구

■ 마약 범죄 대응 위한 형사사법기관 연계 및 총력 대응 촉구

- 마약수사 전담 국가기관 설립 등 논의 필요

■ 딥페이크 및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유형 범죄 대응 방안 마련 및 예산 지원

■ 유족구조금, 공탁금 등 개선 방안 마련 및 사법부 내 논의 착수 촉구

■ 유족구조금 개선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 마약 및 딥페이크 수사 강화 위한 「형법」,
「성폭력처벌특례법」개정

[신속 재판]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 주요 내용 및 성과

■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장추천제 폐지, 고등부장승진제도 등 법원 활력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검토

■ 법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헌법연구관 총원 및 제도 개선, 보상시스템 개선 등

■ 3인의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법관,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등 다양한 인력 확충 방안 마련

■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정한 재판 실현

■ 장기미제 중점처리법관제도 등 재판 신속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 지원




■ 재정신청 대상을 고발인까지 확대하는 등 형사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 「형사소송법」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정쟁 대신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 눈높이 생활밀착형 국정감사 실천

주요 내용

■ 국감 기간 중 한차례의 파행을 제외하고는 민생국감에 집중, 정쟁 유발형 증인은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고 경제활력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 등 민생에 집중

- 거야의 정쟁적 성격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주도로 배달수수료 문제, 티메프 후속대책, 간편결제 수수료 개선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 정책적 제도 보강 및 개선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촉구
- 특히, 헬스장 먹튀, 선납형 진료비, 다크패턴으로 인한 청약거절의 어려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편, 전세대출보증의 무분별한 대위변제 문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 논의 필요성, 프랜차이즈 업체의 강제화된 납품대금 현금결제 개선 문제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제도 개선 주문

■ 무책임한 가짜뉴스 선동 등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 지적하며 책임소재 규명 강력 주장

-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정치권에 의해 지속되어 온 괴담은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국가발전에 저해요소가 됨.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괴담 백서 제작을 통해 괴담을 선동하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보훈행정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 및 주도적 역할 강조

- 독립기념관장 추천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권의 친일논쟁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한 제 역할론 지적 및 국가유공자단체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우려 및 적극적 역할 당부

[소상공인 보호]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합리적 법·제도개선 추진

주요 내용 및 성과

■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도 개선 촉구

-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입점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므로, 더 합리적이고 강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지적
- 특히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배달 몰아주기를 통해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는지 공정위의 조사 촉구

■ 거대온라인플랫폼의 다크패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제도개선 촉구

- SNS가 불법적인 광고, 짝퉁 유통의 온상이 됐으나 시정조치가 미흡한 상황. 특히 해외플랫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자상거래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해외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 촉구
- 플랫폼 거래에 있어서 반품 방해행위 등 다크패턴 규제 강화 필요성 강조, 특히 소비자 피해가 큰 대규모 쇼핑플랫폼부터 적극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역할 당부
- 티메프 사태 관련, 미정산 사태 이전에 인수자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한 내부공지 이메일을 확보해 금감원에 자금 흐름 관련 철저한 조사 당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플랫폼 중개거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입점업체 정산기한 단축 및 판매대금의 안전한 보관 등 제도개선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의 플랫폼 업체의 시장교란행위 차단
- 일감몰아주기, 다크패턴 등 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서민금융]

불법사금융 척결 등 맞춤형 금융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주요 내용 및 성과

■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감독 촉구

-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면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사금융 광고게시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감독과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요청
- 플랫폼에 있는 불법행태 등에 대한 탐지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감독하고 있으며, 불법채무 무효화 소송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확인함
- 저소득, 저신용자, 정부지원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
- 리딩방 등 각종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해당 사이트의 정화 노력은 미흡. 심지어는 라이선스도 없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질타

■ 은행 점포 폐쇄 등 금융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

- 서울시 각 구별 은행점포수 등을 비교하여 1인당 인구수 대비 은행점포수가 매우 적은 지역의 노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해 금융위원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

■ 간편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 등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와 공정위가 협업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은행대리업 도입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추진

[명예로운 보훈]

명예로운 보훈을 위한 촘촘한 보훈정책 제도개선 추진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 등 보훈부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 초급장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전반적인 전직지원금 확대 필요성 강조
- 6.25 및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적극적 노력 요청
- 70대 이상이 대부분인 국가유공자 연령대를 감안해 한의진료 및 보훈요양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촉구
- 보훈병원이 매년 보청기 구입비(재료비)로 국비 예산의 단 13%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87%는 수익으로 가져갔음을 밝혀내고, 보훈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의지 확인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후 주요 포털에 등재가 안되고 있는 실정, 포털사이트 등재 등 홍보 노력 주문
- 보훈병원 기자재 394대 중 217대의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등 노후화 심각성을 지적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등이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급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보훈부 가이드라인 제공 외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
- 독립기념행사 보조금 지원 시 형평성 개선 필요

■ 유공자단체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우려 및 보훈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된 내용으로 불필요한 친일 논란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확보 적극 추진

- 참전명예수당, 전직지원금 등 확대

[소비자 보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한 거래환경 제도개선 추진

■ 주요 내용 및 성과

■ 선납 후 장기계약 관계에서 소비자 피해 확대 지적

- 병원 선납 진료비, 헬스장 등 장기계약 거래관계에서 먹튀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 확대 및 업계 불황까지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오픈 전 사전 모객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 확대 등 명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소비자가 피해 주의보 발령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주문

■ 다크패턴, 소비자 청약 방해 행위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조사 촉구

- 아이돌 굿즈 판매샵에서 환불 요구시 사진을 첨부하게 하는 등 소비자 청약철회에 대한 방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등 공정위의 조치 요구
-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가입은 쉬우나, 해지나 환불은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존재함. 다크패턴 방지법 시행 이전이라도 자진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 역할 당부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점주가 지정된 장소에 가서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대금의 현금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 촉구
- 특히, 여전법 위반 등 가맹본사의 법 위반 여부 점검 촉구 및 사실상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대책 필요성 강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관련 분야(선납 후 장기계약 등) 표준약관 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다크패턴 자진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투자자 보호]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실효적인 법·제도개선 추진

■ 주요 내용 및 성과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 필요성 강조

-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도 있으므로 금투세 폐지를 위해 금융 당국의 특별한 관심 당부
- 금투세 시행 시 사모펀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최대수혜자라는 주장도 있는 바, 이런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

■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 국내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불공정 교란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요청, 특히 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명단공개필요성 강조
- 지배주주가 M&A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

■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 금융지주의 부당대출 등 여신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보고와 공시 의무 강화 뿐만 아니라 자금 회수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특히 외국계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국내이익의 해외 유출, 로열티 지급 등을 이유로 한 법인세 회피 등의 의도 등을 감안, 회사 형태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

■ 금융회사 지배구조, 외부감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제2부

상임위원 평가 및
후속조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국민께 설명드리는 국감

-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결손과 기준금리 인하, 경기 둔화와 내수진작 방안, 감세 정책의 적절성,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 체코 원전수주 관련 금융지원 약속 등의 이슈가 논의되었음
- 피감기관은 연이은 세수추계 오류와 경제전망 오차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망치가 어긋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예측 모델 점검 및 보완,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 특히, 여야 모두 정정보다는 정책에 집중하며 민생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언론의 호평을 받았음

■ 정쟁 아닌 민생에 집중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

- 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25년 동안 손대지 못한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고자 노력했고, 구간별 세율 조정과 공제율 확대 등 다양한 입법안을 발의
-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감 기간 중 이를 직접 보고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고, 당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사업을 완수하려는 정부에 지지를 표명
- 한은은 저출산·양극화 해소·교육·지방분권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이번 국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킴

■ 성실함과 전문성이 빛난 기재위 국감

- 자리를 자주 비운 다수당과 달리 여당 의원 모두 국감 기간 내내 늦은 밤까지 국감장을 지켰고, 정부 실책을 지적하면서도 호통과 막말, 무의미한 정쟁 등을 지양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음
- 또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세금 탈루 의혹을 언론에 제보.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억원의 R&D 세액 공제를 받는 유령 기업부설연구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까지 제시

[성장률 전망 오류]

예상치를 밑돈 3/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주요 내용 및 성과

■ 3분기 성장률 쇼크…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불가피

- 야, 정부와 한은이 경기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
 - 10.24 발표된 3분기 실질 GDP 증가율(속보치)이 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쳐 앞선 전망치 0.5%를 0.4%p 하회
 - 당초 한은 전망치인 2.4%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1.2% 깜짝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시경제 분석력에 의구심
 - * 올해 성장률 전망치 : 정부 2.6% / IMF 2.5% / 한국은행 2.4%
- 한은, 수출 액수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수출 물량은 줄고 있음.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일 수 있고 화학제품이나 반도체가 중국과의 경쟁으로 수량이 안 나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내년에도 이 흐름이 계속될지 분석 필요
- 기재부,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내수 부분은 예상대로 회복되는데 수출이 좋지 않았다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답변
- 야, 정부가 재정을 제대로 쓰지 않아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
 - 한은, 올해 성장률은 2.2~2.3%(잠재성장률 2%)로 전망. 경기침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자영업자와 건설업 등 어려운 부문에 대한 선별적 부양은 필요하다고 강조

■ 해마다 반복되는 한은의 경제전망 오차

- 여야, 한은의 경제전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근접해야지 계속 틀리는 건 문제
 - ‘21년부터 ‘23년까지 한은의 경제전망 오차율이 54%, 13%, 29% 등 크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경제 예측 모델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 실기(失期)론에 정면 반박한 한국은행

주요 내용 및 성과

■ 한은,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KDI는 상반기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3분기 성장률이 0.1%로 나오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두 달 먼저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 한은, 3분기 쇼크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2% 이상을 기록.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KDI 분석엔 동의 하지만, 경제 전체가 어려워졌다는 데는 부동의
-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환율, 부동산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낮췄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
- 미국처럼 빅컷(0.5%p 인하)을 하지 않은 이유는?
- 한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금리를 크게 낮추고 싶지만, 빅컷이 부동산 시장과 기대심리에 영향을 주어 금융시장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 경기만 보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언급

■ 한은, 내수 진작 위한 골든타임 놓쳤다는 비판에 ‘1년 지나 평가해달라’

- 한번의 금리 인하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우며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 지난 8월에는 주택 관련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거시 안정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필요
- 지난 2년간 다른 나라보다 금리를 적게 올리고도 물가를 2%대로 안정시킨 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
- 향후 금리 결정은 내년 경제전망, 美 대선 결과, 정부의 거시 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

[세수 결손 대응]

세수 부족,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해 민생사업 차질없이 추진

주요 내용 및 성과

■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당초 예상 대비 29.6조원(오차율 8.1%) 부족

- 야, 기재부가 거시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해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비판
- 2023년 예산안 편성시 주요 경제지표 정부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 경제성장률 -1.1%, 수출 증가율 -18.5%, 수입증가율 -11.1%, 소비자물가상승률 -0.6% 등에서 오차 발생
- 기재부, ‘22년 4분기부터 수출과 기업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는 모든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수준이라고 답변
- 세수 부족 원인은 법인세. 당초 77.7조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으나 재추계를 통해 18.6% 줄어든 63.2조원으로 하향 조정.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44.2% 급락하는 등 예상보다 크게 저조
- 여, 세수 예측 실패는 전 세계적 현상
- 코로나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감세정책 때문이 아닌 법인세와 재산과세에서의 오차가 크게 작용한 것

■ 기재부 ‘세수결손 재정 대응 방안 보고’에 여야 공방

- 기재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금년도 세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민생·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 국세 부족분은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14~16조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6.5조원), 통상적 불용(7~9조원)으로 대응 계획
- 여, 정부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기금을 활용한 것은 ‘최선의 결단’ 지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 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
- 세수 불확실성을 감안해 세외수입 확보 노력도 필요. 연말에 세수가 더 들어오면 교부금 추가 집행, 불용액 축소 등 병행
- 야, 정부가 세수결손을 방치하고 재원 돌려막기를 한다며 재정청문회 요구
- 대규모 세수 결손 대책은 국회 심사를 받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주장

[상속세제 개편]

상속세 개편, 부자 감세 아닌 낮은 세제 합리화

주요 내용 및 성과

■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상속세제 개편

- 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사실상 ‘부자감세’ 주장
- 기재부, 상속증여세는 중산층 세 부담도 커지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여, 세율과 과표는 2000년 이후, 공제제도는 97년부터 현재까지 변화 없이 운영 중. 그 사이 부동산 가격과 물가 등이 많이 올랐고 과세대상과 세 부담도 점차 확대되어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시점
 - 과세비율/결정세율 : (2005년) 0.8% / 7천억원→(2023년)6.8% / 12.3조원
 - 5년 뒤에는 10명 중 1명이 상속세 대상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평가(20%)까지 감안하면 60%로 OECD 국가 중 1위로 과도한 수준(*OECD 평균 27.1%). 상속세 실효세율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

■ 향후 유산취득세로 전환 예정

- 야, 내년 상반기 정부의 유산취득세 법안 제출 시 공제제도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금년엔 상속세 개편을 하지 말고 내년에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
- 기재부, 상속세 관련 개정 수요와 의견들이 많아 일단 시급하다고 판단해 세법개정안을 올해 국회 제출. 유산취득세는 과세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올해 상속세 공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시면 올해 세법 개정 이후 유산취득세 논의에 반영해 향후 논의가 더 용이해질 것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

- 세율 조정 : 정부안/(국)권성동·염태영 의원안
- 공제금액 상향 : 정부안/(국)송언석·권성동·김은혜·최은석 의원안
※(민)안도걸·임광현 의원안 발의

[체코 원전 수주]

한국 원전산업 수출의 돌파구, 체코 원전 수주

주요 내용 및 성과

■ 저가 수주 등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적극 반박

- 야, 수은이 대통령 치적을 위해 특혜성 금융지원을 약속하고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리하게 금융지원을 하려 한다고 주장
 - 재무적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와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 수은, 체코 정부의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으며 관심서한은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상 발급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고 금융지원 약속을 의미한 게 아니라고 반박
 - 관심서한의 ‘most favorable financing terms’는 강한 관심의 표현이며, OECD에서 제시하는 수출신용협약을 따라야 해 저금리나 최장기간의 우대조건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의혹 부인
 - 역마진 의혹에 대해선, 자금 조달비용이 일정 마진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되고 수출신용협약 상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마진이 적어질 순 있어도 역마진이 날 순 없다고 강조




■ 정부의 원전 수출 성과 적극적 홍보 필요

- 여, 정부의 원전 수출 성과가 정치적으로 폄하된 것에 안타까움 표명
 - 탈원전 외쳤던 문재인 정부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동일 내용의 관심서한을 5년간 42건이나 보냈으며 문 대통령 역시 ‘리스크 대박 세일즈’를 하러 다녔냐고 비판
 - 두코바니 원전 수주과정에서 수은이 체코에 보낸 관심서한은 통상적, 관례적 내용으로 올해 4월 체코 관심서한에는 ‘이 서한은 자금조달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 야당의 문제 제기 자체가 무리수라고 반격
- 수은, 사우디나 체코는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로 관심서한 발송이 덤핑이나 특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



제2부

상임위원 평가 및
후속조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윤석열정부 3년차이자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수적인 열세에도 불과하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 되는 민생국감에 방점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중·고등학교 기숙사 학교폭력 심의 연속 증가에 따른 대책방안과 학교폭력전담관 법적 근거 검토, ‘AI 디지털 교과서’ 속도 조절 필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위한 권리보호 방안, 젊은 교사의 죽음과 3D 프린터 사용의 상관관계에 따른 순직 인정 촉구,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국감에 주력
- 대학의 자율성 강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적자인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 지원, 2025년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국립의대 현장을 점검하며 차질 없는 준비를 요청
- 국가교육위원회 인사의 부적절한 정치행위 질타, 웅동학원 사회환원 한다고 하더니 조국 외삼촌이 ‘이사’ 되는 모순, 야당 대표의 헬기 이송특혜 등 국민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야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강하게 비판

[새로운 교육환경 만들기]

서로 존중하는 교실,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

주요 내용 및 성과

■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해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전국적으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사례를 모으고 포상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3D 프린터 사용으로 희소암 걸려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촉구

■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교육 필요

- 서울시교육청 ‘2020 지속가능발전교육’ 자료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모두의 화장실’, ‘채식우월주의’, ‘친북한체제 선전’ 등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 촉구

■ 변화하는 미래사회 속에서 스스로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학교 만들기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속도 조절 필요
-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 디지털 기기 과몰입에 대한 걱정 등이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업하는 교사들과 더욱 밀접한 소통을 주문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AI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 개인정보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와 지역 살리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한계 대학의 구조개혁을 지원해서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환경 구축

■ 주요 내용 및 성과

■ 대학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자율성 보장과 구조개혁 지원

-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 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예외적으로 인정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의 통폐합 등 지원 필요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

- 2025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현장 교육환경 세심하게 준비 당부
-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투자하는 ‘라이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 강화 주문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입법 추진

■ 2025년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예산안 차질없이 마련

[야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야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질타

■ 주요 내용 및 성과

■ 교육 대계를 위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인사의 부적절한 활동을 비판

-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정권 퇴진’ 관련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정치 활동을 함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미이행

- 오히려 조국 대표 모친인 박모 이사장 친동생을 추가로 이사에 임명하고, 제22대 총선 직전에는 마치 정부와 국·공립화를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국민을 기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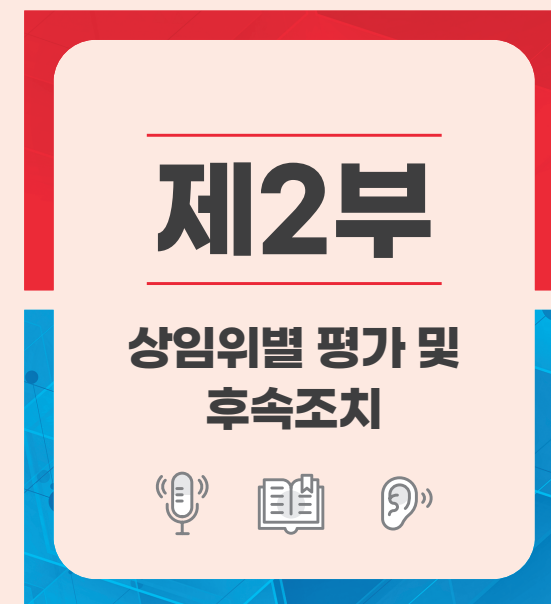
■ 야당(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은 엄연한 특혜!

- 단순 보호자의 희망으로 전원을 요청한 것은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데 신 교수의 거짓진술을 알고도 서울대병원이 솜방망이 처벌인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타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관련 고발 검토

■ 웅동학원 사회 환원 등을 점검하고 내년 국정감사에서도 질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 인터넷 분야에서 대안 제시

- 가계에 부담인 휴대폰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촉구
- LTE가 5G 보다 요금이 비싼 경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
- 스팸문자가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키즈폰에는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도록 요청하여 이동통신사의 동의를 이끌어 냄

■ 차세대 먹거리인 AI 발전전략을 모색

- AI 반도체·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역설
 - * AI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기간 측정기 설치를 제안
- AI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 청년, 여성 등 이공계 연구자 육성의 중요성을 피력

- 청년 연구자가 줄어들고 이공계 인재가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서, 이공계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 여·야 모두 공감
- 여성 연구자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 표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

-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국회 민주당 몫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의 기능 마비 지적
-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 피해 상황 강조.

■ MBC 등 편파방송 문제 집중 지적

- MBC의 편파방송 사례를 언급하며, MBC는 진영을 위한 방송이라고 비판

[통신 및 인터넷 환경 개선]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스팸문자 등 인터넷 이용여건 개선

주요 내용 및 성과

■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속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촉구

-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존의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유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강조
- 저소득층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 유도를 당부

■ 이동통신사의 불합리한 통신요금 체계 개선 요구

- LTE가 5G 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요금이 더 비싼 비정상적인 경우를 지적
- 선택약정 할인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24개월 약정을 한 경우가 12개월 약정을 한 경우 보다 할인 반환금이 큰 문제를 부각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스팸문자, 배달앱에도 관심

- 음란과 도박 등 불법스팸 문자가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키즈폰에는 사용이력이 없는 번호를 우선 배정할 것을 요청하고 이동통신사도 이에 동의
- 번호변작기를 활용한 스팸 시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
-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해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연내를 목표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LTE 요금제 개선, 키즈폰에 대한 미사용 번호 우선 배정 등 금번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동통신사의 조치상황을 점검

[인공지능 (AI) 육성]

AI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확대에 국가역량 집중

주요 내용 및 성과

■ AI 발전전략 제시

- AI 산업의 경쟁구도에서 우리나라가 탈락하지 않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아온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 투자 ▲ AI 원천기술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제조 AI를 축매로 한 글로벌 테크와의 화학적 결합 ▲ 데이터 개방 및 제공 등 언급

■ AI기본법 제정 및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

- 단기간에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예산의 확실한 증액을 주문
- AI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그 제도적 기반인 AI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

■ 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를 위한 신뢰성 제고방안 당부

- 국내에선 전자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AI데이터센터를 유해시설로 인식하는 관계로 투자가 지연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해외사례 연구·홍보와 함께 실시간 전자파 측정기 설치를 제안
- 과기정통부도 현 시범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연내를 목표로 AI기본법 제정 추진

■ 25년도 AI 예산의 최대한 확보에 노력 * 정부안 : 1.8조원

■ AI데이터센터의 신뢰성 제고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

[연구개발 (R&D) 역량 확충]

이공계 인재 육성 및 R&D 예산 투자

주요 내용 및 성과

■ 청년 연구자 감소 등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성에 여·야 공감

- 청년 연구자 감소 (의대 쏠림, 자발적 퇴직) 및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증가에 대한 대책^{제)}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
- 주)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 이공계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25년도 정부안 : 600억원)

■ 여성 연구자 육성 등 이공계 인재에 대한 관심 표명

- 전체 과학기술 정규인력의 여성 비율은 19%이고, 대형연구 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10%도 안되고 있어 여성 연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
- 또한 출연연 여성연구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문제의 해결을 요구

■ 야당의 R&D 예산 삭감 비판에 적극 대응

- 민주당 등 야당에서 지난해 이루어진 R&D 예산 감액이 졸속적이며 절차를 어겼다고 비판하였으나
- ⇒ 우리당과 정부는 AI, 바이오, 양자 등 선도적·혁신적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구조 조정 차원이었으며, 내년 예산은 증액되었음을 부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연내를 목표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 추진

■ 25년도 R&D 예산의 최대한 확보에 노력 * 정부안 : 29.7조원

■ 기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당·정 협력

[글로벌 빅테크 반독점 행태 개선 노력]

방송통신위원회 조속한 정상화와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적 행태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의결이 진행되지 않는 점 등 방통위의 기능 마비 거론하며, 민생과제 지연 및 국민 피해 현황 집중 질의

- 방통위는 ▲ 연말 140여개 방송국에 대한 방송 재허가 심사 ▲ 앱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앱마켓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 ▲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수신료 면제 등이 지연되어 국민 피해가 발생 중임을 언급

■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에서의 반독점적 행태 집중 추궁.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

- 구글코리아 조세회피 의혹, 매출·과세의 불투명성 글로벌 빅테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및 높은 수수료 등 국내 개발자에 대한 갑질 행태 지적 애플 인앱결제 30% 수수료는 반독점 위반이며 적정 수수료 12.3% 제시 구글 프리미엄 구독료 최근 5년간 71% 인상돼 주요국과 역차별 문제 제기 등 민생 현안 집중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진행중

■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지속 및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 의결을 위한 노력

[편파·허위 방송 근절]

편파·허위 조작 방송 근절과 국민 개인정보유출 문제 집중 거론

주요 내용 및 성과

■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야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주장에 대해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불법사건」으로 프레임 전환

- 야당, 방심위원장이 친인척,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고, 방심위 노조를 압수수색 탄압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허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과징금 의결한 사안
- 이에 우리 당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민원인에 대해 무분별한 취재를 한 방심위 노조와 언론사의 불법행위 집중 부각
- 질의를 통해 해당 기자의 “민원인의 IP주소 등 입수한 자료 토대로 했다.”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내, 방심위 노조가 개인정보 유출자라는 핵심 증거 확보
*IP주소는 비공개 개인정보임

■ 야당의 KBS 편파방송 주장에 MBC 편파방송으로 강력 대응

- MBC 뉴스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로 언급하지 않고 ‘이후보’로 지칭하는 등 축소보도한 점, 지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편집된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검증 없이 인용 방송한 점 북한 열병식을 ‘밤축제’로 우호적 표현한 점 등 편파방송 사례 집중 거론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방심위의 민원인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 진행




- 방심위 차원 내부 유출 경위 조사 중

■ 방통위의 신임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전임 방문진 이사의 효력 정지 가처분 건 소송 진행 중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관한 논의 및 정부의 대책 점검

- 우리당 외통위원,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 제출
- 정부전략 및 대응에 대한 종합 점검
- 우리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 북한의 핵야욕, 북러조약의 안보적 위험성, 북한 파병의 위법성 등 지적하며 효과적으로 대응

■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외교정책 변화에 대한 정부 대책 점검과 한미간 주요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외교, 통상, 동맹정책 예측 및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정부 대책 점검
- 한미원자력협정 재논의 필요성 제기
- 미국 실행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및 통상 압박 가중될 경우,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노력 확인

■ 우리 정부 주력 외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책대안 제시

- ODA 확대에 따른 기존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및 대안 제시
- 중동지역 파병된 우리 평화유지군 및 교민 안전대책 점검
-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다자적인 광물 파트너십에 주력하여 세계적 공급망 네트워킹
-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에 대한 점검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촉구

■ <8.15 통일 독트린> 의미·효과 부각 및 ‘평화적 두 국가론’ 부적절성 피력

-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방향성과 이를 위한 종합적 전략으로써 <8.15 통일 독트린> 의미를 부각하는 한편 ‘7대 추진방향’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
- 통일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에서 초당적 통일논의 필요성 강조
- 일각에서 제기된 ‘평화적 두 국가론’의 문제성 발언에 대해 ▲반헌법적 ▲반통일적 ▲반민족적 ▲가짜평화라는 논리로 대응

■ 북한인권재단 출범, 대북전단 등을 통한 북한인권개선 노력 강조

- 북한인권재단의 신속한 이사 추천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필요성 언급
- 전단살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존중 필요성 및 대북전단의 목적·효과 등 확인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철수 촉구 및 정부 대책 점검

주요 내용 및 성과

■ 10. 18, 국정원, 북한이 러시아에 1,500명 군사 파병 및 추후 1만2천여명 파병이 예상됨을 발표함에 따른 외통위 차원이 상황 점검

- 북한 파병의 의도 및 주변국 반응관련 논의
- 한미일 뿐 아니라 중국, NATO, UN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 방안 모색 및 대책 촉구
- NSC 상황 및 외교부 등 관계 부처 대응 현황 점검

■ 국민의힘 단독으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 상정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 위반으로 파병 중지 및 즉각적, 무조건적 철수 촉구
- 확장억제 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조기정보 파악 시스템 강화
- MSMT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 등 국제사회의 협력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외통위 차원의 조속한 결의안 채택 추진

북핵억지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방안 모색

주요 내용 및 성과

■ 2015년 한미원자력 협정의 문제점 지적

- 특히,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우라늄 농축을 제한한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
- 30년 전부터 재처리 권리 등을 허가받아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을 지닌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

■ 최근 한반도 정세로 인한 북핵억지 강화 필요성

- 최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7차 핵실험 가능성 고조
- 우리 국민의 70%이상이 핵무장지지 등 워싱턴 선언에 따른 확장억제도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 불식에 한계 지적

■ 주미대사, “국내적으로 잠재적 핵능력,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정세가 변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만 원자력 협력 분야는 미국과 좀더 협의하고 진전해야 할 과제”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향후 미 실행정부와의 한미원자력협상 관련 재논의 검토

- 개정이 아니더라도 협정의 틀 내에서 가능한 방안 모색

미 대선 관련, 우리 정부의 외교 통상 정책 점검

주요 내용 및 성과

■ 미 대선 관련 우리 정부 대응 점검

- 해리스 후보, 통상에서의 인권, 노동, 기후변화 이슈에 초점, 트럼프 후보의 경우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방침 두는 등 향후 미국 신 정부의 대외정책 관련 우리 정부 대책 점검
- 특히 트럼프 후보 당선시 예상되는 경제 통상 관련 문제들에 대한 부처 대응 현황 점검
- 민간협력 강화, 정보 수집·분석 및 관련 부처 공동 대응 주문
- IRA 사례 반추, 미 의회 외교 강화 및 특히 각 지역의 총영사관에서의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접촉 강화 요구
-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건설과 관련한 전미노조와의 갈등 상황 등에 대한 관계부처 차원의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외교부

- 민관협력 강화 예정, 경제 안보 측면에서 대통령실과 산업자원비 및 외교부 한팀으로 정보수집, 네트워킹, 모니터링 협력 지속
- 특히 외교부 - 총영사관 - 주미대사관 삼위일체로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력
- 조지아주 관련 상황 파악 후 조치 예정

재외동포청 민원 서비스 현황 점검 및 개선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일본 동포, 중국 조선족 등 우리 동포의 국내 은행 이용 등 동포 서비스 개선 필요성 지적**
 - 재외 국민들이 민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지속 제기, 특히 한국 휴대전화 없으면 디지털 서비스 어렵고 민원 해결 요원한 상황
 - 이에 재외동포청에서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중
 - 또한 해외 체류 국민들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운영 중이며 동포사회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재외동포청

-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사업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 특히 관련 예산 확충 지원

ODA 예산, 이행시스템 분절화 등 종합 점검 및 대안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2024년 우리나라의 총 46개 기관이 94개국 대상 1,916개 ODA 사업 추진 중이나 부처별 산발적인 ODA추진, 1991년 KOICA설립 이전보다 악화, 이러한 분절화로 인한 집행비용 상승, 수원국 행정비용 증가, 원조 효과성 저하 등 문제 지적**
 - OECD DAC 회원국 가입 15년차 ODA 규모 6조원 시대인 올해,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의 부재, ▲ 원조의 분절화, ▲ 사후관리 부족문제 심각. 지난 2년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듯이 ODA 거버넌스를 국무조정실이 아닌 외교부-KOICA 중심으로 수행해야할 필요성 강조
 - 우리정부의 원조 분절화 3대 문제점, 즉 유무상 분절화, 무상간 분절화, 수원국 원조창구 분절화 문제 제기
 - 수출입은행에서 단독 시행하고 있는 유상 ODA와 달리, 무상 ODA는 45개 기관에서 시행하며 분절화로 인한 집행비용 상승, 수원국 행정비용 증가, 원조 효과성 저하 초래. 부처간 예산 나누기 식으로 접근하고 국무조정실의 연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하다 보니 40개 이상의 기관이 전체 무상 ODA 예산의 15% 이상을 집행
 - 부처별 산발적 ODA 추진의 고착화, 1991년 KOICA 설치 이전과 다를바 없어. 7개 해외봉사단을 단일 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WFK)로 통합한 ODA통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점차적 ODA 통합추진 필요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외교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면밀한 검토 후 대책 마련

野, 비밀문서 공개 관련 부처 보안문서 관리 점검

주요 내용 및 성과

■ 조국혁신당 김준형의원, 외교부 ‘3급 비밀’ 문서 공개 관련 야당의 무리한 정보공개 및 언론 플레이 문제점 지적

- 10.7, 작년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외교부 ‘3급 비밀’ 문서가 외통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됨에 따른 문제제기
- 관련 문서는 171개 전체 공관으로 송출된 건으로 국정원 전보 등도 암호화 되어 나가기 때문에 적국이나 범죄단체에서 악용할 경우 심각한 안보위기 초래 가능성 지적
- 정부 흠집내기를 위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 고발 및 부처의 보안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 요구
- 생산부처에서 보존기간을 명시한 문서의 비공개 원칙 준수 재확인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우리당 외통위원 공동성명 발표

-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돼 있다....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는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라고 지적
- “김 의원은 해당 자료는 원본의 보호 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이미 보호 기간이 종료된 문서임을 내세웠지만, 보안규정상 보호 기간이 지나더라도 담당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밀 유지 및 공개여부 등이 결정된다....이 문서가 진본이라면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교 암호 체계 등 정보 보안망을 노출시킨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

■ 외교부

- 문서 유출 경위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8.15 통일 독트린 공감대 형성과 북한인권 개선노력 경주

주요 내용 및 성과

■ <8.15 통일 독트린> 의미·효과 부각 및 ‘평화적 두 국가론’ 부적절성 피력

-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방향성과 이를 위한 종합적 전략으로써 <8.15 통일 독트린> 의미를 부각하는 한편 ‘7대 추진방향’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
- 통일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에서 초당적 통일논의 필요성 강조
- 일각에서 제기된 ‘평화적 두 국가론’의 문제성 발언에 대해 ▲ 반헌법적 ▲ 반통일적 ▲ 반민족적 ▲ 가짜평화라는 논리로 대응

■ 북한인권재단 출범, 대북전단 등을 통한 북한인권개선 노력 강조

- 북한인권재단의 신속한 이사 추천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필요성 언급
- 전단살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존중 필요성 및 대북전단의 목적·효과 등 확인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 출범, 대북전단 등을 통한 북한인권개선 노력

주요 내용 및 성과

■ 북한인권재단 출범 시급성 강조

-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일부 승소에 따라 국회 사무총장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강조
- 북한인권재단의 신속한 이사 추천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필요성 언급

■ 대북전단의 목적·효과 등 확인 및 대북전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강조

- 대북전단 단체(일반증인) 등을 통해, 타이레놀·비타민·달러 등이 포함된 전단은 김정은 정권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북한주민들에게 도움이 됨을 어필
-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대북전단은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제고 등에 유익함을 강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 민주당에 재단 이사 추천 재요청
 - 김기웅 의원 등이 발의('24.7.30.)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신속 추진
- *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까지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 임명

■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 권영세 의원이 발의('24.6.3.)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위헌조항 삭제 추진
-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처벌조항 전부 삭제
- 다만, 야당이 제기한 사전신고제 등 도입은 신중 입장 유지, 상황관리 노력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성 및 방안 제시

- 군 병력자원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군 간부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군 초급·중견 간부 처우와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방안을 제시함. 군 간부 장기복무제도, 부서관,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업 안정성 향상과 함께 경제적 처우개선과 부족한 관사 지원 대책, 단일 사관학교 도입 등 방안을 제시

■ 문재인 정부가 졸속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점 지적

-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해 군 당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능화를 선언한 문제점을 밝힘
-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한강하구 해도를 넘겨준 사실을 지적하고 북한의 정교화된 침투 전술 변화 등에도 대비할 필요성을 제시
- 2020년 GP 총격, 2022년 12월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은 이미 17차례 걸친 도발로 군사합의 위반을 넘어 9·19 군사합의를 사문화시켜옴

■ 전장환경의 시대 변화를 고려한 과학화된 군 체계 개선을 제시

- 현재 군 병역자원 감소 문제 등에 직면했음에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여전히 군 경계작전에 다수 병력을 투입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70여년간 유지해온 경계작전 개념을 전면 전환하는 군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을 제안함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국민 우려’ 제기 및 ‘즉각 철수’ 촉구

-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함
-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전 경험 쌓기 등으로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에 단계적 대응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한 군 장병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군 병력자원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군 간부의 이탈 방지를 위해 군 초급·중견 간부 처우와 주거환경 개선 등의 대안 필요

- 군 장병의 사회와의 경제적 보상 격차를 개선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개선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군 장병 대상별 맞춤형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병역이행에 대한 합당한 경제적 보상
- 장병의 작전과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
- 군 복무 중 성취달성 프로그램 확대 및 직업 안정성을 제고
- 군인이 군 복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및 지원책 강화

[문재인 정부 실정]

줄속 처리된 문재인 정부 9.19 군사합의 문제점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의 부실·줄속 처리 문제점 지적

-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해 군 당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능화를 선언한 문제점을 밝힘
-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한강하구 해도를 넘겨줘 북한의 침투 전술의 정교화 우려 등을 지적함
-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우리 군의 대북 정찰감시 능력, 군 작전 및 훈련 등이 제약을 받게되어 막대한 안보 불안을 야기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北 오물풍선 살포, 정찰위성 발사, 미사일 도발 등 北의 복합도발에 대한 軍의 대응태세 점검

-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해 군 당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능화를 선언한 문제점을 지속해서 환기하고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점검
- 문재인 정부의 줄속 평화쇼가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위협으로 다가온 것임을 지적하고 야당의 남남갈등 시도에 차분하게 대응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야당의 상임위 일방 운영 및 정쟁 공세 맞서며 정책국감 전개

주요 내용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 및 동행명령 강행 처리

- 민주당 등 야3당 단독으로 관저 인테리어 업체 동행명령 의결(10.7)
 - 야당, 국회의 동행명령 집행 과정을 따라가(업체 사무실) 보여주기 쇼
- 문다혜·이재명 의혹 검증 관련 증인 채택 거절
 - 10월 이태원 추모기간에 이태원 현장에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사회적 물의 일으킨 문다혜씨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거절
 -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공문 무단 유출 의혹 ▲코나아이 선수금 불법운영 의혹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진술 유도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수사 의혹 관련 증인들은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음

행안위원장의 편파적 불공정 의사진행

-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안 일방 의결(10.10)
 -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특정인들만 동행명령 강행 처리
- 국감위원보다 3배이상 많은 발언시간 사용한 위원장 중의 한명으로 거론(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 中)
-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30초이내 답변 요구하며 민주당 출신 단체장과는 다른 불공정한 답변시간 배분(10.15)
 - 민주당 의원, 발언시간 요청하는 오시장에게 “깡죽댄다” 막말

야당의 정치공세 대응하며 정책국감 노력

- 문다혜 음주운전(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제기) 및 불법 숙박영업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 제공 의혹, 기본소득 재원 문제, 권력형 꿈수 헬기 전원 문제 등을 제기
- 지방인구소멸 대응, 대구경북 등의 행정체계 개편, 시민 안전문제(공유킵보드 등 pm관리, 전기차 충전소 화재, 북한 오물풍선 및 소음방송 피해),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정부의 보다 신속하고 세심한 대책 주문

[지역소멸대응 대책]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역균형 발전

주요 내용 및 성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 저출산, 수도권 집중, 저성장 기조 등 지속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도래
- 수도권과 경쟁하는 다극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추진
 - 대구-경북 통합, 부산-경남 통합, 충청권, 호남권 등에서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논의 진행 중
- 대구-경북 통합 추진
 -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대구시와 통합 합의(24. 10.21) → 2026년 7월 목표
 - 향후 시·도의회 동의, 정부 심의, 특별법 제정 (25. 상반기) 필요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
 - 남부권의 혁신거점도시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 특례 부여 등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 조성
 - 특별법에 대한 부처 협의 및 정부안 마련 : 추진체계(총리 소속 위원회), 기반 조성(물류·금융 특구 등), 환경 조성(교육, 외국인 특례 등), 사업 특례(환경영향 평가 이양 등)

지역의 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 정비 등 조치

-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
-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

부산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 제정

- 특별법 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계류 중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명문화 문제점 제기

주요 내용 및 성과

■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명문화에 대한 문제점 제기

-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대규모 국비의 신중 검토 필요
- 특정업체의 이익 극대화 및 상품권 부정유통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소비촉진 효과 불확실, 물가상승 등 부작용 등의 문제점 제기와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예산으로의 수행 강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검찰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 의혹 직접 수사

- 이재명 지사 시절 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에 이 지사 측근이 근무하는 등 특혜 논란 이슈화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코나아이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수사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하였으나, 검찰은 정산금 등 자금 운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수사 중

■ 지역화폐법 재발의시 대응

- 9월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 되었으나,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재발의 예고

[정율성 공원 문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재조정 필요성 제기

주요 내용 및 성과

■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의 문제점 제기

- 북 앞잡이가 돼 남침한 적국에 기여한 사람을 광주에서 추모하는 맞는지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정율성 이름 지우고 (가칭)한중문화교류재단 같은 한중 협력사업 공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 정율성은 조선노동당 인민군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찬양하는 공연을 200차례 하고, 조선인민군 행진곡 30여곡을 작곡. 또한 1950년 중국인민지원군이 지원한 6.25 전쟁에 적국편에서 참전한 경력자
 - 2018년 국가보훈처의 정율성 서훈 추진 부결 전까지는 중공군이자 북한인민군으로서 정율성의 만행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음
-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시정보다, 적대세력을 찬양한 사람을 기념 하는데 40여억원 예산을 지출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질의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가족들의 의견 및 면담 요구 무시하는 강기정 시장의 일방행정 불소통 문제 지적
 -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 어머니와 전몰군인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이 정율성공원 설립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강시장 면담 요구(10.22 광주시청 국감장 앞)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사업 재조정 지속 요구

-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목적이 한중 교류라면, 한중교류 목적에 맞는 사업공간으로 재조정할 것을 계속 요구

[불법 숙박 행위 근절 대책]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주요 내용 및 성과

■ 불법 숙박업 운영 사례 지속 발생 지적

- ‘주택’으로 원칙상 숙박업을 할 수 없고, 숙박업을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야 하고 국세청은 농어촌에서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지자체로부터 농어촌 민박업 신고필증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으나 공유플랫폼 등을 통한 숙박 사례 다수 발생
- 불법 숙박업으로 인한 방문객 안전문제· 탈세, 사고시 피해보상의 문제점 발생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5년간 697건 단속
- 주택임대사업자가 무등록 숙박업 하게 되면 똑같이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숙박업 등록 요건

구분	가능지역 및 요건	건축물 용도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휴양펜션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및 자연취락지구	숙박시설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상업지역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지역 / 소유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의 불법 숙박업에 대한 문제 제기 (문다혜 문제)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개선방안

- 미등록 숙박업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 개정 등 필요
- 공유숙박플랫폼 가입 요건 강화 : 정상적인 영업 신고 시 가입 허용
- 탈세 방지 위한 기관 협조체계 활성화 : 지자체, 경찰청과 국세청, 정보 공유

[여론조사 제도 개선]
민심왜곡 여론조사 개선

주요 내용 및 성과

■ 여론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

- 정치 현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 제기
- 여론조사“꽃”의 잘못된 여론조사 발표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음, 위법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필요성 대두
- 미공표용 여론조사도 선거에 악용 할 수 있기에 공표용 여론조사와 같이 신고 의무화 추진 요구 증대

■ 선거결과와 다른 왜곡된 김어준 “꽃”의 여론조사와 명태균의 여론조사 이슈화로 여론조사 문제점에 따른 제도개선 및 대책 적극 요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추진(박정훈 의원 2024. 10.17 대표발의)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정치 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강화
-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을 영구히 취소시킴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조사표본의 무작위성을 확보하도록 함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안)

-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 가상번호를 통한 웹조사 도입
- 선거여론조사 일정 사전 공개 금지, 조사기관 등급제 도입 등

[재보선 원인제공시 선거보조금 환수 조치 강화]
원인제공 개인 및 정당에 선거보조금 환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성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거보조금 미납자 출마 문제점 지적

-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77명(2002년 부터 현재까지)에 달함
 - 특히,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까지 한 상황에서 반환금액 총 35억3749만원 중 지난 1월까지 10%인 3억8132만원만 반환한 광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재출마 선언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따른 민주당의 선거비용반환 비용 발생 가능성 문제 제기
- 선관위는 선거 보전금 반납 대상자에게 반납을 안내하고 30일 이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넘겨 재산 조회, 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지적. 압류 조치 전 재산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이를 제대로 강제 징수하거나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법의 맹점 개선 강화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광노현 방지법 발의 예정

- 조은희 의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경우, 기탁금과 선거보전금 지급유예 의견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2024.11.15.)
- 나경원 의원, 선거 보전금을 국가에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공직 선거 출마를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 예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국민적 관심과 공분을 샀던 체육계의 문제점 지적 및 정상화 방안 강구

- 대한체육회·대한축구협회 등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임기 연장, 편법 운영 등 행태에 대한 지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
- 자율을 빙자한 방만한 예산 운영, 체육인들을 위한 의무 방기를 발굴하고 감사와 형사 처벌을 요청
- 스포츠윤리센터의 정상화를 통해 체육계 스스로가 자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지원

■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유산의 보전, 콘텐츠산업의 지속 발전방안 제시

-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교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주문
- A.I 딥페이크, 패스트 무비, 안무저작권 등 새롭게 제기되는 저작권 이슈 대응 및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해외 문화유산 환수, 박물관 등의 저장능력 문제 지적, 근대문화유산 지정, 중국 등의 문화공정 대응 등 문제점 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제시

■ 야당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에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야간 합의 기반 하에 파행 없이 국감 운영

- K-TV 프로그램, 사리구 반환, 전통예술인 간담회 등 근거 없는 대통령실 비난과 의혹 제기에 대응, 기존 사례 제시 등을 활용 적절하게 대응
-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도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진영 논의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품격있게 대응
- 전임 대통령의 영부인의 해외관광 및 물품 수수의혹, 그 자녀의 숙박업 불법운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비판 및 진상규명 요구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대한체육회·대한축구협회 등 체육단체 운영상의 문제점, 비위 등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대한체육회의 운영 난맥상 지적 및 비정상적 운영 행태 공개

- 대한체육회장의 독단적 체육회 운영,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 지적하고 개선 요구
- 대한체육회장의 개인적 비리 정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정상적 운영을 위한 대안 제시 요구

■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부적절한 운영 상황 지적 및 대안 제시

- 현대산업개발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여 등 축구협회 사유화 문제 지적

■ 체육회 가맹단체의 부적절한 운영 상황 지적 및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후원 계약 배임, 대한축구협회 임원의 후원금 대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발굴, 공개
- 스포츠윤리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강제력 부여 등 지원책 마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등에 따른 후속 조치 예정

- 대한체육회·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문체부 감사종료 후, 결과에 따른 개선안 마련 및 형사 고발조치 등 예정
- 국정감사를 통해 발굴된 협회 비위에 대한 감사 등 문체부의 처리 예정
- 스포츠윤리센터 불출석 대한체육회 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재출석 여부 확인

[문화·예술의 지속 발전 대책 마련]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부실을 지적하고 저작권 및 문화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문화예술기관의 부실 운영 지적

- 배우, 가수 등의 표준계약서 미비 상황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 요구
-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 촉구
- 표절 작품의 공모전 참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

■ A.I 기술 고도화 및 K-Culture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책 촉구

-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저작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K-Pop 안무저작권 등 기준,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대책 마련 주문
- 온라인 상의 패스트 무비 등 콘텐츠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
-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침해 상황 점검 및 보호방안 마련 당부

■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화예술기관의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촉구

-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코리아그랜드레저 등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과다, 업무 몰아주기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지속 점검

■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 안무저작권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입법지원 사안 확인
- AI 활용물 등 새로운 저작권에 대한 연구 진행 및 이에 따른 입법 진행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체계 정비]

국내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비와 해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해외소개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내 문화유산의 부실 운영방지와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정비체계 강화 요구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확보를 위한 노력 미흡 지적 및 강화 요구
- 문화재 방진시스템 구축의 미비 상황 지적 및 대응방안 요구
- 국립중앙박물관의 발해관 번역 미비 상황 지적 및 개선 요구
- 근대문화유산의 관심 제고 및 등재 확대 방안 요구

■ 해외 소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촉구

- 해외박물관 한국관에서의 부실한 전시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대책 요구
- 해외 반출 문화유산의 회수 실적 미흡 지적 및 회수관리 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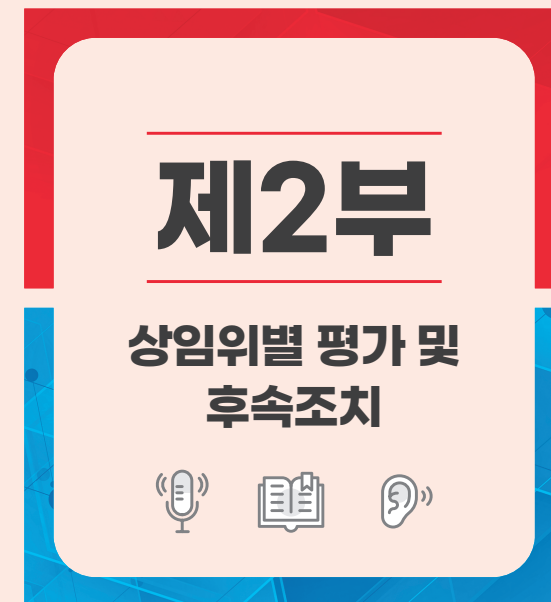
■ 우리 역사문화유산의 해외 소개 노력 강화 촉구

- 중국의 우리 국가유산의 자국 유산으로 지정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태권도의 남북한 공동 UNESCO 등재 방안 마련 요구
- 디지털 영역에서의 올바른 역사·문화 정보제공 강화책 마련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대책마련 점검

- 문화유산 보존 관리 체계 지속 점검, 개선
- 한국 문화유산의 해외 소개 강화 및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소재 파악 및 관리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농어촌의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2024 국정감사

- 산업·기후·인구 3대 변화로 인한 농어촌 위기에 맞서 농어촌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
- 농어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 폭염 등 이상기후 증가로 인한 재해 피해 및 정부 대책 점검

- 기후변화와 재해로 인한 농어민 피해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 부족 지적. 종자 개발, 재배 기술, 저장시설, 재해보험 개선, 기후 예측과 내수면 어업, 농지법 개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

■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률 과다 문제 지적

- 청과 도매법인 문제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로 인해 한국의 식품 물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농가 생산가 대비 소비자 가격이 너무 높은 문제점 지적, 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등 도매시장 제도 개선 강조

■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바다를 지키는 국감

- 후쿠시마 방류수로 인한 바다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와 국민 불안 방지를 위한 가짜뉴스 대응 주문
-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하천 유입 저감 및 폐어구 대책 등 추진 사항 지속 점검 강조

■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 문제점 질책

- 김제 스마트팜은 시공 경험 없는 지역업체 선정으로 하자발생. 농어촌공사 추진 사업의 외부 감리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외부 감리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발작물 기계화, 농기계 관리 부실, 청년농 지원 부족 등 문제 지적

■ 농협의 각종 비리 및 사고 지적,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변화 주문

[이상기후 대응]

폭염 등 이상기후 증가로 인한 재해 피해 상황 및 정부 대책 점검

주요 내용 및 성과

■ 반복되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농산물 수급 불안 대응 방안 수립 촉구

- 농진청은 2013년 연구에서 2020년이 되면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절반으로 줄고 2090년 재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음에도 제대로된 대책 수립 못한 점 비판
- 배추를 비롯해 여름채소 생산과 공급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미흡했음을 지적
- 꿀벌응애 피해의 실태와 원인조사 및 약제 시험과 방제대책 강구 요청

■ 농작물 재해보험의 과다한 지역 기본요율 및 할증률 개선 필요성 제기

- 사과 순보험요율이 고양시는 3.9%인데 정읍시는 42.6%로 지역 편차가 큰데 이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보험요율이 지속 할증되기 때문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 기본요율을 일반 보험과 달리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 요청

■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에 따른 산림청의 적극적인 방제 노력 요청

- 재선충병 고사목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처리작업에 대한 감리도 미흡, 재선충방제용 나무주사 투입량도 전문가를 투입한 철저한 진단과 관리 주문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금년도 방제예산 805억 원이 부족함을 지적, 재원 조달 비중에서도 국비와 지방비가 7:3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이를 8:2로 변경할 필요성 제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이상기후 증가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 안정과 재해대책 수립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 확대와 재해대책 강구
-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종합 대책 수립 추진
-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나무 제거 등 방제 활동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도매시장 이익률 과다 및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점 지적

주요 내용 및 성과

■ 유통구조 문제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식품가격 문제 지적

- 금년도 1~3월 물가 상승률은 과일류 36.9%, 채소류 10.7%로 높고, 한우 1마리 유통마진율도 18.8%로 높으며, 한국의 품목군별 물가수준은 OECD 국가들보다도 높는데 이는 농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기인함을 지적
- 농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로 농가 생산가격 대비 소비자 가격이 많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 유통단계 축소 등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주문

■ 가락동 등 도매법인의 경쟁체제 도입과 이익률 과다 문제 해결 촉구

- 가락동 도매시장의 건물과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고 도매법인은 기본적인 투자도 없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
-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가 7%로 높고 가락동 5대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으로 과다한데 상장 수수료 인하와 법인 간의 경쟁체제 도입 등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요구

■ 농협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개선 및 소비자 물가 안정 기여 촉구

- 농협유통과 온라인 농협 물 적자 심각, 농협의 구매권과 판매권 분리로 가격경쟁력과 유통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
- 쿠팡과 오아시스마켓을 벤치마킹한 농협 온라인쇼핑 활성화방안 강구 주문
- 농협이 자체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적극 기여를 요청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신속 추진

-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개선 대책 마련,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생산 농가 수취가격 향상, 농협 온라인 유통 물 활성화방안 강구
- 도매시장 도매법인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상장 수수료 인하 방안 검토

[스마트팜 부실시공]

농어촌공사 스마트팜 부실시공에 대한 질책과 개선 대책 마련 주문

주요 내용 및 성과

■ 전북 김제 스마트팜 등 스마트팜 조성 공사 부실시공 문제 지적

- 전북 김제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1,000여억 원을 투입했지만 준공 한지 3년 만에 276건의 하자 발생으로 입주 농가 피해와 손실 발생 질책
- 김제 스마트팜 온실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역 제한을 둬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스마트팜 온실 시공 경험이 없는 원도급 업체가 선정된 점이 부실시공의 원인임을 지적
- 김제 스마트팜에 입주한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 지원 촉구와 함께 부실시공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 농어촌공사의 스마트하지 못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 질책

- 6,900억여 원을 들인 스마트팜조성사업에서 지금까지 407건 하자가 발생했으며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스마트팜은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하자 검사를 7차례 미시행했음을 지적
- 스마트팜 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첨단농업 기반 조성 사업임에도 대규모 하자와 사업 지연이 심각함을 질책
-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공사 직원들의 자체 감리 체계이고 외부 감리시스템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 감리제도 도입을 주문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스마트팜 업체 선정 기준 재검토 및 부실시공 원인 규명과 보상 추진

- 김제 스마트팜 부실시공 원인 규명과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보상 추진
- 일정 규모 이상 농어촌공사 시공 스마트팜 사업 외부 민간 감리 체계 도입

[농협 부실 경영]

농협 금융사고 증가 대응책 모색과 부실 적자 경영 개선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농협 금융사고 증가 대응 및 부실 적자경영 해소 방안 요구

- 금년도 금융사고 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67% 증가, 고강도 인적 쇄신 필요, 지역 농축협 숫자가 너무 많아 타 금융권보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많은데 지역 농축협의 전화 금융사기 대응책 마련 촉구
-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의 적자경영이 심각하고 자본 잠식 상태인데 적자 점포 및 중복 기능 정리 등 획기적인 개선 대책 필요성 제기
- 농협중앙회 예대차익이 타 은행보다 높는데 농협 예대차익을 산림조합에 준하는 수준(1.74%)으로 낮출 것을 주문

■ 지역 농축협 비위 및 경영 사고에 대한 농협중앙회 관리 감독 강화

- 최근 지역 농축협의 비위와 경영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농협중앙회 차원의 준법 윤리경영 교육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지역농협 경영악화와 일탈 및 비위 행위에 대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역할 강화 주문

■ 농협중앙회장 고액 연봉 문제 및 간부 인사 불균형 문제 제기

- 농업인들은 어려운데 농협중앙회장은 8억여 원의 연봉과 회장 퇴임할 때 지급하는 공로 퇴임금 지급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주문
- 농협 고위 임원진 인사에서 강호동 캠프 출신의 우대와 지역과 성별 간 인사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과 성별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 주문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농협 금융사고 방지 대책 마련과 적자경영 해소 방안 강구 필요

- 농협은행 금융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자 처벌, 방지 대책 수립 추진
-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관리 감독 시스템 수립 추진
-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원진 인사 시 지역과 성별 균형 인사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면밀한 대처]

우리 바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주문

주요 내용 및 성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함을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시행해 줄 것을 주문

- 방류 1년이 지났으나, 그간의 무책임한 주장과 가짜뉴스와는 다르게 우리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
-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적 팩트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우리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방사능 모니터링, 생산·유통단계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철저하게 유지할 계획임을 확인

■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지속적인 협력 요청

- 기존 IAEA 모니터링 활동에 우리 기관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협력을 요청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2025년 예산의 차질없는 확보

-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검사 비용 등 관련 예산의 확보 및 꼼꼼한 검사 시행

■ 과학에 기반한 대처 및 IAEA 협력 지속 추진

-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팩트를 기반으로 적극 대처하고, IAEA 모니터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효성 있는 해양폐기물 관리 대책]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우선 발생량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정부에서는 관련 R&D 성과물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발생량 조사를 과학적·체계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발생량 추정 방법론 재설계, 조사 주기 조정 등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재추정 용역을 2025년 추진하기로 함

■ 해양폐기물 사업 효율성 분석과 지자체 수거확대 방안 수립을 촉구하고,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성을 제기

- 정부에서는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예산과 수거량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과 지자체 수거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주요과제의 이행현황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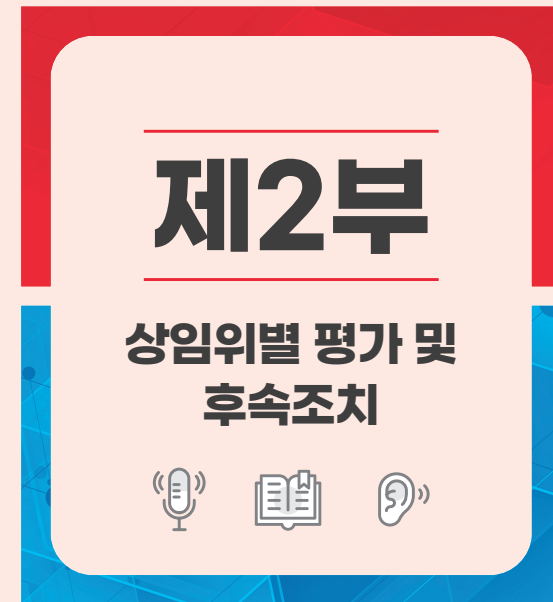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해양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조사 시행

- 해양폐기물 발생량 재추정 용역 시행(2025년)

■ 해양폐기물 저감대책 마련 추진

- 해양폐기물 사업 효율성 분석, 하천유입 저감 및 폐어구 대책 등 추진사항 지속 점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2024년 산중위 국감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현안을 중심으로 여당은 사실 확인과 정책 제안에 야당은 의혹 제기와 개선 요구에 집중했고, 위원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과 여야 간사의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로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무리없이 진행
- 체코원전 및 동해심해가스전 관련 추측성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익 관점의 대응 당부
- 文 정부의 과도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 송전망 건설 지연, 보조금 수급 부정 등 에너지 정책 왜곡을 지적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제시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필요성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구축을 촉구하며,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대책, 산하 기관의 방만 도덕적 해이 실태도 비중있게 점검함
-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등 현장 애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점검하고, 기업 요구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의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산하 기관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촉구
 -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피해 기업인의 수요에 맞는 신속하고 밀착적인 지원을 주문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등 지원정책의 내실화 필요성 제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와 엄격한 사후관리를 요구하고, 산하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한 개선대책 주문

[에너지정책 정상화 및 합리화]

원전 산업 발전 및 재생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원전산업 생태계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제언

- 원전 신규 부지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필요성 강조
- 文정부 탈원전정책에 따른 원전 계속운전 허가 지연으로 인한 손실 감사 필요
- 계속운전 추진 시 가동중단 없도록 인허가 검토 기간 축소 제언
- 경제성 조작으로 폐로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검토 당부
- SMR 개발, 원천기술 보유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 국내 우선 건설 제언
- 수소환원제철을 위한 원자력수소 육성 등 수소정책 발전 제언

■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文정부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출력 제어 확대, 인증서(REC) 가격 급등으로 한전 부담 급증 지적,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전면 재검토 제언
- 공공기관 임직원 태양광 부당 투자 적발사례 철저한 후속조치 주문
- 文정부 공공기관 태양광 부실 투자에 대한 감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전력산업기반기금 태양광 보조금 부정집행 환수 이행실적 저조, 점검 촉구
- 태양광 출력제어장치 부착 의무화 제언

■ 전력망 확충 및 에너지 요금 현실화 당부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송전망 건설 적극 지원 요청
- 주택용 전기요금, 민수용 가스요금 현실화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대책 수립 당부
-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 제정 등

[에너지 자원 역량 확대]

체코 원전 및 동해심해가스전 프로젝트 사실 왜곡 및 가짜뉴스 차단

주요 내용 및 성과

■ 체코 원전 수주 경제성 입증, 금융지원 여부 등 의혹 불식

- 우리 원전산업의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덤핑으로 왜곡한 지적 적극 반박
- 체코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으며, 의향서는 비구속적 관행임을 부각
-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증’ 또는 ‘융자’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
- 한수원 등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간 계약 또는 협상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하여 국익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

■ 동해 심해가스전 프로젝트 관련 의혹 적극 반박

- 동해 심해가스전 발표시점은 총선 이후로 정치적 국면 전환과 무관
- 자원 안보 및 국민경제 효과가 크므로 대통령이 발표, 해외 사례도 유사
- 용역사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 해외자문단은 공정하게 자문 수행
- 기획재정부에서 동해심해가스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아님’ 확인
- 우드사이드사는 유망구조 분석 등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합병 등 회사 사정으로 철수, 타당성이 없어 철수한 것으로 오해없도록 설명 당부

주요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체코원전, 대왕고래 관련 사실 왜곡, 가짜뉴스 적극적·지속적인 대응

- 자료 공개 확대, 사실관계 홍보, 주요 쟁점 설명 등 소통 강화
-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관련 예산 확보 지원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입법 제안

- 보조금, R&D 지원, 규제 완화 등 경쟁국에 뒤지지않는 산업정책 당부
-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및 보조금 지원 등 반도체산업특별법 입법 적극 대응 촉구
- 반도체 등 첨단산업특화단지 전력망 확충, 용수 공급 지연 적극 대응 강조
- 반도체클러스터에 국가 산단 개발 경험 전수방안 마련 요청
- 반도체배치설계법을 팹리스 산업 육성방안 중심으로 개정 제안

■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 반도체 겨울론,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굴기에 대응한 대책 수립 촉구
- 소부장 국산화 제품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 요청
- LNG 및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 원천기술 개발, 화물창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 중재, 군함 MRO 수주, 마이스터高 졸업생 채용 확대 등 조선산업 발전방안 제안
- 산업기술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철저한 집행 당부
- 고려아연 핵심기술 해외 이전 우려에 대비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요청

주요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 확보

[티메프 등 플랫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티메프 등 플랫폼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및 재발방지 방안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과감한 지원 필요성 제기

- 피해 기업인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지원 자금의 금리 인하 및 피해 규모에 부합하도록 융자 한도 확대

■ 유통센터 판로지원사업에 티메프 등 부실기업 선정 방지 대책 주문

- 이행보증서도 발급 안되는 티메프를 사업에 참여시킨 문제점 지적
- 지침을 위반한 업체선정에 있어, 중기부의 관리감독 및 소통 부재 지적

■ 배달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방지 방안 마련

- 약관, 수수료 변경 등 갑질 방지를 위한 배달료상한제 필요성 제기
- 일방적인 UI편성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관계부처 협력 필요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티메프 피해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실제 피해규모에 따른 융자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필요

■ 유통센터사업에 재정부실 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기부의 관리감독 강화

■ 배달플랫폼 관련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 소상공인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내실화

주요 내용 및 성과

■ 신용보증 및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 지원 확대

- 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신, 소상공인을 어떻게 촘촘히 지원할지 고민 필요
-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와 이를 위한 지역신보 재원 확충 방안 강구
- 풍수해 보험 가입률 제고, 희망리턴패키지 내실화 등으로 현장 애로 완화
- 전기료 지원 등 부실 사업의 정교한 설계와 시행을 위해 소상공인연구원 설치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청년몰 및 화재예방 지원

- 상품권 사용처는 확대하되, 부정유통은 엄격히 조치할 필요
- 청년몰에 대한 멘토링 실시 및 누전, 합선 등의 화재 예방 예산 확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소상공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증액된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통한 보증재원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 신용공급을 확대

- 소상공인 수혜조건 완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며, 희망리턴패키지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진단을 정밀하게 운영
- 전기료 지원 등 집행 부진 사업의 실행률을 높이고, 중기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연구원의 연구기능 확대에도 주력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화를 확대하여, 부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되, 지류상품권의 부정유통은 엄밀히 관리

- 청년몰에 대해 자금 뿐 아니라, 멘토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에도 노력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자금에 대한 엄정한 지원·관리 및 산하기관 감독 철저

주요 내용 및 성과

■ 정책자금의 성과 제고, 중복 지원 방지 등 지원 효율성 강화

-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 부당한 지원에 대한 회수 등 관리 철저 주문
- 기업성장의 마중물로서 정책자금의 기능 필요
- 특정기업에 대한 다수 반복 지원 사례에 대한 점검 필요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에 대한 개선책 요구

- 공영홈쇼핑의 특정업체 방송편중, 문제업체에 대한 해지 지연, 지속 하락하는 고객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 창업진흥원의 해외 보이스트피싱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 고연봉의 전문위원 근무태도 불량 등 부실 경영 대책 마련 촉구
- 중진공의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규정을 수시로 개정하는 등 특정기업 지원을 위한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감사를 요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정책자금의 성장 마중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 등을 차단

■ 산하기관 운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기관 고유의 목적에 충실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정상화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의대증원 및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 필요성 강조

- 최근 의료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의 조속한 출범의 필요성 제시
-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계속적 진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응급의료, 필수의료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의료계의 역할 강조
- 응급의료 닥터 헬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반드시 의학적 필요한 경우만 출동하도록 지적

■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

-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필요성 지적
- 미래세대 청년층의 연금개혁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고려한 연금개혁 필요

■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 및 약자복지를 위한 대안 제시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질적 접근 개선방안, 장애인 주치의 등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치매노인에 대한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등
- 임산부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임산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학대아동,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필요 대책 지적

■ 국정감사 기간 중 코로나 진단키트 제작업체 및 한방첩약 등 관련 일방적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여당 간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난히 대응하여 민생 중심 국감으로 진행되었음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강화 촉구]

비상의료체계 가동 및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주요 내용 및 성과

■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장기간 비상 진료체계가 가동중인 바,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정부 및 의료계 모두의 노력 촉구

- 야당의 장관 사퇴론 등에 대해,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됨을 강조하고, 응급의료, 필수의료 정상화는 역대 정부가 모두 노력해 왔던 사안임을 지적하고, 조속한 의료 정상화 필요 지적
- 의학회,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단체의 대화 참여 노력을 평가하고, 조속한 여·야·의·정 대화의 출범 필요성을 전달
- 의정갈등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들과 공공 의료원에 대한 고려 필요성 지적
- 지역의료 강화 및 응급의료 닥터 헬기의 운영규정을 명확화하여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출동 하도록 규정개정 방안 제시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 의료정상화를 위한 야당과 의료계와의 지속적 소통 강화
- 의대정원 규모 확정 외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공공정책 수가 확대 등 정책 패키지 마련 및 시행 으로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달성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강조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원칙하에 개혁방안 조속 논의필요
- 연금고갈 등 연금기금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미래 청년세대 의견 반영
-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이해 제고
-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 크레딧제도 개선 등 필요성 공유
- 크레딧 제도 개선을 통해, 산전 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한 납부유예자 부담 개선
- 국민연금 기금 운영 인력 퇴사 문제 등을 개선하여 역량있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모색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정부에서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논의 진행

- 연금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수익률 제고 등 노후 소득보장 제고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혁방안 마련
- 보험료율 인상, 실질소득 제고, 지급보장 명시 등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진행

[약자복지 강화]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약자복지 강화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제시
- 장애인주치의제 도입과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 노인 및 아동 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주문
- 마트 종사자 중 임신부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민관협력사례 제시
- 입양아동에 대한 기록 전산화 등 사후 관리강화 방안 마련 주문
- 영케어러, 보호종료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대책 필요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약자복지 예산 확보 및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구조적 변화 대비

-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구조 개편
-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지속적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 아동권리보장원 등 산하기관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의 조속한 진행

[마약류 오남용 대책]

사회적으로 심각한 마약류 오남용 대책 마련

주요 내용 및 성과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범부처 협력 강조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내실화, 체계적인 마약 관리 시스템 구축
- 마약류 오남용 관련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사법·치료·재활 등 범부처 연계방안 내실화 및 예방교육 강사 양성
-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대국민 인식 개선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시행

- 마약류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식약처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정보 공유
- 마약류 과다처방 및 셀프·대리처방 등 사각지대 해소
-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사법·치료·재활 연계사업 체계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기후대응댐, 용산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등 정쟁수단용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 국민안전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필요성 부각

- 기후대응댐 건설이 4대강 사업 2탄이라는 야당의 선동적 주장을 반박하고, 호우 피해사례, 과학과 소통에 기반한 추진 등 기후대응댐 건설의 필요성 강조
- 댐·저수지 통합관리, 취수원 다변화, 하천 및 댐 쓰레기 처리 예산 확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등 이념 논쟁 아닌 실용적 물관리 대책 제시
- 환경생태교육관 조성이 급조되었다는 야당의 허위 주장을 세계적 생태학자 제인 구달 방문 기념, 첫 번째 서울지역 생태교육관 설치 등을 들어 반박하고 미래세대인 어린이 행복을 위한 필요성 부각

■ 석포제련소 악순환 고리 차단의 시발점, 기후위기 대응 강화 견인

- 석포제련소내 잔재물 처리, 토양오염정화, 카드뮴 유출,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오너인 증인의 사과와 실질적 조치 약속 견인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헌법소원 후속조치, 전기차포비아 종식,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체계 개선, 기상 예보인력 및 정확도 향상, 적응정보 활용 등 기후위기 대응 강화 촉구

■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고용상황 등을 진단하는 민생 국감을 주도

- 최근 급증하는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에스스로시스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임금체불대책반 제안 등 관련 논의를 적극 주도
-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와 상황을 진단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법, 제도의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부각
- 민간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실직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

-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
-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신속한 취업보다는 실업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용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총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

[기후대응담 등 정치적 공세 대응]

정쟁 수단용 의혹 제기
(기후대응담, 용산 환경생태교육관 등) 차단

주요 내용 및 성과

■ 기후대응담 건설이 4대강 사업 2탄이라는 야당의 저열한 주장 관련 반박

- 야당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졸속 후보지 결정, 주민의견 수렴 미흡, 물수요량 과다 산정 등을 제기하며 토건사업자를 위한 담건설이라고 선동
- 이에 당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사례 및 지역주민 증언, 가뭄대응의 효과성, 과학적 용수부족량 산정, 강압적 방식이 아닌 주민소통 기반 등 국민안전과 기후대응을 위한 담 건설 필요성 부각
- 또한, 담·저수지 통합관리, 취수원 다변화, 하천 및 담 쓰레기 처리 예산 확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등 이념 논쟁 아닌 실용적 물관리 대책 제시

■ 용산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관련 야당의 허위 주장에 적극 대응

- 야당, 김건희 여사와 제인 구달 박사가 만나기 직전에 어린이 생태교육관 조성을 급조한 것은 국정 농단이라고 허위 주장
- 당은, 세계적 생태학자로서의 제인 구달의 상징성, 첫 번째 서울지역 생태교육관 설치, 어린이 방문 증가 등을 감안, 미래세대를 위한 필요 시설 부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기후대응담 건설 우선 추진

- 공청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담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수립 등 후속절차 추진
- 주민 반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곳은 지속적 소통으로 공감대 확산

■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참가 확대 필요

- 어린이 만족도 조사 및 관심 콘텐츠 보강, 주요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 및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 강화 필요, 필요시 예산 확충 적극 검토

[환경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석포제련소 악순환 고리 차단의 시발점,
기후위기 대응 강화 견인

주요 내용 및 성과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해소 등 환경안전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 마련

- 석포제련소내 잔재물 처리, 토양오염정화, 카드뮴 유출,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오너인 증인의 사과와 실질적 조치 약속 견인
- 배터리 제조시설 폐수 리튬 기준 초과, 해외직구 유해화학제품 불법유통, 지하철 소음 및 미세먼지 기준 초과, 매연여과 무력화장치 불법유통 등을 제기, 정부의 개선조치 촉구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헌법소원 후속조치 등 기후위기 대응강화 촉구

- 헌법불합치 결정사항 신속한 해소, 수송분야 NDC 달성을 위해 전기차포비아 종식,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체계 개선 등 기후위기 컨트롤타워 강화
- 기상 예보인력 확충 및 정확도 향상, 기후변화 상황지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등 기후적응 인프라 확충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해소 등 환경안전 강화

- 낙동강으로 오염 지하수의 유출 차단, 제련소 내 제련잔재물 및 오염토양 신속 제거 필요, 불이행 시 제련소 조업정지 등 과감한 조치 검토
- 국감에서 약속한 사항의 책임있는 이행 지속 모니터링 필요

■ 기후위기 총괄기능 강화로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이행

-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포럼을 운영,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35 NDC를 마련하고 탄소중립법을 개정하여 헌법불합치 상황 해소('26.2) 필요
- 적응정보 활용, 기후위기 취약성 조사,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적응특별법 제정 필요
- 강화된 제조물 책임, 배터리 상태정보 등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 충전기 확대, 충전기 관리센터 지정 등 필요

[민생 챙기기]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대안 제시

주요 내용 및 성과

■ 임금체불, 고용상황 등 노동시장 상황 점검과 민생 챙기기

-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우위니아 등에 대해선 관련 책임자의 체불청산 이행약속을 확인하고, 임금체불 신고가 많은 조선업, 건설업 등에 제3자가 지급을 보증하는 에스프로 시스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당 제안에 따라 국감 이후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여야가 합의
-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노동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사회적 분위기 성숙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용연장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신속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를 촉구
-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대신 부담금을 내는 민간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에 따른 하청 노동자의 실직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필요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요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노동시장 활력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

-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 검토 및 국회 차원의 후속 활동 지원
-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 상황 모니터링 및 합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입법 추진
-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책과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촉구]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제도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개선 추진

주요 내용 및 성과

■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직장내 괴롭힘, 형식적 위험성평가 제도,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개선을 요구

-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 기준에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요건의 추가 필요성을 제시
-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와 사업주의 형식적 위험성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처벌 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주장
- 문재인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개편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짧은 기여 기간에 비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증가하고 실업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체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추진 상황 점검

-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요건 개선에 대한 정부 입장 검토 후 입법 추진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내실화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개선 방안 검토
- 고의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입법 추진



제2부

상임위원 평가 및
후속조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대통령실을 향한 밀도 끝도 없는 민주당의 정쟁국감 대응 I

- 대통령 관저 용산이전·증축공사
-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및 주민초청 행사
- 퍼스트레이디 항공기 분리기준 적용

■ 대통령실을 향한 밀도 끝도 없는 민주당의 정쟁국감 대응 II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

■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해결 노력

- 전세 보증채권 회수 등 HUG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 사전청약 남발한 문재인정부,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문제 지적
- 문재인정부 주택통계 조작사건
- 주택자금 정책대출 부실심사 등 시스템 보완 촉구

■ 국토교통 주요현안 정책질의

- 이재명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의혹 및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혐의 질의
- 이재명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의혹 제기
- 대형운송회사 이윤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요구하는 민노총의 모순
- 부영건설의 도덕적 해이 지적

[정쟁국감 대응]

대통령실을 향한 밀도 끝도 없는 민주당의 정쟁국감 대응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대통령 관저 용산이전·증축공사

- 민주당은 관저 긴급이전·증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미로 집요한 정치공세
- 관저 이전증축공사를 시행한 업체 21그램을 추천한 인사를 영부인으로 단정하며 집요한 담정너 공세 지속
- 당시 공사를 담당한 김오진 前 차관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자 적격성 공세
- 실상은 긴급공사 추진 과정에서 계약 전 사전 공사를 진행한 것 이외에 이전과정에서 그 어떤 절차적 하자나 불법성 여부가 없었음

■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및 주민초청 행사

- 시설물 관리운영 이력이 없는 광고대행 이벤트 업체 올댓캠퍼스, 코문아이 등이 영부인과의 친분으로 용산공원 관리운영 및 주민초청행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 제기
- 과학적 근거 없이 어린이정원 개방구역 내 건축물 석면검출 의혹 제기
- 실상은 개방 전후로 지속 확인·조치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

■ 퍼스트레이디 항공기 분리기준 적용

- 지난해 10월 6일, 영부인께서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제주도 지역행사(은갈치 축제) 참석한 일정 시비
- 대통령이 탑승했을 때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기준을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항공고시보(NOTAM) 없이 허위사실로 적용 지시했다는 의혹 제기
- 실상은 역대정부 영부인 경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 통상적인 관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역대정부 대통령들에게 적용한 통상적인 관례와 비교조사 추진 필요

- 역대정부 청와대 등 리모델링 공사 및 수의계약 추진현황 검토
- 역대정부 영부인(김정숙, 권양숙, 이희호 등) 분리비행 적용여부 조사추진

■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관련한 과학적 환경지표 공개 등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논란과 같은 적극 대응

[정쟁국감 대응]

대통령실을 향한 밀도 끝도 없는 민주당의 정쟁국감 대응 II

주요 내용 및 성과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 지난해와 연이어 사실관계 입증과 결정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노선변경을 했다고 주장
- 기존 제기된 의혹 재탕에 이어 변경 종점 JCT 연결부 램프 구간이 영부인 일가 토지의 진입로를 차단,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매수근거로 토지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상력과 추론에 기반한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삼부토건이 참석한 것을 두고 국토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키 여사 방한과 윤 대통령 내외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억지 연계
- 실상은 국익에 중요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민간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前 국토부 장관이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했을 뿐 업체 참석과 관련해 국토부가 관여한 바 없음

■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

-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특정인이 깊숙이 개입하여 창원이 특혜를 받았고, 특정인에게 사전 개발정보유출 의혹 제기
- 실상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창원 등 입지여건이 불리한 후보지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제안서를 수정해 최종선정하였고, 후보지 발표전 지자체와 공식절차 이행과 지역홍보를 위해 사전협의를 진행한 사실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노선검증을 통한 조속한 사업재개 필요

[민생국감 추진]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해결 노력

주요 내용 및 성과

■ 전세 보증채권 회수 등 HUG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 2020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16차례나 제기했으나 묵살해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였고 대위변제 금액만 6조 원이 넘는 결과 초래
- HUG의 대위변제금을 되돌려줘야 해 낙찰가가 낮은 피해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 받아 재임대를 놓고 HUG의 돈을 갚지 않은 채 소송도 불사하는 특정 법인들의 행태 고발

■ 사전청약 남발한 문재인정부,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문제 지적

- 문재인정부 당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주택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전청약 남발
- 현재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문제 발생

■ 문재인정부 주택통계 조작사건

-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감사·기소가 정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야당의원들의 일방적 주장 제기
- 우리당은 감사원 중간감사결과를 인용하며 불법적인 통계조작이 실제 이루어졌고 부동산시장을 왜곡 시켰음을 반론 제기

■ 주택자금 정책대출 부실심사 등 시스템 보완 촉구

- 지난해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자금 정책대출 53만 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8만 2천 건 중 이의제기한 6만 2천 건이 모두 적격 판정을 받는 등 대출심사 시스템 문제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HUG의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방안, 상습 채무 불이행자 제재방안 마련

- 특정 법인대상 과감한 형사조치 검토와 행정적 보완 필요

■ 사전청약 당시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당첨자에 대한 대안 마련 검토

■ 주택자금 정책대출 대출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민생국감 추진] 국토교통 주요현안 정책질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이재명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의혹 및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혐의 질의

-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 4단계 상향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성남시에 용도변경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한 이재명의 과거 국감장 허위발언 관련 국토부에 재확인

■ 이재명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의혹 제기

- 교통관련 경험이 없는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문제인정부 택시 애플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운영과정에서의 특혜정황
- 검정 과정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항목 35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요청을 받고 이를 완료해 검정을 통과하는 등 검정 과정에서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 적발

■ 대형운송회사 이윤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요구하는 민노총의 모순

- CJ대한통운 등 대형운송회사 운송마진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28.8% 증가
-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의 운임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인 안전운임제가 대기업인 운송회사의 이윤까지 보장하면서 시장을 왜곡

■ 부영건설의 도덕적 해이 지적

- 부영건설이 임대주택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400만원 이상 부당 청구한 사실 적발
- 서민들이 이사하려면 보증금 반환을 고리로 하자보수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기행태에 대한 국민 애로 해소 노력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11월 15일, 1심 선고 공판 모니터링

■ 코나아이 택시 애플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선정부터 검정 과정까지 철저한 조사 필요

■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법개정)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과도한 원상복구비 청구 문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성격의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 검토

제2부

상임위원 평가 및 후속조치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주요 내용

■ (국민안전)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예방대책 마련 촉구

- 최근 AI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대중화되면서 일부 잘못된 활용 사례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급증.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피해자 보호 및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가해자 처벌 및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안 및 정부 대책 점검
- 피해영상을 탐지와 신속한 삭제에 위한 국내·외적 대책 마련 촉구
- 관련기관 증·참고인 신문을 통한 기관간 연계조치 및 협업 논의

■ (위기청소년 자립) 학교밖·가정밖·은둔형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확대 강조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건강·교육 지원, 취업 지원서비스 점검
-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입소시 문제점 지적 및 자립지원수당 지원 확인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파악 필요성 지적 및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점검

■ (아이돌봄) 양육비 선지급제 성공적 정착 및 아이돌봄지원 제도 개선안 점검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극적으로 통과시킨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하반기 도입.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이행 상황 점검 및 제도를 관리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적·물적 역량 개선 필요성 지적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 제도를 정비하여 양질의 돌봄인력 확충 및 정부지원 확대에 양육부담 경감 필요성 강조

[국민안전]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예방대책 마련 촉구

주요 내용 및 성과

■ 가해자 처벌 및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점검

- (법 개정)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24.9.26. 본회의 통과 ‘24.10.16. 공포)
- (대책 수립)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가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수립(‘24.4.)
- (실태조사)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24.7.4.)

■ 피해영상을 탐지·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역할 촉구

- 구글 등 해외검색엔진을 통한 피해영상을 정보 노출 문제 및 삭제 요청 협조에 소극적인 실태 지적
- 전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과반이 한국 국적 여성인 실정이고, 딥페이크를 넘어선 청소년 유해환경이 만연함을 지적하여 점검 필요성 강조
-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종합서비스·원스톱 지원 점검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확산 필요성 강조

■ 관련기관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한 기관의 연계조치 및 협업 강화 논의

-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건수 증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텔레그램과 핫라인 개설, 협의를 통한 신속한 삭제 실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센터를 통해 성인 및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국무조정실 주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대책 수립·발표

■ 해외 서버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대응방안 마련

■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25.4.17)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위기청소년 자립]

학교밖·가정밖·은둔형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확대 강조

주요 내용 및 성과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학습, 활동, 건강, 자립지원 확대 강조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개선 필요성 지적
- 발달 단계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학습지원 및 건강검진 지원 강조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일경험 등을 지원하는 자립·취업 지원서비스 추진 및 내실화

■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필요성 지적

- 쉼터 입소시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절차에서 가정 상황을 반영한 조치 필요함을 지적
-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 지원 확대 점검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점검

- 고립·은둔 청소년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성 지적
- 고립·은둔 청소년 심리·사회적 관계 조기 회복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점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3)에 따라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사전동의 없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는 대상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안내·홍보 지속

■ 청소년쉼터 입소 관련 절차 개선

-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책 마련

[아이돌봄]

양육비 선지급제의 성공적 정착 및 아이돌봄지원 제도 개선안 점검

주요 내용 및 성과

■ 양육비 선지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이행 상황 점검

- 한부모의 빈곤화 방지,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개정(10.16.)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 *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일정액 지원 및 채무자로부터 회수
 - * (추진체계)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화 및 권한 강화,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 가능
- 새로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적·물적 역량 부족 우려 전달, 양육비 소송 수행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 지적

■ 아이돌봄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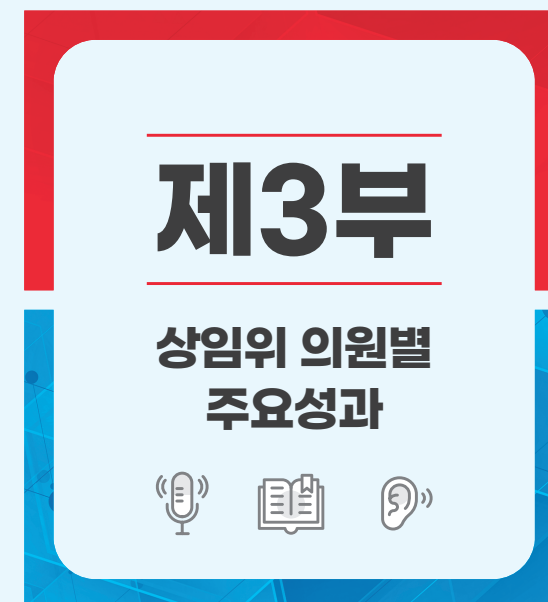
- 아이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 지적, 돌봄인력 확충 및 정부지원을 확대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 강조
-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성 강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법 제·개정 사항 등 포함)

■ 시행일(‘25.7.1)에 맞춰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전문성 강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 아이돌봄지원 제도 정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수당 인상
- 돌봄인력 국가자격제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국회운영위원회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야당의 운영위원회 감사 진행을 지적하고,팩트체크와 민생 현안에 집중

운영위원회 **배준영** 의원

주요 내용

■ 야당의 흑색선전에 대응하여, 사실관계 정확하게 바로잡아

- 국회사무총장에게 민주당 의원실 개최로 성사된 ‘탄핵의 밤’ 문제 제기 ▲특정 개인 비방, 사회윤리 침해 등 내규 위반 ▲수익을 위한 행위 금지 위반 ▲국회사무처 허가의 취소·철회 규정 위반 등 문제 사항 지적해 대책 고려하겠다는 답변 이끌어내
- 조국 대표의 용산 대통령실 호화 관저 주장에 대해 김정숙 여사 개인 강습이 진행되었던 수영장, 골프 연습장을 포함해 사우나실도 3개나 있는 등 오히려 청와대가 호화 관저임을 지적.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했으나 지키지 못했던 점 언급하며, 용산 관저는 업적임을 설명
- 영부인 독섬지구대 방문해 업무 지시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단순 격려 차원의 방문으로 업무 지시와 직원 동원은 없었다고 사실관계 바로잡아. 역대 영부인 치안현장 방문 사례 제시하며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일반적인 일정이었음을 밝혀

■ 야당은 뒷전이던 안보 문제와 민생 현안, 대통령실 확실한 설명 이끌어내

- ICBM 발사, 러시아 파병 등 계속되는 북한발 안보 위협에 대해 국가안보실 설명 요구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우리 군 파병 계획 없다는 답변 받아내
- 지난 정부에서 1.0 이하로 떨어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8월 출생아 증가율 14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며 회복추세에 접어든 사실 강조. 향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협조 등 저출생 해결에 야당 역시 함께할 것 촉구

■ 증인 채택부터 편파적, 독단적이었던 야당의 감사 진행 문제, 끝까지 짚어

- 민주당 독단으로 채택했던 강혜경, 신용한 등 증인들의 ▲오락가락 증언 ▲출처를 모르는 자료 문제 등 신뢰할 수 없는 증언 문제 지적
- 강혜경 증인 측 노영희 변호인의 감사개입 정황 지적. 강혜경 증인 질의 응답 중 껄스말로 대화 나누고, 이후 야당 위원에게 다가가 껄스말 나누는 모습 포착. 권한 없는 일반인이 감사과정에 개입 지적 및 고발 촉구

민주당의 입법폭거와 탄핵선동에 대한 대응

운영위원회 **강명구** 의원

주요 내용

■ 북한인권재단 출범 관련 민주당 이사추천 지연 비판

- 작년 9월 25일 인권위는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했었으나 민주당은 이사추천과 관련해 이행계획이나 불이행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인권위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해야 함
- 이에 인권위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이사 추천 등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요구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의 밤 관련 국회사무처에 대책 촉구

- 지난 9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탄핵의 밤> 행사가 개최되면서 논란을 야기
- 국회 내 특정 개인을 비방하고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목적을 띤 행사였다는 점에서 국회사무처 허가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
- 국회사무처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심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

■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지적

- 민주당의 기획 폭로 대응 :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지적,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하명’을 내려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하고, 민주당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후보를 매수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 최근 법원은 송철호 전 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비서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
-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선거 개입은 실체가 있는 명백한 외압 및 조작이라는 점을 부각

李 대표 방탄용 운영위원회 운영에 철저한 팩트체크로 엄정 대응!

국회운영위원회 강민국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강력 질타

- 여당 신청 증인 채택 0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강력 항의
-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상설특검안 등 여당 배제 날치기 단독처리 규탄

■ 文정권 시절을 잊은 민주당의 위선·무능·내로남불 행태 강력 비판

- 대통령의 사적 전화를 정쟁으로 확대하는 민주당에 대응하여 文정권 선거 개입 사례 비판
- 변호사비 대납, 법원로비, 불법정치자금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대표 수사 촉구

■ 국회사무처의 비위 사건 및 예산 낭비 사례 문제 제기

- 입법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 공무원의 비위 사건 솜방망이 처벌 적발
- 국회 홍보 유튜브 채널 이중 운영으로 운영 예산 낭비 지적

■ 인권위의 내부 부조리 타개 및 인권보호 노력 동참 촉구

-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이슈 등 국제인권 현안 소홀한 관리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연임 실패 지적
- 국가인권위 공무원, 유연근무제 신청자 절반 출퇴근 등록 의무 위반 적발
- 딥페이크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대책 마련 요구

■ 민주당의 남북관계 긴장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국가안보실의 대응 요구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김정은 통일 포기 주장 동조 발언 문제 제기
-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남북간 긴장 고조시키는 여론몰이 주도하는 민주당 비판
- 러시아 총발이 용병으로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정부의 포로 보호대책 강구 요청

野圈 정치공세 맞서 ‘팩트’와 ‘논리’로 憲法정신·議會주의 수호!

국회운영위원회 강승규 의원

주요 내용

■ ‘명태군 녹취록’ 증거 능력 결함 지적…野 ‘영부인 악마화’ 철저 분쇄!

- 소리규명연구소 감정 결과 공개…과학적 근거로 녹취 편집 가능성 제기
- 영부인 대외활동 시비? 소방부터 순방까지, 김정숙 여사 초월통치 일갈
- 정쟁국감 막기 위한 파격적 용기…탄핵 프레임에 ‘실체적 진실’로 대응

■ 親明 당과 文 정권의 ‘내로남불’…野 사법 리스크 방탄 민낯을 파헤치다

- ‘무지성’ 공천개입 공세, 이재명 변호인단 ‘사천 논란’으로 카운터 펀치
- 선거개입 전문은 민주당…울산시장 지방선거부터 전당대회 돈봉투까지
- 지상파 등 방송부터 유력 매체까지 쟁점질의 보도, 與 반격 사례로 조명

■ 인권도 민주도 저버린 野…헌법정신 부정하는 민주당, 인권위 조사 촉구!

- ‘이재명 無罪’ 사법부 겁박은 인권침해 완결판…인권위 움직인 현안질의
- 상임위원 ‘직장 내 괴롭힘?’ 진실 가리는 인권위 내부 親野 성향 지적
- 불륜에 패륜, 전과 범죄에 비리 연루까지…‘反인권’ 이재명 실제 공론화

■ 편향 방호, 안전 미비! ‘탄핵의 밤’ 허용한 국회사무처 무사안일 강력 질타!

- 야권 강행에 본관 정현관 앞 시위 금지 사무처 규정 무력화 최초 지적
- 흥기 난동, 사이버 교란 등 국회 향한 온·오프라인 공격 상황 문제 제기
- 사무처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규정 어긴 탄핵행사 대관 문제점 대해부

각종 허위·조작으로 국정을 혼드는 부당한 정치공세 근절되어야

국회운영위원회 권영진 의원

주요 내용

■ 대통령비서실

-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을 일반인 개인이 기획하고 주도 하였다는 주장과 의혹 제기가 허위임을 논리적으로 지적
▲당초 신청되었던 국가산단의 입지가 추후 변경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점(전북 익산, 대전 등)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결정 전날에 지방자치단체에 실무적으로 관련 사실이 공유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혹제기가 부당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지적
-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되어있다는 일각의 의혹제기가 전혀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 아님을 지적하고, 전임 정부 청와대의 사우나 시설 설치와 같은 호화 운영 사례 등 과거 정부에서 시행한 관저 공사에 대한 점검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 인권위 차원의 이사 추천 조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촉구
- 납북자·국군포로 등에 대한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대응 필요함을 강조

■ 국회사무처

-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를 무시한 ‘탄핵의 밤’ 개최 허가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회차원의 로드맵 마련 촉구

정치적 중립성 잃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질타 대통령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의혹 지적 및 야당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 요청

국회운영위원회 김정재 의원

주요 내용

■ 전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중립 잃은 국가인권위원회 질타, 정치적 중립 지키면서 엄격하고 제대로 된 균형추 역할하도록 요청

- 야당 대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전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비판
- 정치적, 사회적, 법리적 논쟁이 많은 이슈에 대한 의견 피력 자제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의견 표명과 인권 보호 앞장서야!

■ 규정에 맞지 않는 대통령 탄핵집회 승인한 국회사무처 질타!

- 헌정질서 훼손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 또는 단체 비방 금지, 국회 품위 훼손 금지 등 사무처 내규 위반임에도 탄핵집회 행사 승인한 국회사무처
- 규정에 어긋나고 의도가 불순한 행사 앞으로 논란 야기할 수 있는 행사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논의기구 만들 것 제안

■ 야근수당 부정수급한 사무처 일부 직원들, 조직적 자료은폐 제출거부 질타감사 통해서 부정행위, 불법에 대한 일벌 백계 필요

- 국회의회의 없던 총선 기간 동안 야근하고 수당 챙겨간 의정기록과 문제 지적
- 야근 수당 지급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만들어 공정성 회복해야!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의혹 지적

- 이상직 전 종진공 이사장 취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특혜의혹, 딸 문다혜와 경제공동체 인정되면 뇌물죄 적용 가능성 지적
- 전직 대통령 일가의 범죄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한 국정운영 요청

■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야당의 가짜뉴스 엄정대응 요청

-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오래된 유리온실을 마치 엄청난 호화시설 있다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야당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 요청

민주당의 거짓선동은 대통령 탄핵 물이의 시작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임이자 의원

주요 내용

■ 민주당발 괴담 및 거짓선동 관련 정부차원 백서제작 등 적극대응 필요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군 게이트’를 조사할 명태군게이트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국민 선전에 나서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시절, 일부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자행한 광우병 선동부터 윤석열정부 출범 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무책임한 괴담까지 국가전복 시도 전례가 있음
- 또한 지난 2002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김대업 가짜뉴스부터 2022년 3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윤석열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례처럼 대선개입도 끊임없이 시도됨
- 거짓을 선동한 주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련 백서를 만들어야 함.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괴담을 주장했고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낱알이 기록한 백서 등 적극적인 대국민 해명이 필요함

“정치적 중립성 잃은 국회사무처의 부적절성 지적”

국회운영위원회 정성국 의원

주요 내용

■ ‘탄핵의밤’ 행사 부적절성 지적 및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 촉구

- 특정인 비방, 국회 품위 훼손, 수익을 위한 행사 금지 등 국회사무처 회의실 사용 허가 조건 위반사항 지적
- 일관적, 중립적이지 않은 대관 기준으로 내규 위반에 따른 조치 미흡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과거 유사 사례 (ex.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 전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풍자 그림 전시회 등) 발생 시 사무처 대응과 비교, 일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 견지 필요성 강조

■ 통일전망대, 역대 대통령 통일 휘호 전시 중 문재인 전대통령 휘호 부재 지적

- 우리 헌법은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그 일환으로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통일전망대를 운영하고 있음
- 통일전망대에 역대 대통령의 통일 염원을 담은 휘호가 전시되어 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휘호는 부재. 이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경위파악과 문제점 지적
-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2국가론’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 안보의식 제고 당부

소외받은 국민을 감싸고, 편향된 국회 운영과 거짓말을 바로잡다.

국회운영위원회 주진우 의원

주요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졸속 추진 행태를 지적

-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 침해, 소송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해당 법안이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조직 논리를 앞세운 법안이라 지적
- 국민 90%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업무보고서 내용을 지적하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 현실적인 인권개선 방안을 주문

- 노인들이 눈치 보지 않는 공간을 찾아 공향으로 모인다는 기사를 인용, 인권위원회가 이념적 인권을 넘어 실질적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 노인인권 포럼, 자료집 발간 등으로 점철된 노인 권리 강화 업무보고 내용을 지적하며, 인권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

■ (국회사무처) 편향적 행사를 허용한 국회사무처의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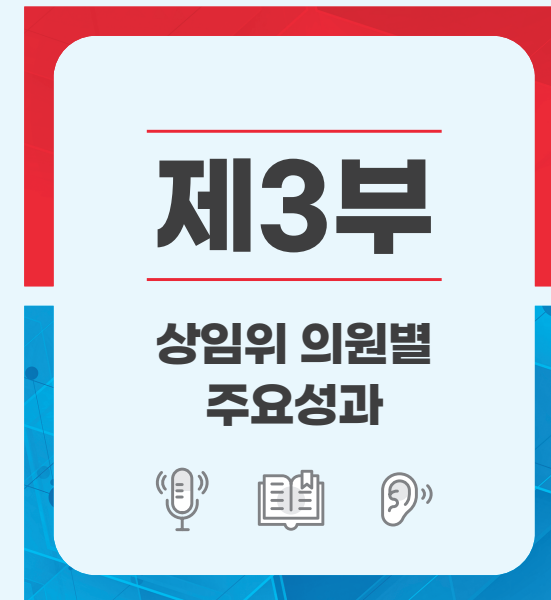
- 국회사무처는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됨을 강조하며, 중립 의무가 필수임에도 명백히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탄핵의밤] 행사를 허가한 점을 지적
- 안전요원을 30명이나 동원하는 등 국회사무처가 행사를 개최한 ‘촛불행동’의 과격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사를 허가한 점에 대해 지적

■ (대통령비서실) 민생을 저버리고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행태를 지적

-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개헌연대를 발족하는 등 입법·사법·행정의 균형을 위한 헌법의 기본 체계마저 위협하는 야당의 행태를 지적
- 야당이 반복적으로 공천 개입설을 주장하는 점을 지적하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당에서 벌어진 비위야말로 민주적 체계가 무너진 것이라 반박

■ (대통령비서실) 정확한 증인신문을 통해 영부인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타파.

-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희림이 글로벌 6위, 대한민국 1위의 설계회사란 사실을 강조하며, 정당한 경쟁을 통해 입찰을 받아왔음을 지적
- 정확한 근거없이 건설한 기업인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나아가 특검 대상에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야당의 행태를 지적



법제사법위원회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재판 등 노골적인 사법 방해 행위 지적 및 규탄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

주요 내용

■ (대법원) 이재명 재판 관련 민주당의 압박으로부터 독립성 견지 촉구 등

- 이재명 대복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근거가 없음을 선제 지적
- 민주당의 판사탄핵 추진 가능성 분석·제기 및 대응방안 강구 주문
-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김명수 前 대법원장 개혁조치의 부작용 치유 당부

■ (법무부)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싼 민주당의 사법방해 행태 지적·규탄

-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고발·탄핵소추 등 민주당의 위법 부당한 수사·재판 방해 행태 지적 및 부당한 수사외압에 맞선 단호한 대응 주문
- 전국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 급증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및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 촉구
- 보복 폭행, 협박, 상해 등 보복범죄 급증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및 가해자 신상정보 제공 등 가해자 권리구제 방안 대책 제시

■ (검찰) 이재명 대표 사건을 비롯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 이재명 대표 부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민주당 돈봉투 수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열린공감TV 허위보도 의혹 등에 대한 신속 수사 촉구
- 검찰청사내 술판 회유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민주당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 및 무책임한 선전선동 규탄

■ (감사원 등) 채상병 순직사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의혹 등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정쟁화 지적·규탄

- (감사원) ▶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의혹의 맹점 ▶ 감사원 징계 요구에 대한 기관의 자체 감경 횡행 등을 꼼꼼히 따지고, ▶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군사법원)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권 유무·수사외압 등 각종 논란에 대한 팩트 체크, 제보자의 거짓증언 정황을 따짐으로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임기 만료 검사들이 연임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검사가 기밀유출·성과부실 논란에 지속적으로 연루됨에 따라 이들의 연임이 부적격함을 지적 등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절차 진행과 사법제도 보완 촉구

법제사법위원회 박규택 의원

주요 내용

■ 대법원,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 국부유출 방지와 해양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해사법원 설치 준비 촉구
-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에 맞는 재판연구원 정원 재검토 등 제도 보완 촉구
-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절차 투명성 강화 및 지방은행 복수지정 검토 촉구
- 민생 직결 개인회생 사건을 비롯한 도산사건, 소년 및 가사재판과 형사재판신속한 판결 주문
-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통한 사회 혼란 차단 촉구

■ 법무부, 검찰, 전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안착을 위한 비자 종류 변경 검토 당부
-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범죄, 마약범죄 등 민생 사건 엄정 처리 당부
-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 헌법재판소

-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주심재판관 지정 방식 개선 노력 주문
-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상 중장기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당부

■ 군사법원,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 (군사법원) 군사기밀유출범죄 예방 노력 및 엄단 당부, 최신 과학수사기법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를 통한 완벽한 국가안보환경 마련 및 수사 촉구
- (법제처)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와 세계법제정보서비스 개선 노력 당부
- (공수처)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능력 문제 지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필요성 입증 촉구
- (감사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 및 향후 철저한 감사 당부

국민 생명 위협하는 흉악·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촉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범죄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강조!

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 의원

주요 내용

■ 국민 생명 위협하는 흉악·강력범죄에 엄벌주의 촉구

- 2016년 이후 선고되지 않고 있는 사형제 확정 판결에 대한 관심 환기
- 사형 집행시설 점검 정례화를 통한 범죄 억지 효과 제고 촉구
- 범죄자 사망해도 범죄수익 환수 가능토록 ‘독립몰수제’ 도입 제안
- 다중인명피해 유발한 상상적경합범에 대한 가중처벌 요구
- 철저한 마약 수사 위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도입 촉구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범죄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강조

- 양형기준 감형 요소 중 유족구조금을 제외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임의적 감형 지양 당부
- 유족구조금 수령 시 기초생활수급 자격 탈락하는 문제와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의 제도상 미비점 지적

■ 급증하는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대응 주문

- 촉법연령 완화 또는 촉법 대상자라도 강력범죄 저지를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
- 소년범이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소년원 학교 교육지원 강화 당부

■ 민주당의 사법질서 파괴 시도에 적극 대응

- 무분별한 탄핵 청구의 부당성 지적 및 신속 심판 촉구
-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에 따른 직 상실 관련 헌법 제84조 논란 해소
- 법 왜곡죄의 법률 체계상 문제점 지적
- 文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사례 재조명 및 감사완박법의 부당성 지적
- 판·검사들이 정치권·광장 등에서의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판결과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장의 노력 당부

■ 총체적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각 폐지 요구

- 수사능력 부족,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 피의자 황제수사·수사기밀 언론유출 등 조직관리 실패 사례 들며 공수처 폐지 강력 주장

정쟁 아닌 정책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

주요 내용

■ 민주당 수사 검사를 향한 보복 탄핵 문제 지적

- 대북송금 수사, 대장동 사건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수수 수사한 검사를 입법권 남용과 정치보복으로 탄핵
-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근거로 검사탄핵 및 직무배제 행위가 만연화
- 거대 권력의 사법농단 행태로부터 굴하지 않고,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법치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당부

■ 묻지마, 방탄, 사법방해 탄핵이 남발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기각처리로 법치실현 촉구

- 이재명 대표 방탄, 민주당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원장 탄핵 등으로 국정 마비.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선 국민법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맹공격하는 형국
- 최근 3년(‘21~24)간 발의된 19건의 탄핵소추안 모두 민주당이 발의하며 탄핵소추 남발. 검사탄핵발의도 근거빈약하고, 보복탄핵에 불과
- 탄핵소추남발로 3권분립과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 야당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무리한 탄핵에 대한 신속한 기각결정 촉구

■ 국민과 민생을 위한 사법서비스 실현

- (재판지연 해소)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 재판이 지연되면서 심지어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게 되는 경우까지 있는 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적 비용 부담, 정신적 고통, 사법부 불신 심화 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촉구
- (합리적 양형기준 설정)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민의 상식을 반영한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
- (회생절차 지원) 최근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특히 고령층 증가세가 높은 만큼 법률적 지원 및 안내 강화 요청

수사 및 재판의 효율성 제고와 공정성 인식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의원

주요 내용

■ (법무부·검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공소장 일본주의 준수 강조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공소장에는 핵심 혐의사실만 기재하고,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제외하도록 한 공소장 일본주의의 형해화 지적
- 법무부 검찰의 제도개선과 법관들의 인식 변화 필요성 제기

■ (대법원) 기습공탁 등 감형제도 보완과 일관성 있는 양형 적용 촉구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을 노린 가해자 기습공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
- 1·2심 재판부의 일관성 없는 양형 및 가중감경 요인 적용 사례 제시 및 문제점 지적
- 공탁제도의 개선과 양형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 강조

■ (감사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 시도 비판

- 회의록 공개 등 감사 과정에 대한 야당의 부당한 개입과 침해시도가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

■ (공수처) 채해병순직사건 등 신속한 수사 촉구

- 구명로비 의혹 등 야당의 의혹제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과 투명한 결과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

■ (법제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성과 있는 정부입법 추진 당부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정부 부처의 성과 있는 입법 추진 노력 촉구

이재명 개인로펌 민주당, 방탄입법 방탄탄핵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의원

주요 내용

■ (대법원)

- 주요 정치인 사건에 대한 신속·공정한 재판 주문
- 인사제도 개선, 법관 증원, 사무분담위 폐지 등 사법부 정상화 촉구
-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의 위헌성 및 사회적 위험성 지적

■ (법무부·검찰)

-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주문
-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입법과 검찰청 폐지의 부당성 지적
- 민주당과 이재명 수사에 대한 방탄·보복 목적의 ‘검사 탄핵 청문회’ 규탄
- 문다혜 음주운전에 대한 정치적 옹호 여론의 위험성 경고
- 文정부 통계조작은 국기문란행위임을 지적
- 검찰·경찰·공수처 중복 수사의 원인인 무리한 사법시스템 개혁 지적
- 마약범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 등 엄정한 대응 주문

■ (감사원)

- 文정부 방탄 위한 감사원법 개정의 직무 독립성 침해 및 위헌성 강조
- 방문진에 대한 숨방망이 처분 및 사드 환경영향평가 의혹 감사 지연 지적

■ (헌법재판소·군사법원·법제처·공수처)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 등 국정공백 장기화를 야기하는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사태 규탄
- (군사법원) 군사기밀 유출 등 무너지고 있는 군(軍) 정보망 지적 및 대북 및 해외 첩보망과 정보력 재건의 중요성 강조
- (법제처) 여당 추천권 배제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의 위법성 지적, 상위법의 ‘양성평등’에 충돌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위헌성 및 법체계 혼란의 위험성 경고
- (공수처) 수사 내용 언론 유출 행위 지적 및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여부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본질 강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야당 폭주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

주요 내용

■ (대법원) 딥페이크 범죄 대응 점검, 피해자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딥페이크 성범죄의 저조한 기소율과 범죄 대응 효과의 미비함을 지적
- 딥페이크 범죄의 무작위성과 2차 범죄 노출 가능성을 강조하며 신종 범죄에 대해 초기 대응의 중요함을 역설

■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에 효과적인 대응 주문

-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는 범죄자가 강력한 범행 동기와 치밀한 계획이 수반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지적, 재범률이 매우 높으므로 보호관찰 제도의 효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 (헌법재판소) 민주당 탄핵남발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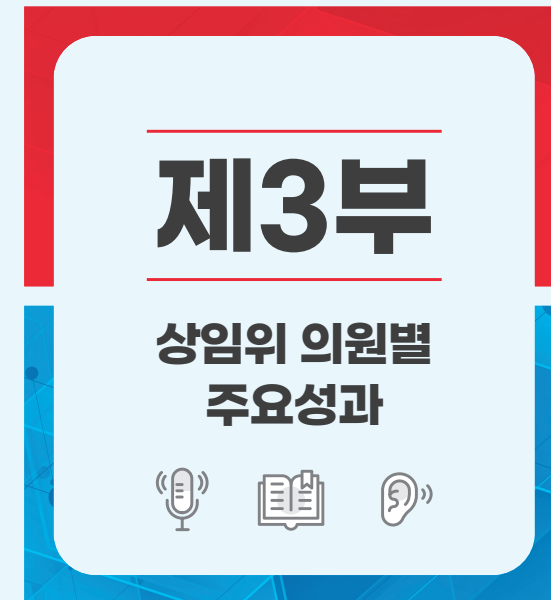
-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해 쓰인 예산이 올해에만 오천만원이 넘는다는 점과 법사위원, 검사 등 다수의 행정 인력이 소모된다는 점을 지적함
- 탄핵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에도 형사사건과 같이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문

■ (대검찰청) 민주당의 법치주의 파괴 행태 지적

-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법 왜곡죄 입법, 기소청 신설 등을 밀어붙이며 검찰의 민생범죄 대응 능력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
- 영부인 불기소를 이유로 취임 1달 남짓 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하는 등 야당의 비상식적인 법치주의 파괴 행태를 비판

■ (대전지검) 불법 대북송금 사건 심각성 지적

-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넘어간 막대한 비용이 북핵이나 미사일 등 무기체계 개발에 쓰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지적
-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야당 독주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 사실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파괴 행태를 알림



정무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국감, 경제 회복의 발판 마련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주요 내용

■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문제에 대한 개선요청

- ‘무료배달’을 내세우면서 그 비용은 정작 가맹점주 또는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한 조사·감독 지시
-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비 지원방안 발표 일주일 만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 발표한 점을 지적
- 100%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과 거래할 수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한 점을 지적하며,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글로벌 플랫폼의 불법·불공정행위 대책 마련 필요

- 조세 회피 문제는 국세청, 인앱 결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가 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점을 지적
- 각 부처별 대응이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종합적 검토·조율이 필요함을 강조

■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촉구

- 은행권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미루거나 책임 수준을 낮추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더 강한 조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요청
- 업권별 금융 관련 법령에 횡령·배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제대로 된 행정상의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점검 당부

- 단계적으로 한도를 늘릴 것인지, 시행령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예금자보호한도 관련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당부

정무위 산하기관에 대한 엄중 관리로 국가 기본질서 확립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

주요 내용

■ 금융사고 발생 금융기관 내부 통제 실패 질타 및 금융당국 지도 촉구

-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요구 및 금융업권별 맞춤형 대책방안 수립 강조
- 횡령사건 재발 시 최고 결정권자의 사퇴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 요구

■ 문재인 정권 당시 금융기관 및 보훈부 낙하산 인사 관련 조사 요구

-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8개 금융기관 63명의 채용비리 사건 규명 촉구
- 경력도 자격도 없는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자체 감사 실시 요구

■ 시장질서 무너뜨리고,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거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대책 요구

- 네이버가 증권업 라이선스 없이 주식거래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의 면밀한 검토 촉구
- 특정 가산자산거래소에 편중된 시세 정보 제공하는 네이버에 대한 우려 표명
-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 추천 서비스(AiRS) 개인정보 유용 의혹 제기
- 네이버 웹툰, 시리즈 등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 개선 제안
- 상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중국 직구 플랫폼 규제 강화 주문

■ 민생과 직결된 서민 금융 관련 문제 제도개선 촉구

-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급등 상황에서 부동산, 건설 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상향 조정 1년 유예 검토 요청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로 연결되는 상황 지적
- 시금고 선정을 위해 막대한 출연금을 쏟아붓는 은행의 출혈경쟁 개선 요구

■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사건 재조사 및 전현희 전 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자 징계 요구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흔들기 정쟁용 무리한 수많은 증인·참고인 요구를 차단하였음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촉구

정무위원회 강명구 의원

주요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강조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과세대상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증시로의 투자자가 이탈하여 증시가 침체될 경우, 모든 개인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과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

■ 코스닥 · 코스피 지수 및 밸류업 문제 지적

- 미국 나스닥과 일본 토PIX의 경우 지수증가분 대비 시가총액 증가분이 1배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5배가 넘는 상황
- ▲ 뱅킹 IPO, ▲ 쪼개기 상장, ▲ 소극적인 주주환원 및 유상증자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지수와 시총 간 괴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촉구
-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촉구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등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자발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문화 개혁 방안 제시

■ 금융취약 청년 대책 마련 요구

-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득기반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청년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
- 금융취약 청년들이 빚 때문에 신용유 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강화 및 대책 마련 촉구

무분별한 文정부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올바른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정무위원회 권성동 의원

주요 내용

■ 탈시설 정책의 폐해 지적 및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 文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후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강조
-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돌봄서비스 책임성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인질극 지적 및 폐지 필요성 제기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관한 민주당의 오락가락 정책을 지적하고 국내증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폐지가 시급함을 강조

■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신산업 대비 필요성 강조

- 현행 금산분리제도는 신산업 시대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산업간 다양한 형태의 경쟁 촉진 필요성 강조

■ 공정위 조사 전문성 제고

- 공정위에 조사기간 연장 규정이 없어 기간 연장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을 지적하고 기간 연장에 관한 법령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조사 촉구

■ 올바른 보훈문화 확산 제고 방안 제시

- 광주시 정월성 역사공원 부당성 지적 및 한유한 선생 기념사업 추진 당부
-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사적 가치있는 상징물 제언
- 민주유공자법의 과도한 특혜를 지적하고 국가보훈부가 이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꾸준히 알릴 것을 요구

서민이 행복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선진사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

주요 내용

■ 배달 플랫폼 불공정행위 점검 및 공공배달앱 시장 활성화 요구

- 배달 플랫폼 시장의 점유율 9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수수료 담합, 특혜 요구 등 불공정행위 여부 점검 요구
- 점주들의 입장을 배려한 상생협약 성사 노력 주문
- 공공배달앱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청

■ 외국계 기업들의 외부감사 회피용 ‘유한책임회사’ 꿈수 전환 지적

- ‘新외감법’ 시행 후 다수의 외국계 기업들(아마존, 애플, 아디다스, 디즈니 등의 계열사)이 외부감사 의무를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
- 쿠팡, 테무 등의 기업은 한국 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
-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법인세 납부 회피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 적용 검토 필요

■ 구글·애플의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응책 주문

- 공짜로 앱 마켓을 제공하는 미끼 전략으로 독점시장을 형성한 후 무려 30%의 과도한 독점가격 인앱 결제 수수료 과금
- 국내 게임업체들은 구글·애플과 개별 합의를 시도하고 싶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항의조차 못 하는 실정
- 과도한 수수료 과금에 대한 공정위의 냉정한 판단 및 불법적인 영업 보복에 대한 조사권 발동, 피해자 보호 관리대책 마련 강구

■ 소액주주 보호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시행 필요성 강조

- 고려아연·영풍·MBK 치킨게임으로 주식시장 혼탁 과열 양상, 공개매수 후 소액주주들 피해 우려
- 사모펀드의 공격적 M&A에 대항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기업가치 보호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및 징벌적 상속세 인하 요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발로 뛰는 국감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

주요 내용

■ 각종 금융 분야 범죄가 증가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SNS를 통한 신종 금융 사기 증가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신종 금융 사기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약속 (금융위, 금감원)
- 보험범죄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해 연간 1조원을 넘고 있어 공·사보험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지적 (국조실)

■ 국민의 실질적 불편함에 주목하며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서울 내 지역별로 은행 점포 수가 대비되며 지역별 금융 접근성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고령층을 위한 금융 격차 해소 노력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 (금융위)
- 상용 EMR 업체의 낮은 참여율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 (금융위)
- 매해 증가하는 체육시설업 먹튀 피해 및 진료비 선납 피해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 수립을 촉구 (공정위, 소비자원)
-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보훈요양원의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실질적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 (보훈부)

■ 정확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애플 코리아 대표에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과징금 205억 납부 답변을 이끌어 내었고,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에는 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시사 (금융위, 금감원)
- 2021년부터 시작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흡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구축하여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개보위)
- 국가유공자 자녀 복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보훈 의료 지원 중 한의 진료 배제 문제를 지적 (보훈부)

‘괴담백서’로 소모적인 논쟁 멈추고, ‘정책엇박자’, ‘내부통제실패’, ‘불법사금융’ 개선해 금융권 신뢰 회복해야

정무위원회 **유영하** 의원

주요 내용

■ 끊이지 않는 선전선동과 괴담의 정치

- 항당했던 광우병 괴담, 북한의 소행을 정권 자작극으로 선동했던 천안함 괴담, 사드가 만든 성주 전자파 참외를 비롯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나은 정치 혐오와 소모적인 논쟁 멈춰야
- 괴담을 생산한 정치인의 주장을 기록해 무책임한 언행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한 백서 제작을 요청함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정책 엇박자’ 개선위해 ‘징계권’ 신설 고려해야

-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이원화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의 적기성을 실기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이미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또한, 안정적인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금융위원회에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징계권’을 신설할 것을 요구

■ 반복되는 은행권 ‘내부통제 실패’

- 최근 5년(‘19~‘24.6월)까지 은행권 금전사고 금액 2,868억원, 회수율은 3%(‘23년)에 그침
-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 전 지주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면서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름
-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

■ 공공기관의 불법사금융 광고수단 전락

- 금융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검색시 클릭광고로 인해 불법대부업이 함께 검색되고, 심지어 정책금융 취급업체처럼 포장되어있음
- 기관에 문제를 지적해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이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

지역금융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위한 정부 의지 절실!!

정무위원회 **이현승** 의원

주요 내용

■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 훼손 우려, 지방 금융 활성화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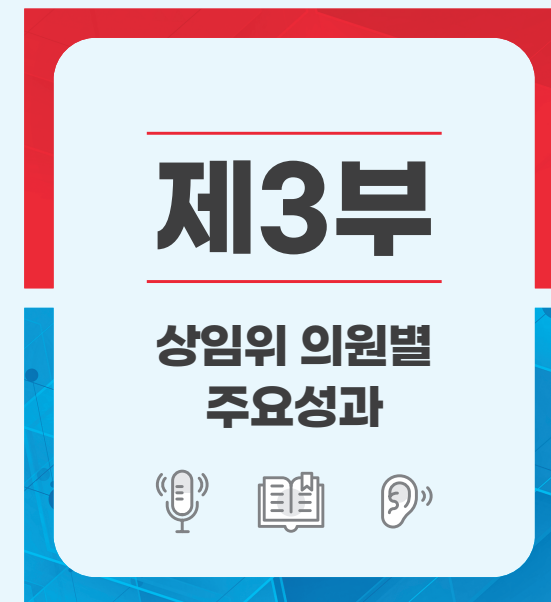
- 2020년 지방은행 적자점포 비율이 48%인 상황에서 5년간 전체 점포수를 12% 줄였고, 4대 시중은행은 적자점포 비율이 6.2%에 불과한 상황에서 점포수를 15.5%를 줄여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 훼손 우려
- 또한, 지방은행 거점지역인 부산,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제주의 155개 구·군단위 금고 중 절반 이상인 80개 운영권을 시중은행에 빼앗긴 상황임
-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지방은행 쇠퇴를 막기 위해 활성화 정책 필요

■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주당이 힘 보태 마무리 해야

- 참여정부 때부터 부산문현지구 조성을 시작해 문재인정부에서 한국산업은행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제20대 ~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법률안에 공동발의 참여
-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김병기·김정호·맹성규·박지원·소병훈·송기현·신정훈·안호영·이개호·이춘석·임호선·위성곤·전용기·전재수·황운하·용혜인·민홍철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 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보태야 할 것

■ 통합LCC 허브공항, 부산 유치 필요

- 2020년 산업은행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필요성을 보고 하면서, 합병 취지 중 하나로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Second Hub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
- 윤석열정부 인수위 시절에는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인수위에 “LCC 통합 본사가 생긴다면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면서 믿고 기다려 달라고 보고한 바 있음
-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들이 지역 기반을 서울로 옮긴 상황에서 유일하게 에어부산만 부울경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떠받치며 발전해 왔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통합 LCC 허브공항이 부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정쟁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중심에 둔 정책 중심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주요 내용

■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계기업 등의 실태와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국세청이 과세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외국계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2019년 116건에서 2023년 2건으로, 금액은 2019년 21억 8백만원에서 2023년 6천 6백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행법은 납세자가 과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으며, 2021년 법원이 1건의 세무조사에는 1회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급감함
-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이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일부 외국계 기업들이 소액의 과태료만 납부하고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회피하다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는 행태를 반복함. 그리고 이로 인해 작년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은 79.3%를 기록함
-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세회피 실태와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을 한국경제,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이슈화하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심도 있는 대책 논의를 이끌어냄

■ 전자담배 관련 입법 공백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제세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며 마약향 담배 등으로 국민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밝히고, 정책대안을 제시!

- 현행 담배사업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4년간 3조4천억(2023년 기준 1조 1,249억)원 상당의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대마 향을 가미한 전자담배 등이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등 전자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청소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입법 공백으로 발생하고 있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미부과와 국민건강 유해성 문제를 KBS와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이슈화하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작은정부·기업이 잘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구조개혁 벨트 조여야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

주요 내용

■ 공공기관 327개소 타임오프제·겸직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에 ‘몸살’

- 타임오프제 위반 정황 38곳, 노조운영비 지원 85곳, 혈세 받는 노조전임자 1,219명(年인건비 약700억 추산). 노조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공공기관 경영 부담 가중
- 지난해 겸직금지 의무 위반 221건, 무단결근 징계 42건 직전 5년 대비 역대 최대. 文정부의 태양광 몰아주기, 정규직화에 따른 후폭풍 확인. 한전 임직원들의 무더기 태양광 업체 운영, 비정규직 시절과 같은 근무태도를 보이다 적발
- 공공기관 공직기강에 분명한 적신호 켜진 만큼 강력한 공공개혁 추진해야

■ 공공기관+공무원+공무직 인건비 100조원 시대, 우리나라 규모에 적합한가?

- 공운법 소관 부서답게 문제인 정부 당시 폭증한 공공부문의 방만·비효율적인 구조를 개혁하고 기능·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작은정부를 지향할 필요
- 주52시간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유연성 없는 노동, 과도한 상속세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바로잡고 기업친화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제 및 직접 보조금 지원 필요
- 국가전략원 창설 및 국가전략회의를 통해 기획통들이 국가의 큰 방향을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사회·복지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

■ “호프집에서 산업디자인 연구?” 줄줄 새는 기업 R&D 세액공제 철폐 필요

- R&D 세액공제 받은 기업 연구소 상당수가 연구 실적 없는 유명 연구소로 확인. 보조금 지원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명백한 혈세 빼먹기 지적. 기재부·과기부·국세청의 엄정 감독과 철저한 추징 필요성 제기

■ 교육열로 인한 사회 문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 대학입시 관련 사회 문제가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했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2024학년도 서울대 입시에 시뮬레이션해 지역 인구 분산에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

野 가짜뉴스·선동에 핵심을 꿰는 반박

기획재정위원회 구자근 의원

■ 한국수출입은행, 대주단 구성·EDCF 관리 등 적극행정 나서야

- 수출금융 위한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및 예외 인정보다 산탄데르·하나은행이 대주단 구성한 것처럼 적극행정으로 민간은행과 대주단 구성해 잔여 신용공여한도 채워야
- EDCF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수원국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문제 해결해야

■ KIC, 위탁운용사에 막대한 수수료 지급하고 있지만 수익률 낮아

- 인센티브를 포함한 보수 체계 개편 등으로 자체 운용 수익 늘리고 인재유출 막아야

■ 부정·불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의 업무실태 점검 및 대안제시

- 불법 자금세탁·환치기 창구인 환전소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를 지적하고 등록 요건 강화, 등록·미등록 환전소에 대한 정부 감시망을 강화할 필요
- 국가승인 통계 대면조사 방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AI스마트조사시스템 도입, 통장 등을 명예 통계조사원으로 위촉한 방문조사 방식의 다변화 등 대안 마련 필요
- 공공조달 물품 부정납품 단속 및 근절을 위한 조달청·관세청 협력시스템 강화 필요
- 지방세 체납자 입국시 검사율을 높이고 수입물품 및 체납액 강제징수 검토할 필요

■ 주요 내용

■ 문다혜씨의 갯투, 투기, 탈세 의혹 밝혀내

-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관사 테크’ 등으로 논란이 됐었던 문다혜씨와 관련 양평동 주택 등에 대한 투자 당시 ‘갯투’였던 점 밝혀내며, 부동산규제에 앞장섰던 文정권의 표리부동, 내로남불 끝판왕 지적
- 불법 에어비앤비 숙박업 의혹과 함께 부동산 재산 증식 과정에서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자금들 대량 있음을 지적하며, 국세청장으로부터 확인해보겠다는 답변 이끌어내

■ 세수 결손 상황, 대응에 대한 가짜뉴스, 선동 관련 적극 반박

- 野에서는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에 대해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워 정부를 공격
- 이에 세제개편 당시 세입여건에 미리 반영시켜놓는 점 확인하며, 예기치 못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부진 원인임을 반박함
- 文정부 당시 무분별한 확장재정과 국가채무 폭증에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무리한 추경을 지양하는 점 확인

■ 상속세 증여세 개편 불가피해

- 1997년 제정 당시 과세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과세대상 및 징수액 확대 등 중산층 부담 가중
-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野에 맞서 물가, 부동산가격 등을 세밀히 비교하며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내로남불 지적, 왜곡, 선동’에는 팩트와 논리로 맞서고 미래세대·민생·지역균형발전 등 세심히 챙긴 정책국감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의원

주요 내용

■ 야권의 ‘적반하장·내로남불’ 격 문제 제기, 팩트와 논리로 앞장서서 반박!

- 야권이 문제삼는 ‘체코원전 관심서한’, 알고보니 文 정부 때도 ‘똑같이’ 보내
- ‘홍남기 국가채무 왜곡’ 이후 IMF, 더 이상 기재부 전망치 안써… 韓 대외신뢰성 훼손
- ‘가계부채 文504조 vs 尹33조’ 등 현 정부 손발 묶은 ‘文 옳로정권’ 천태만상
- 세관, ‘방사능 괴담 대응’ 위해 日 수산물 검사 3년간 10억·200명 투입… ‘검출 0건’
- 당정의 확고한 ‘금투세 폐지(대표발의 박대출)’ 추진… 부총리 확대 이후 주가 반등!
- 기타 ‘문다혜·이재명’ 등 민주당 인사·측근 이권 카르텔, 탈세 의혹 등 송곳 지적

■ ‘저출산 대응, 미래 산업 투자, 불법 엄단’ 큰 방향 속 경제 정책 검증!

- ‘미국은 수입금지’ 北 노동력 쓴 중국 제품, 한국은 그대로 수입? 관세청 “규정 없어”
- 미혼 2명이 신혼부부보다 유리… ‘결혼패널티’ 전수조사 후 범부처 제도개편 필요
- ‘싱가폴은 月60만원’ 육아·간병부담 덜기 위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 ‘기업승계 상종세 납부유예제도’ 시행 2년차 0건… 제도 실효성 확보 필요
- 조달청 민간 기술심사위원 9명 뇌물죄 기소·구속…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로 돌리라

■ ‘사회 구석구석’, ‘산업분야 손톱 밑 가시’, ‘국민 일상’ 세심한 개선책 제시!

- 중고거래 탈세 잡으려다 ‘세금폭탄’ 서민 잡지 않도록… 과세시스템 정비 필요
- 세무대리플랫폼 영향 ‘세무 업무량 9배 ↑’… 서버 증설, 망 유지 의무 등 대책 필요
- ‘한-일 복합운송’ 신고절차, ‘한-중 복합운송’보다 이유 없이 복잡해… 통일 필요
- 중국발 물량 폭탄에 세관직원 1인당 41만개 ‘업무마비’… 알리·테무에 수수료 부과해야
- 16개 ‘법정 보훈단체’ 인건비(국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할 필요

■ ‘지역균형발전’ 현안 해결 및 경남 ‘미래 산업’ 위한 송곳 질의!

- 한국은행 경남본부 인력규모(29명) 인구대비 비수도권 꼴등… 재배치 필요
- ‘경남 항공산업 중심’ KAI, 국비 40조 쏟아부었는데 ‘민간 매각’? 절대 불가 재확인
- 경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방산·원전·우주항공 분야도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
- 지역 중소기업 숨통 터주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상향 필요

불법숙박·갭투자·탈세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자금 흐름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

주요 내용

■ 의혹투성이 文 전 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자금 흐름,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 바로 세워야!

- 2018년 7월, 문다혜 씨 남편에게 증여받은 서울 구기동 빌라 3개월 만에 매각(5.1억)(양도세 회피 의혹)
- 2022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저서 <운명> 관련, 문 전 대통령 인세, 책표지 디자인 등 명목으로 출판사로부터 2.5억 수령(통상 외주 디자이너의 경우 5백만 원 수령)
- 영등포구 양평동 주택 매입(7.6억, 대출 X), 영등포구 오피스텔 분양(6.75억, 대출3.5억), 서대문구 주택 전세계약(4.8억), 제주도 주택 매입(3.8억, 대출X) 주택 구입 자금 출처는?
- 태국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 이용 환치기, 김정숙 여사 제3자 통한 편법 증여 의혹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철저한 추정으로 조세정의 바로 세워야!

- 2023년 구글은 3,653억 원의 매출을 신고 155억 원 법인세 납부, 한국재정학회가 추산한 구글의 매출은 12.1조 원 법인세 추정액은 5,180억 원
- 구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37조 원(28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발표. 이를 근거로 법인세 추정 시 금액은 더 증가할 것

■ 자영업자 75%, 월 100만원도 못버는 불경기…자영업자 구조개혁 시급하다

- 자영업자 가구 한달 평균 사업소득 201만원, 임금근로자의 41.9%에 불과
- 올해 2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1060조1000억,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 자영업 연체율 전년 동기보다 2%p 가까이 오른 10.15%
- 10명 창업하는 동안 8명 폐업… 지난해 창업 대비 폐업률 79.4%

“전 정부가 잘못된 일은 고치고 잘한 일은 이어받는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수민 의원

주요 내용

■ 부동산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

- 정부는 주택공급에 집중해야 함. 이를 위해 한국형 직주근접형 도시 개발, 즉 N분 도시가 필요하며, 빌라시장 정상화,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 활성화,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재부 장관에게 지적하였음

■ 참여연대발 ‘부자감세’가 아닌 적세(適稅)개혁 패키지 제시

- 세수 부담이 너무 단기간에 급증한 탓에 세원이 위축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하향 평준화 압박이 강해지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 상승과 배당의 의욕을 꺾고 있는 하향 평준화 세제,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 정상화를 제안함
-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상속 시점 혹은 상속 후 현금화 시점에 내도록 설계해야 하며, 금투세는 폐지하고 배당세를 정상화 하기위해 배당을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바꾸고 세율은 양도세에 해당하는 20% 정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상품 수출을 넘어 자본·금융수출국가로 : 체코원전 금융지원 적극나서야!

- 체코 정부의 두코바니 5호기 원전 입찰요건에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수출입은행장과의 질의 중에 확인하였음
- 한편 이번 체코 원전 입찰 수주는(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후 자본 수출의 돌파구이며 자본공급의 기회로 판단된다고 수출입은행장에게 강조함

■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율 낮아, 처리기한 규정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국세청 7개 지방청의 탈세제보 처리율이 74.2% 수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였음. 탈세제보 총 14만 294건 중 10만 4,165건만 최종 처리되었음
- 탈세적발·추징은 세무공무원의 역할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탈세는 엄연한 범죄임으로 명확한 관리규정 마련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국세청장에게 촉구함

공정 조세와 국부 유출 방지를 통한 재정 운영 개선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선 의원

주요 내용

■ 불요불급한 금융투자소득세 당장 폐지하라

- 금투세, 사모펀드·부동산 투자자에만 유리한 과세 구조
- 단기 매매만 늘어나고 장기투자 위축시킬 우려 有
- 국부 유출과 주식시장 왜곡 심화시킬 가능성 큰 금투세, 당장 폐지해야

■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매년 수천억 국부 유출!

- 구글, 약 12조 원(추정)의 국내 매출 중 대다수를 해외로 이전, 조세 회피
-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155억)는 네이버 법인세(4,964억)의 32분의 1
- 국내 발생 매출·영업이익 등의 신고 의무화로 정확한 세금 징수 필요

■ 공익사업 토지수용 세금혜택 늘려야

-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 실질적 세제 혜택 절실
- 100만 명 이상 거주지 상실, 감면을 축소로 피해 가중
- 보상 절차 중 세금 안내 부족, 가산세 등 불이익 개선 필요

■ 근로장려금, 줄 때는 언제고 뺄어내라?

- 文 정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구조적 문제로 환수액 4,100억 발생
- 대량의 민원 소요 예측 및 일선 직원 부담 가중, 고지받는 국민도 당황
- 미환수액과 민원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마련해야

■ 한국투자공사, 9년째 약 7조원 묵혀뒀다

- 기재부가 투자공사에 위탁한 약 7조원(50억 달러), 9년째 집행실적 無
- 매년 적지 않은 위탁 수수료 수령, 책임 있는 자금 운용 필요
- 올해 들어 운용 계획 마련, 위탁금에 대한 신속·효율적 운용 당부

민주당의 왜곡된 주장·선동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 전문성이 돋보인 정책국감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욱 의원

주요 내용

■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한 올바른 대응원칙 제시

- 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서 헌법상 추경편성·제출권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국가재정법상 세수 부족은 추경사유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세수부족 상황은 ‘기획’이 아닌 대응의 영역으로 행정부의 자율과 재량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
- 민생경제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가 최우선 목표임을 제시하고, 실물경제에 영향이 없는 회계 기금의 가용재원 최대한 발굴과 일반회계 불용 최소화 노력 강조
- 지출조정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

■ 민주당의 잘못된 정부흠집내기에 정확한 팩트체크로 반박

- 문재인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로 인한 국가채무 415조원 폭증 및 대규모 재정적자 만성화 문제를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회복 성과를 밝힘
- ‘한국은 GDP대비 재정수입이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감세가 아니고 세입을 확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근거로 든 IMF 통계와 보고서의 수치가 사실과 다름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국제기구에 제출되는 재정통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요구
 -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금을 쌈짓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고금 관리업무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공문으로 남기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밝힘

■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정책국감 실현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올바른 구조조정 방향제시)
 - : 코로나19 기간 원금 및 이자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차주 중 부실 처리된 차주 비율이 14.9%로 은행권 NPL 비율 0.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밝히며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한 질서 정연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강조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지적)
 - : 과세를 피하기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문제를 지적하며 이행강제금 제도 및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벌제도 도입 촉구
- (ES제도와 납품대금연동제의 중복문제 지적)
 - : 공공부문의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ES)제도와 민간부분의 납품대금연동제와의 중복적용 문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정쟁 유발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책질의

기획재정위원회 **최은석** 의원

주요 내용

■ 야당의 경제폭망론 부질없어, 내수회복에 힘 보태야

- 민주당이 특정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윤정부의 경제 실정론’, ‘경제폭망론’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어, 민생경제와 나라발전에 도움 되지 않음
- 정부는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전방위적 내수진작 정책’에 나서야 함
- 세수추계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유연한 선진국형 재정총량 관리 도입 필요

■ 상속·증여 배우자 공제 개선 필요

- “부부 간의 상속·증여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 부부 간의 상속·증여세는 공동재산의 50%까지 비과세 검토 필요

■ 증가하는 국가 총부채, 한국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 강조

- 보다 전향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 강조
- 단순히 금 매입량 확보가 아닌, 상황에 맞는 적정 금 비중 포트폴리오 마련 주문

■ 고의적·상습적인 탈세자 엄벌해 세수 확보해야

- 조세회피처로 활용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감면혜택, 전수조사 필요
- 고액 월세 임대업자 검증 필요
-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와 부의 세습 엄벌 필요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교육위원회

이제는 ‘교육격차’ 해소할 때 지역격차, 소득격차, 이념격차 해소로 ‘공정과 상식’의 교육 회복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

주요 내용

■ ‘진보’의 위선적인 교육, 이제는 이념교육 바로잡아야 할 때

- 서울시교육청의 ‘2020 지속가능발전교육’ 자료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모두의 화장실’, ‘채식 우월주의’ 교육 및 반헌법적인 ‘북한체제 선전’ 내용이 담겨 있음을 확인함.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좌편향적 내용에 대한 시정 요구

■ 의대 증원과 함께 기회균형선발도 늘려, 입시 격차 줄여야 할 때

- 고등교육법에서는 2024년부터 전체 모집인원의 10%는 기회균형선발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의대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올해 평균 3.2%에 불과하였음.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에 기회균형선발 준수할 것 촉구
-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된 입시비리.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나 후속 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졌음을 지적. 윤석열 정부에서 설립한 ‘입시비리 신고 센터’에 대한 지원 및 조직강화를 요청함
- 입시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 및 전문성 강화, 제도개선 주문

■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아닌 학생으로 인정할 때

- 현행법에선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개별적 지원을 하고 있음. 동일한 교육 기관임에도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지원격차가 있는 문제 상황을 지적함
- 현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인 만큼,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독려.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예고함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시스템 개혁 및 혁신] 대학의 30년 숙원 풀기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

주요 내용

■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추진 배경 및 의의

-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고등교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대학 자율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 교육부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이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 사유에만 지도·감독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것을 제안
- 교육부장관도 이에 대해 “대학이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줄여야 한다”며 동의 의견을 표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 인력 양성 등 공익 사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도·감독을 유지할 것을 요청

■ 대학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 네거티브 방식의 학사 운영 체제 도입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수요자, 즉 학생과 기업 등 실질적 수요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평생 학습 시대의 도래와 지자체-산업-학계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학교의 역할 개선이 시급함을 언급

■ 여야 합의를 통한 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고등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대학의 혁신과 다양한 사회·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교육부와의 협력을 당부.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개혁 방향을 제시

■ 추진 과정에서의 입법 및 제도 개선

-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 입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할 예정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점검이 지속될 것

역사교과서 좌편향 사례 지적, 야당의 거짓 선동 철폐!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

주요 내용

■ '역사교과서 심의위원 중 일부가 뉴라이트' 라는 야당의 거짓 선동에 대처

- 교과서 심의위원 중에 뉴라이트 학자 3명이 있다는 야당의 의혹(9월 24일 전체회의 당시)제기 관련,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두 명의 인사는 문재인정권 당시 임용 경력이 있고, 한 명의 인사만이 현 정권에서 임용됨

■ 문재인 정부 당시 검증에 통과한 해냄에듀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지적

-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 '전후복구를 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긍정적인 부분만 쓰고,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선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도'라고 기술하는 등 좌편향 서술 기재 사례를 지적함
- 야당의 한국교육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 관련, 야당 공세에 대응

■ 채용비위 관련자의 임용·합격 등 취소 조문 정비 촉구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부당채용한 해직교사들의 임용취소 검토 주문
 -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조문 정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추진

■ "측근 인사 자리나눠주기", 교육감의 <사학 임시이사 추천> 제도개선 주문

- 교육감 재량 100%인 <사학 임시이사> 추천제의 투명성 제고 촉구
 - 임시이사 후보자 최소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추진

■ 교육공무원 외유성 해외연수 지적 및 해외 연수 내실화 방안 마련 요구

- 해외연수계획서 사전검토 단계 중 감사관실 참여 의무화 등 검토 요구

■ 전문대의 RISE 참여 확대 방안 필요

- 전문대학의 경우 역할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들에서 소외되는 측면을 지적함. 이에 교육부는 시도별 RISE 계획(2차 수정본)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전문대학과 지자체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전문대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계획 수립 예정

의대교육 정상화, 다문화교육 계획, 정치적 편향성 극복, 교원 보호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

주요 내용

■ 의대정원 증원 관련 갈등 해소 강조

-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인증평가기관 재지정시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체 지침과 그에 따른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계획이 서로 모순됨을 지적
- 의과대학 학생 휴학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여야의정 협의체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휴학 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을 강조

■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속도를 반영한 '다문화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요구

■ 교육기관장 및 임직원들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

-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까지 '정권퇴진 옹호' 등 SNS에서 편향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고발조치 요구
- 정대근 서울시교육감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공과(功過) 여부를 질의하여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하는 답변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

■ 교직원 순직 인정 절차 개선 및 교원양성 체계 개혁 강조

- 3D프린터 수업에 헌신했던 과학고 교사가 욕중압으로 사망한 후 교육부가 안전조치를 전면 시행했으나, 인사혁신처는 발병 인과성 미입증으로 순직 불승인한 사례를 들어 교사의 질병 사망 인정 규정 개선 요구
- 학교 비정규직 교무실무사의 갑질 피해 사망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 지적
- 교대생 중도탈락 증가 상황을 고려해 교원전문대학원 구성 등 교원 양성체계 개편 강조

야당대표 특혜로 얼룩진 공정성 회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 주문

교육위원회 서지영 의원

주요 내용

■ 국민 우롱한 이재명 대표의 ‘헬기타고 나르샤’

-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헬기 전원 특혜를 받은 이재명 대표
- 특혜 배경 뒤에는 서울대병원의 전원 지침 위반을 서슴지 않았던 신모 교수의 활약 있었음. 특히, 본 의원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신모 교수의 권익위 조사 당시 진술이 동료 의사들을 앞세운 허위·조작 진술임을 밝혀내
- 서울대병원 전원지침 위반, 부산대병원의 명예 훼손, 거짓 진술 통한 권익위의 공무집행 방해가 명백함에도 서울대병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 무마 시도
-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혜택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서울대병원의 안일함 지적, 전원 지침을 어기고 특혜를 제공한 신모 교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촉구

■ 국민을 기만하는 조국 일가의 뽐뽐함과 이를 돕는 경남교육청, 서울대

-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가족 모두 웅동학원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발언. 그러나, 2022년 모친 박씨 이사장직 재취임, 2023년 외삼촌 이사 취임
- 웅동학원은 22대 총선 직전 국·공립화 교육청에 요청했다는 허위 입장문 내.허위 입장문 배포 배경에 대한 경남교육청, 교육부, 감사원에 감사 요청
- 웅동학원의 채무와 조권씨 등 웅동학원에 끼친 115억원 규모의 손해가 조국 일가의 이익을 위한 의도된 꼼수는 아니었는지 경남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을 강력 촉구
- 경남교육감에 조국 대표 모친과 외삼촌에 대한 사퇴 권고 촉구
- 한편, 조국의 딸 조민은 입시비리로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학부 입학이 취소됨. 그러나 서울대 대학원 입학은 아직 취소되지 않음
- 서울대학원 한 학기 재학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장학금 수령.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1,2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한 양산 부산대병원장 1심 유죄판결
- 입학 취소 절차 조속한 마무리, 부당 지급 장학금 환수 통한 공정성 회복 촉구

■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교육청 기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용되어야

- 17개 시·도교육청, 2024년 8월 기준 기금 잔액 14조원 규모
- 8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80억원 조성, 실집행액 44억원,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1억원 북한 직접 지원(인쇄용지, 콩기름 등)
- 3개 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으로 20여년간 교직원에게 2,200억원 무이자 대출
-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금 운용 기준 마련 촉구

“교육의 정쟁화에 대한 경계,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챙기다”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

■ 주요 내용

■ 의대진학생, 이공계 국가장학금 ‘먹튀’ 문제 지적 및 개선 촉구

- 이공계 지원장학금, 환수결정된 4명중 1명은 의대진학
- 의무종사 유예제도를 악용해 무이자로 수천만원 사용가능, 장기미납자도 존재, 최초 2년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의무조차 없어 제도운영의 부적절 지적
- 철저한 환수 및 혈세낭비 악용사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사교육 카르텔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 사교육업체-수능 출제자 간 유착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입시 비리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요구

■ 사학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불합리 및 개선 지적

- 임직연도 하루 차이(1995.12.31. 이전, 이후)로 연금수급 연령이 4년이나 차이나는 제도 설계 문제의 심각성 지적 및 제도개선 촉구

■ 시대변화 반영 못하는 학점은행제 전면 개선 촉구

- 제도 도입 초기에 만들어진 교육부 고시 등 구시대적 규제에 대한 전면적 개선 촉구
- 수많은 규제로 인해 최근 5년 신설된 강의는 1개에 불과, 반면 수업 콘텐츠 품질관리는 부실해 관련 제재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

■ 기숙사 학교폭력 심각성 지적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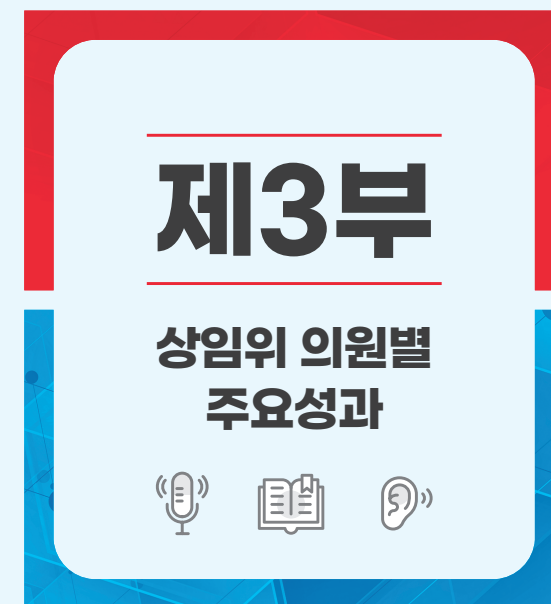
- 중·고등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현황 및 심각성 지적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예정

■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공세 문제 지적

- 전문가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부적절성 지적
- 문재인 정부 시절 검정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현 민주당 비판의 모순 및 부적절성 입증

■ 정부·여당의 독도 수호 교육 강화 등 역사의식 고취

- 독도를 정쟁의 대상화 하는 행태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
-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관련 교육 및 사업(독도체험관 운영)의 중요성과 활성화 강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쟁을 넘어 정책으로, 민생을 찾아 미래를 준비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

주요 내용

■ 과기부, 민생 현안부터 지역 현안까지

- 일본, 유럽, 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싼 스마트폰 수리비
 - ‘사설 수리업체 인증제’ 도입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주문
 - 21대 만료 ‘수리할 권리’ 되살려, ‘인증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법개선 시사
- 경남, 중학생 수 3위지만 영재고가 없는 유일한 지역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 중심지 특성 살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설립 제안
- 국내 제조업, 일손과 R&D 인력 모두 부족해 위기 봉착
 - KAIST-AIT 설립해 ASEAN 우수 공학 인재 유치해 고급인재 확보, AI 시대 맞이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계기 마련

■ 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 대드론 정책 기틀 마련

- 국가 중요 시설(인천국제공항·원전 등) 드론 출몰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 초래
 - 시설마다 적용되는 법 제도 차이, 정책적 대응체계 미비 지적
 - 대드론법 제정 통해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제안

■ 우주항공청 개청,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준비하다

- 우주항공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우주산업 기피현상’ 심화
 - 삭감된 ‘우주전문인력 양성’ 예산 지적, 실태조사 필요성 공감대 이뤄
- 우주경쟁 심화로 악화하는 ‘우주쓰레기 문제’, 5년 내 10배 이상 악화 경고
 - 우주 위험 관련 사업 예타에만 머물러, 관련 국내 스타트업 단 한 곳에 불과 지적
 - 10월 말 개최,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쓰레기 기술 개발 추진’ 등 포함. 정책 반영

■ 거대 야당 방송장악 막고, 정쟁 속에서 정책을 찾다

- 구글 위성지도에 고스란히 노출된 대통령 관저, 주요 군사기지
 - 국방부, 구글에 ‘저해상도’ 요청했으나 구글은 무시 밝혀내
 - 미국, 프랑스 저해상도 처리 사례 확인, 방통위 통한 시정 요구 요청 끌어내
-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사 87개 가운데 ‘지역 매체’ 12개(13.9%) 불과
 - 764만 부·울·경, 322만 광주·전남 제휴사 전무. 153만 강원권은 2개 존재
 - 제평위 평가 기준 문제 지적, 제도개선 요구. 권역별 인구 감안해야
- OTT 플랫폼, 한국 시장에 유독 부담 가중해. 요금제 개선 의지 끌어내

巨野의 노골적 정치공세 속 민생 지키기 악전고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

■ 주요 내용

■ 키즈폰 스팸 방지 실질적 변화 추동

- 이통3사 미사용 번호 우선 배정 및 에이징 기간 2년 이상 확대 확약
- 과기부 민생 TF 과제로 선정돼 번호 자원 배정 논의 예정

■ 불법 사금융 문제점 지적 및 포털 차단 책임 강조

- 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 사금융(휴대폰깡 등 포함) 피해 지적
- 네이버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노출 키워드 부족 문제 등 포털 책임 강조

■ 데이터센터 건립 대국민 홍보 필요성 강조

- 주요 경쟁국 대비 미비한 데이터센터 유치 인프라 지적
- 전자파 괴담 해소와 같은 과기부의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 유도

■ 직구 IP CAM 위험성 및 대책 추진

-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중국산 IP 카메라의 보안 취약 문제 지적
- 직구 플랫폼 사업자의 보안 공지 필요성 등 제언
- 과기부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TF의 추진 과제에 대책 포함

■ EBS 부실경영 및 기강해이 지적

- 유시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감사결과 공개 및 환수 촉구
- 협력업체의 부적절한 로비 문제 질타 및 EBS 공식 SNS계정 관리 미흡 지적

■ 나무위키 개인정보 침해와 가짜뉴스 유통에 경종

-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나무위키 규모 및 수익 첫 공개
- 파라과이 페이퍼 컴퍼니 의혹 제기 및 베일에 쌓인 경영진 문제 지적
- 방심위 첫 차단 조치 유도하고 심각성에 따라 전면 차단의 근거 마련

■ 네이버 제평위 재출범 제동 및 뉴스타파 퇴출 촉구

- 공정성 시비가 컸던 제평위 재출범 움직임 제동
-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재판 결과에 따라 뉴스타파 CP 퇴출 확약 유도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NO! 정부기관 마비 NO! 국민 부담 완화,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는 OK!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정훈** 의원

■ 주요 내용

■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및 방송통신 관련 정부기관 마비 행태 지적

- 민주당은 야당몫 방통위원 추천(2명)을 하지 않으며, 2인 체제를 문제 삼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내로 남불인 점 강조
- 헌법재판소 야당몫 재판관 추천(1~2명) 또한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하고, 이는 방통위 등의 탄핵 사태 지속해 정부기관을 마비시키기 위함임을 강조
-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친분이 있는 판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편파적인 판정이었다는 점을 지적
- 방통위 업무마비로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갑질로 인한 국내 앱개발자의 피해 방지 촉구

■ 국민의 통신료 부담 완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민생정책 개선 강조

-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심박스)’ 수입 제재 필요성 강조
- ‘둘리 신분증’도 무사통과 되는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의 성인 인증 사각지대 지적, 기술력 부족 및 주무 부처의 불명확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부에 대책 마련 촉구
- 공공와이파이 커버리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취약계층의 데이터 무제한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신사와 과기부에 ‘데이터 기부제’ 도입을 제안
- 해외로밍 시 국내요금 부과에 대한 통신사의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 해외직구 적합성평가 면제 제품의 1년 이내 되판매에 대한 입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국내시장 착취 행태 지적

- 애플에 인앱결제 시 다른 국가보다 부가세를 3%(총 33%) 높게 측정해, 국내 앱개발자로부터 5년간 3,500억원을 취득한 점을 지적, 과징금 청구 또는 피해 비용 청구 필요한 점 강조

문재인 정부 실정을 바로 잡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갑질 행위를 지적하며, 중국산 CCTV,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등 국민 안전 확보에 앞장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 실정 바로잡기(과학기술 알박기 기관장들의 전횡·탈원전 청구서 질타)

-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 과기부 산하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 갑질 의혹 제기
 - 임신한 직원 앞 유리컵 내려찍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조사 착수
- ‘알박기 인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주먹구구식 회계 운영 의혹 제기
 - 기 종료된 사업 명목으로 법인카드 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다수 발견
- ‘文정부 디지털 뉴딜’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 부실 관리...편취 100억, 환수 저조 질타
- ‘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계속운전 신청 지연으로 향후 5년간 손실만 5조 원
- ‘文정부’ ‘20년 북한에 전략물자 반출 승인...전략물자 수출 통제 위한 컨트롤타워 시급

■ 가계통신비 인하·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해결 등 민생 이슈 앞장

- ‘KT 대표님 보조금 받아보셨습니까?’ 단통법 폐지·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요구
- ‘국가주요시설·군부대·경찰청 등에 중국산 CCTV 약 3만대 설치, 해킹 유출 우려 지적
- 딥페이크 음란물 시정요구 ‘21년 1.9천건→’24년 6천건 3배 ↑, 감시인력은 ‘제자리’ 지적
- ‘16년 도입된 ‘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연장은 ‘0건’...석학 떠나는 대한민국 현실 지적
- ‘노벨 문학상’ 한강 작품, 해외 사이트서 불법 유통, 원천 차단 요구

■ 국내 시장 위협하는 글로벌 빅테크 갑질·불공정행위·국내플랫폼 범죄 온상 지적

- 한국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5년간 71% ↑, 40% 저렴한 가족·학생요금제 한국만 불가 질타
- 한국에서 큰 수익 내는 구글의 노골적인 망 사용료 미납·법인세 회피 지적
- 불법성인물 판촉의 장으로 전락한 구글·메타, 마약·환치기 온상 ‘엑셀방송’ 방치 SOOP 질타
- 유엔제재 대상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 작품, 네이버 쇼핑서 불법거래 실태 고발

■ 민주당의 상습 탄핵으로 무너지고 있는 방통위·공영방송, 정상화 시급

-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 판결, 민주당의 상습 탄핵과 위원 추천 부작위에 면죄부 지적
- 방통위 마비 장기화...민주당 방통위원 추천 공모엔 ‘대장동 변호사’, 이마저도 ‘중단’ 질타
-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이해관계 있는 변호사들이 차린 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소셜미디어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 및 두뇌유출 방지 체계화 등 현장중심형 정책을 이끌어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

주요 내용

■ 소셜미디어(SNS, 숏폼 콘텐츠 등) 플랫폼의 청소년 위해성 문제 지적

- 아동·청소년기의 SNS 남용, 나아가 중독 문제가 가정의 영역을 넘어 청소년 우울증 증가 현상의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문제 제기
- 최근 실태조사 결과 10대의 SNS 이용률 상승과 우울증 환자수 증가에 비례하여 국내 청소년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황인데 반해 관련 특별조치 없음
- 해외 주요국은 이미 SNS 사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등의 자구책 마련 중
- 청소년 SNS 중독 문제 실태에 따른 확실한 대처 방안과 각 규제에 따른 효과 정도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위한 범부처 디지털 포용계획 마련 요구

■ 이공계 인재유출 관리체계 마련 및 국내 과학인 처우개선 위한 제도 검토

- 더 좋은 연구환경과 처우를 보장해 주는 해외 주요국을 찾아 국내 과학 분야 학생(2.9만명)과 연구자(4만명)가 해외로 유출(2023년 기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
- 특히 물량공세와 국가 주도로 해외 과학인재와 기술 유출을 꾀하는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 기술 안보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 중
-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선진국들처럼 중국의 인재·기술 탈취에 대한 대응 정책 신속히 마련하도록 요청
- 또한,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현격히 낮은 여성과학인과 출연연 연구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의원실에서 직접 현장 목소리 경청 및 의견분석
- 출산·육아 관련 제도들 중 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검토가 즉각 필요한 사안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 제고 노력 및 출연연 정년 연장 제도 등 요청

■ 방심위의 민원인 IP유출 실태 파악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마련

- 방통위 소관 민원인 정보에 개별 민원인에 대한 IP주소까지 외부로 흘러간 정황 파악하였고, 이는 내부의 조직적인 지원과 민원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판단
- 이러한 비위 행위는 조직 시스템 붕괴 및 공적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 민원인의 IP주소 정보유출을 밝혀낸 국감 질의 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 정보 무단 유출 및 사찰 혐의와 관련, 새로운 범행 정황을 밝히는 성명 발표 등 추가 규명을 위한 주춧돌 역할 수행

거대 야당의 과방위 횡포, 춘풍추상의 의미 되새길 필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

주요 내용

■ (방통위) 딥페이크 불법 영상 대책 마련 촉구

-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의 심각성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한계
- 방통위의 삭제차단조치 강화 및 미디어 교육 강화 필요 지적

■ (방통위) 식물 방통위를 만든건 민주당

-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 방통위 2인 체제서 135건 의결처리해 무효화되면 대혼란
- 방통위법에 '3인 이상' 출석 의결 조항 없고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음

■ (과기부) 배달 중개 플랫폼 상위 3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95% 차지

- 배달 플랫폼 시장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
- 3사 독과점으로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배달앱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임을 지적
-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은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함

■ (과기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13년, 노벨상 수상은 아직...

-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연구원 내부의 조직문화 개선 등이 필요

■ (방심위)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지적

- 증언을 통해 민원인 불법 사찰한 방심위 내부에 조력자가 있음을 밝혀냄
- IP 주소 외에도 어떤 민감 개인정보가 민원인 사찰에 악용됐는지 추가 범행 반드시 규명할 것을 요청

가계통신비 절감 위해 LTE요금제 인하 등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끌어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

주요 내용

■ 5G요금제보다 비싼 LTE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안 마련

- LTE요금제 이용자는 1천 3백만명에 달하지만 5G보다 비싼 요금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었음
- LTE는 5G와 비교해 볼 때 속도는 1/5밖에 되지 않아 느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
- 윤석열정부 들어 고가인 5G 요금제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인하했지만,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LTE요금제에 대한 합리적 개편 필요
- 특히 청소년요금제 및 어르신요금제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값비싼 요금제로 인해 피해가 컸음
- 과기부 장관 및 이통3사로부터 LTE요금제 개선을 위한 약속을 받아냄

■ 2천4백만명이 이용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인 2천4백만명이 25%의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음
-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고객의 경우 12개월 약정에 비해 혜택은 같은데 중도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큰 불합리한 문제 지적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약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중도해지에 따른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하는 피해 발생
- 방통위에 전기사업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을 비롯해, 과기부와 이통사들로부터 선택약정제도 개선을 위한 약속을 받아냄




■ 무약정 가입자 1,230만명, 1조 3,835억원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마련

- 소비자가 선택약정을 신청할 경우 25%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잘몰라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1,230만명에 달함
- 선택약정 미신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홍보 필요성을 촉구하고, 중도해지 반환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을 통해 1조 3,835억원의 가계통신비 절약을 위한 정책 촉구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외교통일위원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능동적 외교 대응과 국격에 걸맞은 ODA 추진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의원

주요 내용

■ 미국 대선 이후 예측되는 통상환경 변화 속 국익수호를 위한 경제안보 대응

-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 및 경제 정책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미 투자를 대폭 늘린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미국 내 총영사들의 아웃리치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 강화 강조

■ 중동 정세 불안 고조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마련과 기업활동 보호 등 국익수호 노력 강화

- 지속하는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의 분쟁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 마련 촉구하고, 원유·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동 경제안보 대응 긴급 협의체’ 구성 제안 등 다각적인 조치 주문

■ 공적개발원조(ODA) 분절화 개선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 우리 정부의 2024년 기준 ODA는 총 46개 기관에서 1,976개 사업으로 분절화되어 수원국의 현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나이지리아 독립형 미니그리드 구축,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사업 등
- ODA 사업 발굴과 사후 모니터링 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입법 등 정책 기반 마련 촉구

■ 연락두절 고독사 위기 북한이탈주민 70명 연락처 조속한 확보 필요

-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위기 고위험군 7,200여 명 중 결번 70명 연락처 조속히 확보하여 북한 이탈주민 보호 사각지대 해소할 것을 촉구

■ 공익을 저해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사단법인 자격 박탈할 것

- 2020년 국군포로들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북한 역류 시 강제노역 피해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음에도 경문협은 제3 채무자로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는 법원의 추심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막고 있음. 통일부는 공익을 저해하는 경문협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주문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외교부·통일부)

외교통일위원회위원회 김기웅 의원

주요 내용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 계기로 북한의 미술품을 무단 불법 반입한 사실을 지적하고, 필요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구

-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특사 방북 등을 위해 방북했던 우리 측 고위인사가 만수대창작사 등에서 제작한 북한의 대형 미술품을 반입하고 그 대가로 거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음을 적시
-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동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북한인권법 제정 8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실천의 핵심기구임에도,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출범 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질타, 통일부장관이 여야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조속히 국회 몫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
- 또한,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의장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 위법판결이 난 것을 인용하면서, 통일부장관에게 동 판결의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미 협의를 추진하는 등 우리 정부가 분발할 것을 촉구

- 담대한 구상 발표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
-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태도에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 조치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를 진전시키고, 장기적인 로드맵 등을 마련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대비할 필요

■ 해외주재 공관원들의 재외근무수당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현재 재외근무수당은 주재국의 환율변동에 따라 가감하게 되어있는데,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
- 환율변동과 함께 물가변동도 반영하여 가감하는 제도를 수립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자체 핵무장 필요성 강조

외교통일위원회 김기현 의원

주요 내용

■ 자체 핵무장 통한 생존 전략 필요성 강조

- 국정원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전망, IAEA 사무총장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주변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약화로 북한의 핵 개발 가속화 가능성 존재
-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여론이 71.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핵무장 필요성 적극 검토 요구

■ 북한 도발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등 적극적 압박 방안 강구 역설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무단 가동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 확인
- 미국의 북한 자산 압류 및 배상 판결 등 강력한 조치에 비해 미흡한 우리나라의 법적 책임 추궁 노력 지적

■ 미래지향적인 신(新)한일관계 수립 촉구

-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취임 후, 핵 반입 및 공유 검토의견을 확인
- 글로벌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맞아, 폭력적 반일 물이 선동 중단 및 협력적인 한일 관계 수립 강조

■ 북한 정권의 폭압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강조

- 문재인 회고록 속 북한 도발에 대한 미화 지적
- 통일 촉진, 북한 주민 인권 보호 등 엄정 대응 요구

■ ‘해외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사업’ 확대 추진 요구

- 예산 증액, 공관별 교과서 성과평가표, 나라별 맞춤형 내용 반영 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증대 필요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의 세계평화 위협을 규탄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의원

주요 내용

■ 북한의 헌법개정 및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연대를 통한 강력한 제재 필요

- 북한이 헌법개정을 통해, ‘두 국가’를 명문화하고 통일·동족 개념 삭제 및 영토·영해·영공 분쟁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
- 고도화되고 있는 러·북 밀착 견제를 위한 외교라인 최대 가동 및 대북제재 노력 강조

■ 미·중 무역갈등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로 국내 경제안보 불안감 해소

- 미국의 대중 첨단산업 수출제재에 따른 국내기업 HBM 중국 수출제재 가능성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점검 및 만전 당부
-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시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적극적 대응을 통한 국내 경제안보 영향 최소화 필요성 요구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기반으로,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신규 소비시장으로서 아프리카 대륙과 교류 강화 제언

■ 중국·북한 관계 이상 현상 예의주시 및 시진핑 조기 단독 방한 제안

- 중국·북한 관계의 이상 현상에 대한 중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 상황 점검
-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된 사실을 파악, 이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및 러시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
- APEC 개최 이전, 시진핑 주석 단독 방한 제안 및 외교적 노력 당부

■ 일본 신임 내각 출범에 따른 정세변화 분석 및 대일 현안 지속 관심 촉구

- 일본 신임총리 선출 및 새로운 내각 구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일정책 추진방향 검토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성 재점검 및 주일대사관 지속적 관리 감독 주문
-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에 대한 조속한 이행 요청 및 이시바 시게루 신임총리의 추도식 참석 요청 제안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는 ODA 실행 및 인력확보 촉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면밀 관리 및 美대선 철저한 대비 당부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

주요 내용

■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6조원 시대, 분절화 문제 심각

- 우리나라 ODA 규모는 6조 2,629억원(2024년 기준)으로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 46개 기관이 1,976개 사업을 추진 중
- 우리 정부의 ODA는 ▲유·무상 분절화, ▲무상간 분절화, ▲수원국 원조창구 분절화로 인해 집행비용 및 수원국 행정비용 증가, 원조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음
- 시행기관 및 소재사업의 과감한 폐기, 수원국과 원조사업의 선택과 집중, 중장기적·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외교부의 ODA 총괄 등 ODA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함

■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 사기 저하의 삼중고에 빠진 글로벌 중추외교

- 우리나라는 유사경제규모 국가들에 비해 외교인력도 적을뿐더러 2008년 이후 정원이 정체되어 과학 기술외교, 경제안보외교 등에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임. 과감한 조직 확대 개편 및 사기진작, 실무자급 외교관들의 유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국익차원에서 면밀 관리 필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무분별한 괴담 확산 대응 예산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조 5,500억원이 투입되었음. 오염수 방류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과 선동도 계속될 것. 주무부처의 하나인 외교부의 각별한 대처가 필요함

■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액션플랜 철저한 준비 필요

- 2024년 11월 5일 미 대선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구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함. 시나리오별 철저한 외교·안보 대응책 준비가 필요함

한반도평화조성과 국익 최우선의 외교정책 추진에 만전 기해야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

주요 내용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교민안전대책 마련 촉구

- 이스라엘, 레바논 거주 교민과 동명부대원의 안전 확보방안 마련 시급
-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동명부대)의 선제적 철수 검토해야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총리의 대승적 결단을 통한 한일 관계 복원 평가 및 신임 이시바 내각과 협력기조 계승 필요
- 한일 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 공고화 추진

■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평가

- 국익 최우선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 없도록 만전 기해야

■ 북한 오물풍선은 GPS 장비를 이용한 일종의 군사 실험, 정부가 레드라인 명확히 제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 갖춰야

-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의 원인이라는 것은 북한의 구실일 뿐이며 북한은 풍선을 날려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군사활동에 목적
- 정부가 명확한 레드라인 제시하여, 유사시 엄정조치 경고해야

■ 경문협 저작권료 공탁금 약 30억 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 배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촉구

■ 북한이탈주민의 남북통합문화센터 이용 및 참여확대방안 마련 촉구

■ 북한내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생사 확인여부 및 송환 대책 촉구

■ 러-우 전쟁에 북한의 파병, 정확한 규모 파악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레드라인 설정 촉구

- 북한 파병은 유엔협약 및 대북제재 위반으로 엄정 대응필요
- 북러간 군사밀착으로 핵미사일 기술 교류등 동북아 안보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대비책 마련해야

세계질서 재편과 북한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야

외교통일위원회 **인요한** 의원

주요 내용

■ (외교부) 국제 질서 재편을 앞둔 위기에 외교적 정책 및 해결 능력 필요

- 이스라엘과 중동분쟁, 확산 양상에 철저한 대비해야
- UN의 대북감시체제 종료, 한국 자체의 대북 감시체제 만들어야
- 북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주장해야
- 북의 러 파병, 미 대선 등 세계질서 재편에 고도의 외교적 전술 갖추어야
-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청사 신축, 10년간 하세월·사업비 증가에 관리 철저 주문

■ (통일부) 북 정권에는 단호한 대처, 북 인민들엔 인도적 지원해야

-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국 내의 분열과 갈등은 허락해선 안 돼
- NLL, 남북기본합의서 문제에 대한 재평가·재결속을 위한 검토 및 준비해야
- 북의 러 파병에 따른 군사적 위협에 국민안전 최선으로 해야
- 한국관광공사 등 남북교류협력기금 상환문제 해결위한 방안 마련해야

■ 외교부 재외공관, 세계질서 재편에 따른 전략적 외교술 발휘해야

- (주미대사) 미 대선, 북핵 위협, 한미 원자력협정개정 등 철저한 대응 필요
- (주UN대표부) 안보리 이사국 수임에 따른 역할 및 안보리 제도개혁 촉구
- (주멕시코대사) 멕시코 내부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 최소화
- (주과테말라·엘살바도르·도미니카공화국대사) 경제협력 도모, 교민사회 치안 안전 유지 필요

■ (재외동포청) 센터와 청으로 분리된 지 1년, 정상 업무 수행토록 노력해야

- 주민번호와 한국국적이 없는 동포도 이용하도록 인증센터 운영 제대로 해야

■ (한국국제교류재단) 정부 직접 지원사업 가능토록 회계이관 필요해

- 국제교류기여금 감면에 대한 사전 대응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국방위원회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위한 내실있는 변화 촉구

국방위원회 성일중 의원

주요 내용

■ CCT 처우개선 및 인원모집 방식의 변화를 통해 조속한 완전 편제

- 공군 항공특수통제사, 일명 CCT는 매해 늘어나는 인원유출과 유입 인원의 부족으로 편제 인원 대비 현인원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훈련 강도가 높음에도 타 특수부대, 비슷한 민간 직렬보다 낮은 급여와 1년에 3번 선발하는 적은 선발 횟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따라서 현재 월 23만원 정도인 위험근무수당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여 CCT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선발 횟수를 3번에서 과거처럼 5번으로 늘려 완전 편제를 조속히 달성해야 할 것

■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의 시급성

- 「‘19~‘23년도 제2작전사 관할구역 군부대 內 드론 침입 및 무허가 드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4건의 드론 침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반해 「제2작전사 관할구역 內 국가중요시설 드론 침입 현황」은 ‘20년(2건)에서 ‘23년(588건)으로 4년 새 294배 늘어남
- 이와 같은 차이는 현재 제2작전사 內 드론을 탐지할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육안 식별을 통해서만 드론 침입을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2작전사 관할구역 군부대 內 대드론 통합방호 자산 확보 및 민·관·군이 협력하여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전문장교의 민간유출 대책 마련 필요

- 국방부로부터 연간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임관하는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의 임관 포기, 임관 후 장기복무 미신청 등의 민간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는 민간대비 낮은 군 임금과 경직된 조직문화, 느린 승진, 순환보직으로 인한 학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정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음
- 봉급 일괄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수당 신설, 특례조항을 통한 조속한 진급과 사이버 작전 임무보장 등으로 사이버 전문사관 복무 의욕을 고취해야 할 것

지키는 안보, 실천하는 예우, 함께하는 의료, 민·관·군 상생을 위해 국방부가 앞장서야!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

주요 내용

■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추진시 군 관련 제약사항 사전 협의 시스템 마련

- 고양 창릉지구 내 탄약고 등 군사시설 문제로 3기 신도시 개발에 3년이상 차질 발생
- 부대이전이 늦어지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
- 국방부는 국토부·LH와 협력하여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향후 공공택지 개발시 지구계획 수립 전 국방부와 국토부 간 사전 협의 시스템을 마련

■ 백령도 6여단 MRI 도입을 통해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

- 서북도서 의료환경이 열악하여 내륙으로의 외진 시 다양한 불편사항 야기
- 6여단의 경우, 매년 164명이 MRI 촬영을 위해 외진을 나가야 하는 상황
- MRI 도입시 장병의료여건 개선 및 지역 주민 이용 가능
- 서북도서 근무 장병과 주민들을 위한 MRI 도입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 필요

■ 인구소멸 위지지역, 민·관·군 협력으로 활력 되살려야!

- 군 숙소 노후화와 민간임대주택 부족으로 군무원의 주거 문제 심화
- 인구소멸지역 군무원들이 인근 도심에서 출·퇴근하며 월세·교통비 부담 증가
- 행안부·국토부의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통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으로 군의 주거문제 해결 방안 마련
- 민·관·군 협력 주거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 6.25 참전 소년·소녀병 예우 법안 통과 촉구

- 6.25 전쟁 당시 소년·소녀병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법안 마련
- 참전 소년·소녀병의 희생을 기억하고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마련
- 기념비 건립, 전쟁기념관내 소년소녀병 전시공간 별도 마련, 장병 정신교육 콘텐츠 개발, 추모행사 등 선제적으로 가능한 명예선양사업 우선 추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장병 사기·복지 증진과 국방경영 효율화 주문

국방위원회 강선영 의원

주요 내용

■ 9.19 합의 관련 비정상적 조치 진상 규명 요구와 안보태세 확립

- 9.19 합의 이후 기밀에 해당하는 한강하구 해도를 제작, 보안성 검토 없이 北측에 제공한 경위에 대한 조사 요구와 해당 지역 대비태세 강화 당부
- 2020년 북한의 我 GP 총격 시 文 대통령의 “교전규칙 정비” 지시 이후 합참의 대응체계 변경 여부 점검 및 ‘신속성’과 ‘충분성’ 대응개념 유지 당부
- 2작사, 해경에 해안경계 책임 조기 이관 및 신속대응 위한 조직개편 요구
- 현존위협에 기초한 합동성 강화 차원의 효율적인 전력소요 결정 필요성 제기

■ 현역과 군무원 및 예비역에 대한 사기·복지 증진

- 육군회관 대체 시설인 로카우스 운영사업 변경에 따른 국방부 지원 요구
- 4평 국방레스텔에서 쪽잠 자는 중령들의 숙소환경 지적, 복지개선 요구
- 수당체계의 문제점 지적, 위험·자격·근무지에 의한 기준 재정립 방안 제시
-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생활보조대출’ 금리 5.9% → 4.9%로 조정 요구
- 실병 지휘 중견 간부의 업무 과중 실태 확인 및 유급휴가 필요성 제기
- 정상적 부대관리 중 부득이 지휘책임을 지는 지휘관의 구제 제도 마련 요구
- 성비위 행위자 무혐의시 구제 방안 및 초급간부 병역의무 적용 검토 요구

■ 국방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정상적 정상화 제도 개선

- 각 군의 자체 종합감사 미 실시 등 지적, 국방부 차원의 체계 정립 촉구
- 육군 체력단련장 담당 직원의 임의 티 배정, 수탁업체 골프 접대 수수, 관리사장 채용 비리 의혹 등 부정 운영실태에 대해 국방부 감사 요구
- 임관 6%의 육사 출신이 중령 → 대령 진급률은 59%, 합참 근무 대령의 76.8%가 육사 출신인 문제 지적, 全 출신 기회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AI 기반의 합동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분류 조기착수 촉구
- 현용전력 ‘부품단종관리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부품공급망 관리 필요성 제기
- 유사·중복 R&D에 대한 분산투자·연구에 대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기
- 병무청에 심리검사 개선 촉구 및 3D 체형측정기 통합운영 방안 검토 요구

GP 부실검증 문서 영상 최초공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아파치 헬기 도입 재검토, 북한 쓰레기풍선 등 도발 대응방안 마련 촉구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

주요 내용

■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 문서·영상 최초공개! 문재인 정부의 ‘가짜평화쇼’

-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실시된 북한 GP 불능화 검증 당시 문서와 영상을 공개해 우리 군이 지하시설 파괴여부까지 확인하지 못한 사실 지적
- 당시 검증이 부실하다는 합참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북한 GP 불능화’ 허위 발표를 실시했고, 북한 GP와는 달리 우리 GP는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되어 약 1,500억원 투입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혈세 낭비와 안보 공백을 초래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병역면탈 처벌강화 및 제도개선

- 군무원 과다 이탈 현상에 따른 주거지원 대책 필요 및 초급간부 및 중견간부 이탈 가속화 현상에 따른 경제적 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
- 올해 10월 기준 육군 간부 2,800명이 관사 입주를 못해 대기 중, 군무원 관사 입주율은 19%에 불과, 이사 잦은 군 특성 감안해 이사화물비 현실화 필요
- 지난 6년간 총 1,037명의 국외여행허가 위반자 중 86%가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0.5%에 불과, 병역면탈 행위 제도개선 지적

■ 북한 침투 무인기 3D 프린터 흔적 제시 및 아파치 공격헬기 도입 재검토 촉구

-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침투 무인기의 3D 프린터 가공 흔적을 제시하며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가 아님을 확인
- 미국 FMS 도입 예산이 '22년 대비 '23년 15.6배가 증가했고, 무인기 비중 증가 등 현대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아파치 36대 도입에 대한 재검토 촉구

■ 북한 쓰레기풍선, 핵미사일 위협 대응방안

-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대공포 등 격추와 레이저, 항공기 사격 등으로 대응할 경우 여러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 드론을 활용한 쓰레기풍선 대응방안 촉구
- 북한 우라늄 고농축시설, KN-23 개량형, KN-25 등 커져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대응방안 제기

국방정책의 혁신적인 변화 촉구 및 대안 제시! 前 文정부의 조직적 국민 기만과 안보농단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

주요 내용

■ 70년간 유지한 軍 경계작전 개념 전면적 전환의 필요성과 대안 제시

- '21년에 경계작전 병력이 15%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27년까지 과학화 경계작전체계 성능개량사업에 4,619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 2013년부터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 병역자원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전후방 경계작전에 투입 되는 아군병력은 줄어들지 않은 것을 지적
- ▲GP, GOP 철책선 후방에서 적 침투를 차단하는 벨트 개념 변경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에 AI, 드론 통합운영으로 병력 절약 ▲축선별 경계전담여단 편성 운영 ▲상비사단을 축선 중심에 배치해 평시에 전면전 및 대침투작전 대비 훈련으로 작전 수행을 제시, 경계작전 개념 전환 촉구.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적극 동의 및 개선방안 검토 답변을 받아냄

■ 敵 생화학 공격에 무방비 상황 지적, 구멍 난 화생방 전력 보완 촉구

- 육군 보유 화생방보호의는 '22년 기준 32만 벌로 전체 소요의 38% 수준을 차지하며 '22년 장비 신뢰성 검사결과 상당수가 불합격으로 폐기됨을 지적
- 보관 중인 치장물자는 일부를 개봉해 육안 및 기능 검사 후 합격 시 보관하고 불합격 시에는 부대가 보유한 장비를 일체 폐기하는 비효율적인 상황
- 敵 화생방 위협에 대비하여 화생방보호의 등 신속한 물자 확보를 주문하고 육군참모총장 대상으로 신속한 전력보완 강구 답변을 받아냄

■ 文 정부의 조직적 국민 기만과 안보 농단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촉구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 故이대준 씨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과, 조작·은폐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 촉구함
- 北 최전방 경계초소(GP) 시범 철수의 상호 검증 조작에 대한 비판 및 '가짜평화쇼'를 진두지휘한 軍 수뇌부 및 결정권자 법적 책임을 촉구함
- 전·평시 軍 대비태세 지역인 한강하구의 민감한 정보(조석, 암초위치, 수심 등)가 기술된 해도(海圖)를 北에 넘겨준 文정부 관련자 법적 처벌을 촉구함
- 文정부 당시 육사와 3사관학교의 군사학(북한학, 전쟁사 등) 양성과정 축소를 이적행위로 규정. 축소된 군사교육과정 환원과 보충교육 실시를 촉구함

요동치는 안보환경에 따른 우리 軍 대비태세 확립과 체질 개선 촉구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

주요 내용

■ 北, '적대적 두 국가' 선언

- 북한의 대남전략은 방법의 변화만 있을 뿐, '핵을 기반으로 전 한반도를 북조선에 편입, 평정' 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으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새 해상국경선'을 주장하는 등 무력도발 가능성이 상존함을 지적
- 정치적 목적의 '반일감정'에 국가안보가 휘둘러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일본과도 안보를 논의할 수 있고, 전작권 전환 문제도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중단해야 함을 강조

■ 北 회색지대 전술에 따른 능동적 대응 촉구

- 北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살포 현황 알림 등 수동적 대응을 넘어 드론 등을 이용한 공중 수거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 강조
- 2018년 軍 사이버심리전 임무 해제 이후에도 北에 의한 사이버 대남선전선동과 北 체제 고무·찬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軍 자체적인 北 사이버 영역에서의 심리전 등 대응역량 강화 방안 주문




■ 야전부대 업무난 가중 해소 및 民軍상생을 위한 국방부 노력 강조

- 중견 간부들의 전역률이 軍의 전투력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軍 연령정년·계급정년 등 정년제도를 완전히 재설계 할 것을 촉구
- 정원 변화 없는 부대 창설과 부수병력의 빠른 운용으로 인해 야전 간부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원 충원 계획을 마련하고 수당체계 개선과 주거여건 보장, 육아휴직 여건 보장 등 처우 개선 강조
-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측면에서 강원 접경지역 지자체가 건의한 민통선 조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의 침소봉대식 정치공세 차단 및 민생의제 주력,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효성있는 대응책 마련 촉구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

주요 내용

■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 반박·대응 통한 균형감 확보 및 민생의제 주력

- (증인 채택) 정쟁 목적의 무더기 증인채택 강행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 편파적 회의운영 및 동행 명령장 남발 등 과도한 보여주기식 행태 지적
- (정치공세 차단) 세관 의혹 관련 백해룡 경정의 일방적 허위주장 편승한 정치공세 논파, 관저 의혹 등 일방적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의혹해소, 김건희 여사 한강경찰대 격려방문 관련 침소봉대식 정쟁화 차단

■ (선관위) ‘선거보전금 미납’ 실태 지적 및 적극적 회수대책 마련 촉구

- 광노현 전 교육감 등 다수 선거사범의 고액 미납실태 지적 및 실효성있는 제재 강화 필요성 제기. 향후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확정받을 시 대선비용 434억 회수 위한 제도적 방안과 정당보조금 회수 등 법개정 필요성 강조
- ‘제 식구 챙기기’식 지역선관위 상임위원직 운영실태 질타 및 제도개선

■ (행안부·경찰청) 정치단체 탄핵모금 등 불법기부금 논란 엄정대응 촉구

- 보수대통령 탄핵 등 매년 정치권 결탁하여 사회갈등 극대화하는, 사각지대 방치된 정치단체 불법모금 논란에 철저한 관리감독·감시체계 촉구
- 행안부 ‘기부금품법 위반’ 입장확인, 경찰청 ‘미진한 부분 철저히 수사’ 강조

■ (행안부) 지역화폐 부실관리 실태 질타 및 민주당 논리 반박

■ (행안부) 반지하주택 침수예방 지원강화 등 ‘재해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조

- 침수방지시설 설치미흡 실태 지적 및 지자체별 실효성있는 정책추진 독려
- 재해 취약지대 내 주택 풍수해보험 대상 적극발굴 등 보호망 강화 필요성 제기

■ (경찰청) ‘의사블랙리스트 유포’ 플랫폼 메디스태프측 증인 질의 통한 현장 의료진 보호망 강화대책 모색, 스토킹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망 강화 촉구

■ (지자체) 서울 ‘한강버스’, 경기 ‘이재명표 정책실태’, 울산 ‘산단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부산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급식’, 경북 ‘불법 성인게임장 대책’ 등 지역현안 집중점검 및 복지·안전 등 민생중심 정책적 개선방안 모색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행정·안전분야 발전 방향 제시

행정안전위원회 김상욱 의원

주요 내용

■ 신종 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력 보강 및 전문성 확보

- 가상화폐 기반 다단계 사기, 사이버도박, 산업스파이 등 미래형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주문
- 딥페이크 등 고도화·지능화·전문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 전문성 마련 방안 주문
- 촉법소년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책 마련 촉구

■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일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소방청 차원의 적극대응 촉구
-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을 비롯한 경찰 처우개선 방안 마련 주문
-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공무원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 주문

■ 공공기관 비위행위 등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점검

- 공무원연금공단, 민감정보 유출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 질타
- 경찰공제회, 경력직 부정채용 문제 지적 및 혐의자 수사의뢰 촉구
- 충북도 출연 공공기관, 업추비를 통한 지인선물 구입 등 혈세낭비 지적

■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과 민생회복을 위한 대안 제시

-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정치 편향적 위원 구성 문제 지적
-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마을금고 설립 취지 강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전이 체감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의원

주요 내용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감사

- 신규 임용 공무원 퇴직 비율 증가세에 대한 실질적 대비책과 공직 인재확보 대책 마련 요구
- 유권자 가스라이팅 등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정치편향 여론조사기관 대책 촉구
-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자 출마를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
- 김건희 여사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명태균이 사익을 위해 정치인을 판 사건으로 공천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힘
- 문다혜의 음주운전을 규탄하며, 불시 음주운전 단속 등 철저한 예방 요구
- 대통령 관저 증축에 문제가 없으며,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야당을 규탄
- 영부인의 자살 예방 활동을 정쟁으로 삼는 야당 규탄
- 경기라운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예산낭비 행정 중단을 촉구
-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현금성 기본소득 등의 지자체 복지 포퓰리즘을 지적
- 북한 기여 인물을 추모하는 광주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화교류 등 협력사업의 장소로 대안 제시

■ 국민이 안전을 체감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감사

- 국민의 현 위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송되도록 재난문자 시스템 개선 요구
- 증가하는 사이버범죄(도박·마약·딥페이크 등) 대책 마련 및 위장 수사 확대 촉구
- 절도 등 무인매장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 적극 마련 요구
- 면허인증 의무화를 통한 PM 무면허운전 근절과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 촉구
- 취지와 달리 심리치안이 낮은 중심지역관사·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제도 개선 촉구
- 대공수사권 완전 경찰 이관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적극 수사 요구
- 소방 출동 지연시키는 민원성 생활안전활동 출동 감소 필요

■ 민생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감사

- 특례시 권한 확대 자율통합지원금·특례시 지원 특별법 마련 촉구
- K-컬처밸리(라이브시티) 조속 재개를 통해 문화관광산업·지역경제 성장 필요
- 제주도·충북 레이크르네상스 등 지자체 관광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관련 현안 꼼꼼히 살펴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 의원

주요 내용

■ 국민 안전이 최우선, 사고 예방책 및 후속조치 촉구

- 대남방송 소음피해 상황 전달, 간접 피해까지 대책 마련 촉구 ▲각종 예산지원사업 ▲법령 개정 통해 제도적 개선 등 적극 지원 약속 이끌어내
- 외부충전소 관리 사각 문제 등 소방당국 전기차 화재 대비책 미비 지적. 리튬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인증기준 마련 촉구해 12월까지 소규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 성능 KFI 인증기준 제정 답변 받아내
- 시청역 사고 당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차량 억제 못 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 역시 안전 기준 및 강도에 대한 설계기준 미비. 안전기준 설정 및 시설물 강화에 행안부 주도적으로 나설 것 촉구

■ 부처·기관의 잘못된 행정 실태 지적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 재난문자 발송 건수 60배 폭증했으나 긴급하지 않은 상황, 중복 발송, 단순안내 문자 발송으로 국민 불편 증대. 행정안전부 송출기준 개선 촉구
- 경찰청 대마 상시 재배 및 빠른 생육이 가능한 실내밀경 정보 파악 미비. 대마 씨앗 판매 사이트도 쉽게 접속 가능. 실내밀경 대응 검토 요구
-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위법행위 발견되어도 조치 미흡, 강력한 제재 촉구 및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등 여론조사 제도 개선 제안
- 선관위 관련 규정 미비로 검직 관련 실태조사 안해. 행정기관 연 2회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근거조차 없어. 관련 규정 도입 촉구

■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어가는 지방시대, 지역 현안까지 꼼꼼히 살펴

- 의대 증원 반대하면서, 지역 의대 설립을 통한 증원에는 찬성하는 야당 이중적 태도 지적. 지방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의대생 증원 필요성 역설
- 청주공항 코로나 이전 여객 수요를 넘었음에도 만성 적자. 공항경제권 개념 도입해 도에서 공항 인근 개발 주도하는 방안 제안
- 현대자동차 23년 만에 광주 국내 공장 설립했으나 노동자 측 약속 깨고 금속노조 가입 및 파업 위기 조장. 1대 주주로서 광주시 역할 강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촉구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대구·경북 행정통합 성공적 추진 위한 행정안전부 역할 촉구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행정체제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특례 지원 등 범부처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 요구

■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 지정 중단 지적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 마을기업 지정 예산이 2년 연속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 지정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 좌초 위기
-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방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인 만큼 행안부의 신규 마을기업 지정 재개 및 마을기업 지원 확대 촉구

■ (소방청) 지방 소방재원 안정적 확보 위한 대책 마련

-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안전 예산 추가 확대를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32.99%에 이르는 잔여분을 소방안전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촉구

■ (소방청) 지방소방본부 직급 체계 개선 시급

- 지역 현실에 맞는 지방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균형있는 안정적 소방 활동 보장을 위한 소방관 직급 체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소방청) 1년 내내 서 있는 소방헬기, 가동률 제고를 위한 국산화 대책 필요

- 경기도 소방헬기 1대가 정비로 인해 작년 한 해 전혀 가동되지 못하는 등 전국 소방헬기 31대가 정비로 이유로 평균 100일 이상 미가동
- 현재 운용 중인 총 31대 가운데 국산헬기는 4대에 불과, 원활한 정비 여건 마련을 통한 소방헬기 가동률 제고를 위해 국산화 도입 시급

■ (경찰청) 지역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서 인원 효율적 배치 촉구

- 지역경찰 관서별 출동 건수 격차 심각한 상황 지적
- 지역 치안 수요 및 관서별 조직 진단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경력 배치 방안 마련

근거없는 의혹제기 근절, 민생 살피는 정책국감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의원

주요 내용

■ 대통령실 관저공사 의혹, 보안성 감안한 정당한 문제제기 되어야

- 대통령실 관저공사 보안성 강조되는 특수한 성격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 오물풍선 등 대남위협 수위 강화
- 관저공사에 관한 무리한 자료요구 및 의혹 부풀리기 안보 및 보안 위협

■ 행안부장관 방첩사 관련 총암고 출신 회동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 중단

- 안보범죄 수사협력 관련한 회동을 계엄논의로 왜곡하지 말라
- 군내 정보, 방첩 라인을 총암고 출신이 장악했다는 근거없는 논리 중단

■ 김건희 여사 119독점구조대 방문은 일선 소방관 격려차원의 정당한 방문

- 119독점구조대 방문의 목적, 방식, 행보 어느것 하나 비판받을 이유없음
- 김정숙 여사의 화성 소방서 방문과 김건희 여사 의전 및 행보 비교시 김건희 여사의 방문은 절제된 의전과 단순 격려 차원의 방문

■ 서울시 TBS 폐국 위기, 文정부 방통위가 초래, 민주당 결자해지 필요

- TBS 폐국 위기, 스스로 자초한 문제, 자구책 확보노력 민주당 가로막고 있어
- 서울시, TBS 자구 노력 지원을 통해 정상화해야

■ 지방소멸대응 지수 관련 표준데이터 확보해야

- 원인과 상황 진단을 위한 일관된 표준 데이터 필요하나 지방소멸 진단통계 제각각
-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위한 표준 데이터 확보 수립해야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관리 체계 강화해야

-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위험도에 노출, 찾아가는 상담사 인원 늘리고 지원체계 강화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대공 수사, 한 치 빈틈없이 재건해야

행정안전위원회 정동만 의원

- 의사 대리수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문다혜 음주운전사고 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체계 강화해야
- 부산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 완수해야
- 경북 APEC 성공적인 유치위해 정부, 국회의 지원 필요
- 울산시 사회적 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긍정적, 관리체계 강화필요
-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필요

주요 내용

■ 한없이 초라해진 대공수사,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선 안 돼

-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하락한 국보법 위반 기소율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국보법 위반사건 타관 이송 대폭 증가
- 2024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폐지 시행, 문재인 정권이 망친 안보 실상
- 경찰의 대공수사 첩보능력, 수사경험 부족 등 우려, 이대로 괜찮은가

■ 양문석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관련 철저한 수사, 재발방지 대책 시급

- 딸을 앞세워 위조서류를 제출해 소상공인에게 갈 대출을 가로챈 양문석
- 대출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새마을금고의 총체적 관리부실 심각
- 담당자 극단선택했지만, 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히고 재발방지해야

■ 진실화해위원회 유해발굴 사업, 예산삭감하고 행안부로 이관해야

- 유해발굴 사업 용역업체 선정, 담당자 1명이 좌지우지
- 사업 담당자, 용역업체, 평가위원 지인관계, 계약 몰아주기식 독점 운영
- 내부 감사 실시하고 필요시 담당자 업무배제 및 징계요구

■ 한국에너지공단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적절

- 한국에너지공대에 전남도, 나주시가 각각 연 100억, 10년간 지원 약정
- 예산을 지원하는 전남도와 나주시 재정자립도는 중하위권
-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 지원은 부적절

■ 문다혜 불법 숙박업 운영, 불법 숙박 수사, 탈세까지 연계해야

- 문다혜 불법 공유숙박 운영 정황 확실
- 불법 숙박 자체도 문제지만 불법 소득에 대한 탈세 역시 문제
- 적발 시 세무당국과 연계해 탈세까지 한 번에 수사해야

행정력 제고와 국민 안전에 집중,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내실있는 변화 주문

행정안전위원회 조승환 의원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사업 발굴 능력 부족, 정부 적극 지원해야

- 지방자치단체의 저조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자원 부족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부족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힘
- 펀드 운용 초기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전혀없음을 지적함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전략적 접근과 철저한 검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함

■ (인사혁신처) 변화없는 공무원 제도, 현 상황에 맞는 개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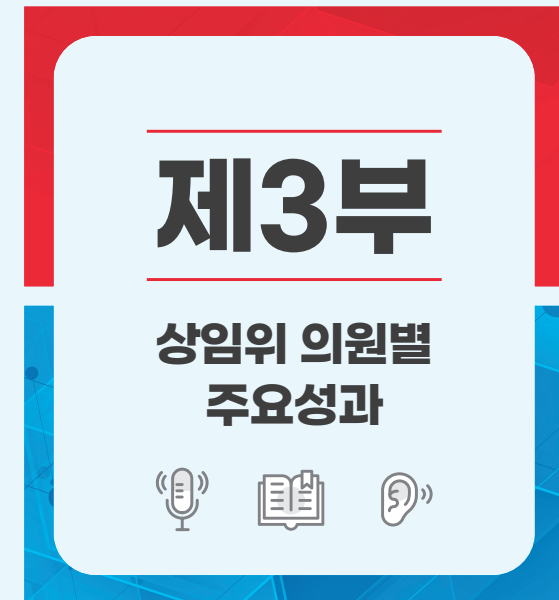
-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증가에 대한 현실성 있는 처우개선, 공정한 보상 등 젊은 세대 공무원에게 매력적인 인사제도 개발·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을 촉구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도보다 고발에 치중하는 선관위

-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임에도 제도보다는 기소율 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임
- 이와 관련 선관위에서 고발 전 사전 시정요구 등의 내역, 심의위원회와 중앙선관위 결재과정 중 재조사·반려 내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며 제도 활동보다는 고발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함
- 선거가 올바르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안내에 집중하고 고발 절차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경찰청) 날로 고도화되는 지능범죄, 수사역량 고도화 필요

- 범죄 수법이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지능범죄 검거율은 3년 연속 15개 범죄유형 중 최저 검거율을 기록. 또한 지난 5년간 투입된 수사 예산과 수사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경찰의 치안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경찰의 수사 독립성 확보 이후 현장 수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등을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위증 및 권력 남발, 사돈 문제 등을 밝혀내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기관 사업 관리 감독 미흡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

주요 내용

■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반복되는 위증과 내로남불...테니스협회 관리단체지정에 대한 직권남용 여부 등 팩트체크

-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여부, 감사원 감사 시기, 미흡한 결격 사유 등 거짓말과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업무 방해 혐의 밝힘
- 이 회장의 각종 발언을 확인하여 위증에 대한 고발 검토 진행

■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사돈의 체육계 왕국화 문제 제기

- 이 회장의 3선 연임 위한 정관 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셀프심사 등 위법성 지적
- 전 모 부장(회장의 사돈), 최단기 승진·최장수 재직 등 각종 특혜 의혹 제기
- 국가대표 수당관리자로 선수·지도자 수당·법인카드 방만 사용 지적
- 회장의 3선 연임 저지 및 체육회 개선 필요성 촉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관리 감독·감시 모니터링 미흡

- 사행산업 구매상한 규정 위반 적발 사례 증가 및 부실한 관리실태 지적
- 불법 해외로또 구매 및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난립에 대한 감독 부실 지적
- 온라인판매 및 그린카드 제도 확대, 신분증확인 시스템 구축 요구, 로또사기 및 해외로또 사이트 감독 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문화체육관광부, 메달리스트 병역 특례 관리 미흡

-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병역의무 대체 특례 제도'에 대한 운영 부실 문제 제기
- 증빙 사진·날짜·시간 불명, 복무 시간 미확인, 사진 조작 등 문제점 지적
- 명확한 제출서류 확인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제안

■ (그 외)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동물) 보존 관리 미흡

- 대형 연예기획사, 아이돌굿즈 판매의 위법 행위 지적 및 개선 요구
- 사회적 물의 일으킨 연예인 복귀 창구 전략한 OTT 플랫폼 지적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존재 확인 및 시급한 회수 촉구

대한체육회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집행,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대한수영연맹의 채용 비리와 국가대표 선발 의혹,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민간외교관 반크 활동 재조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주요 내용

■ 조기축구회 보다 못한 대한체육회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 집행

-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회장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40억 원이 넘는 돈을 회장 측근의 인건비로 지급,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회계 관리 부실, 회장 측근들로 채워진 불공정한 올림픽 참관단 구성, 회장 입맛에 맞는 특보단 채용 등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임을 최초로 밝혀냄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지적

- 정몽규 회장이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연임 승인 권한을 가진 스포츠공정위원장에게 골프 접대를 한 사실과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등 워크숍에서 숙박 및 골프장 사용료 등을 회원가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지적

■ 대한수영연맹의 채용비리와 파리올림픽 계영 800m 국가대표 선발

- 대한수영연맹 임원진들이 직원 불법 채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과 파리올림픽 계영 800m 국가대표 4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최하 성적을 거둔 6위 선수가 갑자기 국가대표에 포함된 특정 선수 몰아주기 의혹을 처음 밝혀냄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대변, 민간외교관 반크의 활동 재조명

- 참고인 질의를 통해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25년째 우리나라의 잘못된 역사와 정보를 바로잡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 온 반크의 활동을 재조명하여 중국의 문화공정과 역사왜곡에 대한 민관협조체제를 이끌어냄

■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료집과 역사왜곡 실상을 알리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

[역사지킴이] 숨어있거나 왜곡된 우리 역사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해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

■ 주요 내용

■ 광복 알린 최초의 한국어 방송 소개

- 일왕 육성 방송 4시간 전, 광복절 당일 오전 8시 ‘미국의 소리(VOA)’에서 일제 해방을 알린 한국어 방송을 송출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
- 국가유산청·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사료 발굴 및 보존을 위한 노력 필요성 강조, 광복 80주년까지 의원실 보고 요구.

■ 정몽규 회장의 축구협회 사유화 논란, 축구센터 건립 및 현대산업개발 유착 의혹

- 축협의 자료제출 내용과 달리, HDC 2022년 자문 계약 체결 및 파견 직원 확인 통해 국가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확인, 허위보고 질타
- 관리자문 현장소장 파견으로 HDC가 천안 축구센터 사업 관리를 통한 다양한 이득 취한 점 확인. ‘이득 없다’고 한 정몽규 회장 위증 혐의 지적
- HDC 소속 측근이 11년간 축협 주요 업무 담당하고 대의원 상당수가 정 회장 이해관계자로 불투명한 축협 운영 지적. 문체부에 정회장 축협 사유화 의혹 및 HDC 유착 의혹 감사 요구
- 의원실 감사결과에 따라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권고

■ 한국관광공사 일했던 인연만으로 25억 수의계약? 검은 커넥션 전수조사 필요

- 여성기업 혜택으로 다수의 수의계약을 맺는 등 관광공사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실질적 운영은 남편이 하는 ‘바지사장’ 의혹 지적
- 현장실사 등 부실 감독 실태 질타, 관광공사 수의계약 전수조사 및 감사 요구

■ 손기정·남승룡 등 우리 선수 11명, IOC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이름 되찾아야

- 손기정·남승룡 등 우리 선수 11명이 IOC 홈페이지에 일본 국적과 일본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어 한국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
- 문체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IOC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약속

■ “고구려 계승한 발해” 중국어 설명 누락한 국립중앙박물관

-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역사왜곡하는 현 상황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발해관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설명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부분에서 누락되고, 외국인 전시 해설에서 발해관 누락된 사실 지적
- 국립중앙박물관장 사과 및 즉시 시정 약속

K-콘텐츠 보호 위한 정책 제언, 전직 대통령 가족 문제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욱 의원

■ 주요 내용

■ 딥페이크와 안무 표절 등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대책 촉구

- 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수립 주문
- ‘뉴진스-아일릿 안무 표절’ 관련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제도 마련 강조

■ 한강 작가 소설 등 인기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실태 공개(5년간 대응건 300% 폭증)

- ‘해외 저작권사무소 구축’, ‘국제 공조 체계 확립’ 등 인력 및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 불법 패스트무비 관련 ‘저작권 침해 정보 → 권리사 신속 제공’ 주문

■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 강력 대응 당부(5년간 예술인 임금체불 30억)

- 임금체불, 불공정계약 등으로부터 예술·창작인 보호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 구성 주문

■ 중국 문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미비 및 대응 전략 부재 지적

- 십수년간 중국 성급 문화유산 등재 현황 방치로 문화 침탈 자초, ‘주기별 현황 최신화’ 등 대책 수립 당부

■ 전직 대통령 부인 및 자녀 문제 지적

- ‘김정숙 여사 샤넬 한글 재킷’ 기증 과정에서의 문체부 차원 실체 규명 필요
- 문다혜씨 소유 제주도, 영등포 부동산 ‘불법 숙박업 의혹’ 관련 문체부 조사 촉구
- 文저서 디자인비 명목으로 문다혜씨에게 지급된 ‘2억 5천만원’에 대한 ‘불법 증여’ 가능성 제기

■ 남북사업 무단 추진(심의 규정 어기고 240여억 규모 51건 사업), 대한체육회 회계 운영 부적절 및 회장의 과도한 정치활동, 배드민턴협회의 불공정 후원계약 및 후원사 유착 의혹, GKL 유령 여성기업과 7억 규모 부적절 수의계약, 성희룡 해임 원장 1천여 만원 성과급 지급 등 부처 및 산하기관, 부실·방만 운영 질타

대한체육회 및 산하 협회들의 병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의원

주요 내용

■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에 대한 느슨한 감사에 대한 지적

- 다년간 대한체육회 산하단체(협회)들의 독단적 운영 및 병폐를 묵인
- 문체부에 대한체육회 관리 부실에 대한 2차 책임 및 전면적인 감사 요구
- 기재부, 문체부의 적절한 승인 없이 자체 규정만으로 특정기업 수의계약, 독점공급권 등 특혜 제공
- ‘19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수의계약 총 162건, 지급된 정부보조금 약 300억 원. 특정 기업 몰아주기 문제 제기

■ 대한배드민턴협회 다년간의 고질적 문제 지적

- 안세영 선수의 단독 인터뷰. 본인 동의 없이 후원사 광고 무상 동원 폭로
- 개인 자격으로의 국제대회 출전 연령 제한 완화 불가에 대한 문제 제기
- 협회장, 협회 고질적 문제들 미해결로 인한 무책임과 무능함 지적

■ 대한민국족구협회 임원들의 횡령 및 위법 행위 의혹 제기

- 대한족구협회 후원금의 20%를 임원들의 이름으로 기부금 대납처리 확인
- 겸직 신고 없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협회 전무이사직 역임
- 대한체육회 자체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 조치 필요

■ 한국관광공사 9년간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지적

- ‘16년부터 9년 동안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204건 약 279억 계약
→ 204건 중 수의계약만으로 182건 약 127억 계약
- 과업수행과 전문성이 부실한 업체임에도 지속적으로 계약한 현황 지적
- 관광취약계층에 제공되어야 할 열린관광 사업, 실제로는 특정업체 수익제공
- 한국관광공사 자체적 감사 필요성 제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불법적 행태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중오 의원

주요 내용

■ 이기흥의 자선단체 사단법인 서담 운영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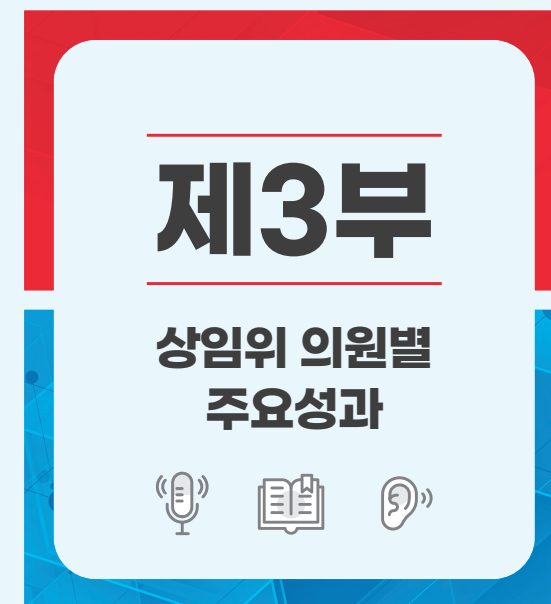
- 이기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서담이 설립 이후 장학금 지원 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자선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서담의 재정 운영 서담은 2016년 첫해에 약 1억 원의 자금을 자선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제기
- 사단법인 서담의 등기 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며 사무실도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

■ 이기흥의 특별 사면 및 범죄 이력

- 이기흥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선고 이후 상고 포기를 하였으나 6일만에 대통령 특별사면 받아 사면을 미리 인지한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 제기
- 범죄전력 등의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 검증이 불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 지적

■ 이기흥 부인(김현숙) 세금 체납관련

- 이기흥 회장의 부인이 세금 상습체납으로 7차례 이상 부동산 압류당하고 현재까지도 근저당에 설정되어있는 것을 지적
- 대한체육회장 당선 이후에도 세금 미납인 상황 지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속 가능한 농업·수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와 정부 대응 촉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

주요 내용

■ 농가 경영 안정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농가경영 안정화와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밭상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및 대책,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등 주요 농정에 대한 국민 조사 결과와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 촉구) 쌀 초과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시장격리 등 수급 조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 (농촌 외국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 제언) 외국인력 도입 절차와 관리 인력 부족으로 지연 현상이 심화 되면서 농가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해 이를 해소할 것을 제언

■ 친환경 농업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현황 점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현황을 점검하고, 직불제 확대·개편 등의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 (탄소중립목표 달성 점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담당 부서의 직제 상향을 통해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 제언

■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

- (어획량 감소 문제 지적 및 수산자원회복계획 실효성 제고 촉구)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어종의 어획량 감소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래 식량 안보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 (연안침식 대응) 기후위기에 따른 연안침식으로부터 해안 생태계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 (전기차-배터리 관련 해상화재 대책 마련 촉구) 전기차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상 화재 위험에 대비해, 소방 장비 확보와 매뉴얼 구축, 선원 교육 및 훈련 체계 강화를 촉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형 민생·정책국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주요 내용

■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현장국감’

- 직불금 부정수급 이면에 임차농 문제를 조명, 철저한 조사를 촉구
- 임차농 농지개선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제언
- 가축방역관 부족 만성화, 축산농가 등 민간 참여 유인책 개선방안 강조
-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실태 지적하며, 불법농약 근절 대책 마련 촉구
-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체계, 병해충 대비책 강화 촉구
- 3천억 투입하고도 전국적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차단을 위한 수종 전환, 지역 맞춤형 방제, 민관 합동 등 적극적 방안 필요성 강조
- 산불진화 헬기 가동중단, 노후 등 문제점 지적하며, 산불진화 대응책 강조
- 매년 1천명의 산림 종사자 안전사고, 안전교육의 실효성 재검토 촉구
- 93%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 예방책 강조
- 어구실명제 유명무실 실태, 중국어선의 범장망 불법어구 등 지적, 해양쓰레기로부터 해양생태계 지킬 방안 촉구
- 불법조업 철저히 단속해 어족자원 보호하고,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 강조

■ 지역경제활성화 비전을 제시하는 ‘민생국감’

- 합리적인 농업진흥구역 해제방안으로 농민 재산권 보장
- 농촌 현실 반영해 발농사 기계화율 높이고, 개발농기계 보급률 제고 강조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사각지대 개선 방안 강조
- 정원의 사회·경제적 가치 조명, 국가정원 지정조건의 역차별 해소 제언
- 지역농축협 및 수협의 대출연체금 급증 관련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강조
- 성장잠재력 큰 ‘내수면 어업’ 및 ‘해양레저산업’ 발전 방안을 제언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덕흠 의원

■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국감’

-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 푸드테크산업 육성으로 초부가가치 창출, 미래 농업을 위한 비전 제시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국내 연안에 100톤 이상 248척 침몰선박의 2차 사고 예방 방안 촉구로 철저한 국민불안 해소, 안전 확보 방안 당부
- 연안침식 가속화 문제, 지자체와 대응 강화 필요성 강조
- 매년 1천마리 해양보호생물 폐사,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 지켜낼 체계적 대책 마련 촉구

■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폭등한 배추 가격 원인 진단 및 이에 대한 대책 촉구
-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심화. 지역에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에 전국 균등 분배 내용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
- (농작물 재해보험)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빈번해져 농사는 더욱 어려워졌지만, 보험료 할인율은 과거와 동일하고 2021년부터 할증률은 오히려 높아져 농민에게 불리한 보험 구조가 되고 있음. 할증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 강조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대표를 당연 겸직하며 이중으로 연봉과 퇴직금을 받는 점과 농협중앙회 내부 인사 문제 지적
- (농협은행) 他 시중은행보다 시·군 지점 비율이 높은 농협은행이 고위험 ELS 상품을 고령자,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절반 이상 부당하게 판매한 점 지적
- (농협은행)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협은행의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감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지적

■ 해양수산부

- (전기차 대책) 선박 내 전기차 선적과 전기 선박을 포괄한 화재대응 종합 대책 촉구
- (어촌뉴딜 300사업) 부실한 사업 계획과 잦은 설계 변경으로 최초 계획한 어촌 활성화 목적이 퇴색됨을 지적

■ 산림청

- (목재등급평가사) 평가사의 보수교육 법적 반영 미비와 부족한 홍보 및 인식으로 인해 자격자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점 지적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내 춘양목산림체험관이 준공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16년간 방치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점 지적

농어민 권익보호·소득향상·희망 농어촌 건설 역점! 기후변화·전략작물·쌀값 등 정쟁보단 합리적 해법 제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

주요 내용

■ 대한민국의 근간, 농수산업의 현 주소 진단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

- 기후변화로 매년 농어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농림부의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 →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및 재배법 개발 · 보급 촉구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는 재해보험은 불합리 → 재해 피해는 농어민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 제도개선 요구
- 연간 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유통비용은 오히려 49.7%로 증가한 맹탕 정책 질타 → 산지 조직화 · 규모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제시
- 밀, 콩 등 주요 곡물 비축량이 2개월 미만에 불과해 식량안보에 무방비인 상태 지적 → 선도기업 지원,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 국산 곡물 비축 강화 지시
- 해양풍력산업 자본의 61%가 외국자본으로, 우리 바다가 해외의 돈벌이 장소로 전락 → 수산업 피해 보전 자원 마련과 어민 요청사항 반영 요구

■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특혜 비리 강력 비판

- 3연속 김치품질회 수상한 유명업체 및 ‘신토불이’ 외친 농협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 →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단속 강화와 엄격한 처벌 촉구
- 고금리 대출 이자 장사로 5년간 72조원 벌어들인 농협, 횡령 만연해도 회수율은 35% 그쳐 → 고금리 대출 제도개선 및 내부 비리 철저 단속 지시
- 임직원에 400억원대 한도초과 · 저금리 특혜대출 시행한 공공기관 질타 →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지시

■ 농수산업 인프라 효율화 촉구 및 반복되는 혈세 낭비 지적

- 삼천포수협 위판장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 강조
- 대형기선저인망 조업 구역 확대 및 경남해양과학고 잠수·수상안전훈련센터 건립 지원 요청
- 미조항 방파제 조속한 설치 및 남해군 어항 기본시설 설계비 예산 반영 촉구
- 무분별한 사업 설계변경으로 최근 5년간 3조 9천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본적 제도개선과 관리체계 혁신 촉구

지역소멸에 직면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입체적 노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이만희 의원

주요 내용

■ 생산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민생국감’

- (농촌인력 확보)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정부지원 확대는 물론,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발농업 기계화와 스마트팜, 농업로봇 사업개선 촉구
- (가축방역 확충)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실태점검 강화부터 가축방역관 전문교육 확대,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인력구조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 (민생물가 관리) 연간 생산량을 예측하는 ‘농업관측’의 정확도 개선으로 유통공사의 효율적인 농산물 구매비축을 통한 농산물 물가관리 필요성 지적

■ 농촌발전 백년대계 위한 ‘정책국감’

-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및 물가안정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협 조합들의 업무역량 향상 촉구와 함께 청년농 육성 위한 「후계농어업인법」, 「한국4H법」 등 입법 지원
- (농촌인프라 개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왕진버스 사업 확대 및 농업유산의 관광자원화 촉진하고, 농촌의 식품사막 현상 개선의 시급성 제기
- (스마트팜 사업관리 철저) 농어촌공사의 첨단농업 스마트팜관련 대규모 하자과 공사지연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필요성과 민간 감리 도입 등의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산림 위한 ‘환경국감’

- (산불 대응 역량) 지자체 정보 공유와 활용이 미흡했던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 및 야간 투시경 활용 위한 철저한 교육관리 요구
- (도시숲과 산림경영) 부족한 생활권 도시숲 확충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의 시급성 제시

■ 해양강국, 수산강국 위한 ‘대안국감’

- (해양폐기물) 바다쓰레기 발생량 7년째 동일한 수치 재활용 지적, 내년중 재측정 / 예산 두 배 늘 때 수거량 증가는 절반 그쳐 사업별 예산 효율성 분석 주문
- (수산자원 보존) 한중 어업협정 부당성, 수협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 확대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규제 선제 대응 · ESG 등 정부 지원 강화
- (해상 국경범죄) 15년째 제자리인 해경 외사인력 증원 · 전문성 강화 요구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잘사는 농어촌 만들기에 최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

주요 내용

■ 민생국감

- 금배추 사태에 앞선 경고에도 안일했던 문제 개선
- 급격한 기후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랭지 배추 대책 수립
-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 조기 배정 및 물량 측정 합리화
- 불투명 포장재 생산연도 표기 규제 개선 촉구
- 비진흥지역 발직불금 단가 인상 필요
- 일몰을 앞두고 있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 동해안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한 추가 준설선 도입
- 연안정비사업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기준 조정
-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촉구
- 감척사업 지원금 대폭 확대
- 어민들에게 부담되는 임시검사 문제점 개선

■ 안전국감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철저한 점검 실시 촉구
- 리튬배터리 장착 고출력 농기계 본격 상용화 전 화재·폭발사고 대책 수립
- 지자체 농작업 안전재해 조례 제정 확대
- 지자체와 관리권 다툼에 농업시설물 보수공사 지연 문제
- 농업 관련 시설 안전 점검 및 보수 즉각 실시
- 수산물 위판장 위생 등 안전성 개선사업 조속 추진
- 산사태 방지 위한 사방댐 및 사방시설 관리 문제점 개선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촉구
- 임업 재해발생 저감 대책 수립
- 지진해일·태풍 대비 해안방재림 조성 실적 제고
- 노후화·불안전 저수지 개보수 및 안전기준 강화 촉구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 정책이 시행되어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조경태** 의원

주요 내용

■ OECD 평균보다 높은 대한민국 식료품 물가 지적 및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 촉구

■ 치사율 18.5%에 달하는 살인진드기에 대한 인체용·동물용 백신개발 촉구

■ 남아도는 쌀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천원의아침밥’사업 확대 시행 및 무료급식소,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등에 대한 쌀 무상지원 검토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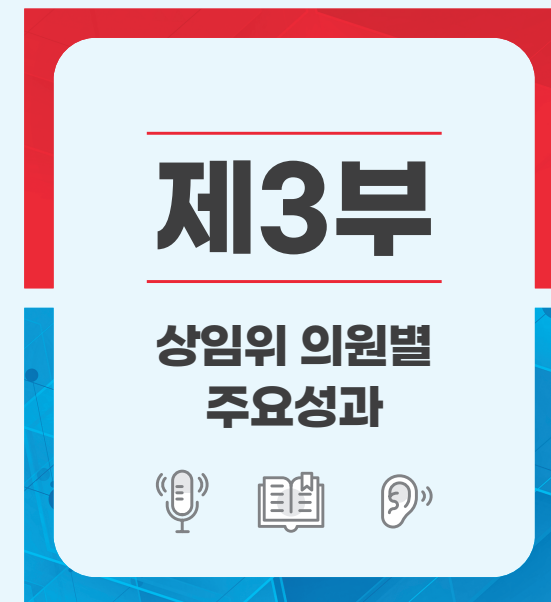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4조원 투입했으나 40세미만 청년농업 경영주는 오히려 감소. 스마트팜 확대와 농업 기계화율을 높임으로써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농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23.12월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총 1530ha인 것으로 드러남. 해당 외국인들의 국적 파악과 ‘경자유전의 원칙’ 위배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

■ 소나무재선충병이 박멸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사활을 걸고 관련 예산확보와 방제활동에 전념할 것을 촉구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개발을 통해 해양도시에 걸맞는 위상을 찾을 것을 촉구

■ 전국의 장기방치·계류선박의 관리부처 일원화를 통해 유기적 대응책 마련 촉구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송전제약 문제 해결 강력 촉구 야당의 체코 원전, 대왕고래 가짜뉴스 적극 차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주요 내용

■ 송전 제약 문제 지적

-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송전 제약 현실화,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경직된 사고로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지적
- 신뢰도를 기계적으로 고려하여 경직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산업부, 한전, 관계 기관 등이 협업하여 확률론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송전망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체코 원전 건설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가짜뉴스 대응

-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야당發 의혹 제기 및 평가 절하, 낭설 유포 등 국익 자해 행위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적극 대응
- 국가 핵심 프로젝트가 무분별한 정쟁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께서 한치의 오해도 없도록 정부의 적극 대응 주문

■ 변전소 베이 선점한 ‘봉이 김선달식’ 악덕 사업자 횡포 지적

- 일부 신재생 사업자가 소유 권한이 없는 한전 접속설비를 공동이용 접속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악덕 사업자의 횡포 발생
- 계통을 선점하고, 공동이용을 조건으로 불법적으로 계통을 팔아먹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업허가 취소 등 대책 마련 촉구

■ 발전사 석탄 계약 적정성 검토 필요

- 석탄 수입 시 특정 에이전트사 및 각 발전사 간의 담합 의혹에 대해 수입 과정, 담합 의혹 조사 要
- 담합을 통해 비싸게 구입한 석탄 구매대금이 전기요금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 지적 및 산업부, 한전의 대책 마련 촉구

국익과 민생에는 여야 없고, 국익을 저해하는 세력에는 엄정한 법의 잣대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의원

주요 내용

■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가짜뉴스 강력 대응 촉구

-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 가능성에 대해 퍼져있는 가짜뉴스의 허구성 지적
- 야당의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 강력 비판

■ ‘체코 원전 수주’ 국책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폄하 질타

-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은 한국과 원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역사적 성과임을 강조
-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도 없고 의혹만 키우고 있는 안일한 대응에 질타

■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포퓰리즘보다는 민생경제 원천인 소상공인의 이자 탕감 정책 적극 검토 당부
- 풍수해 보험제도의 확대 및 지원 촉구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보증 및 보증 보험 지원 확대 촉구

■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 우려에 대한 강한 질타

- 고려아연 비철금속 제련기술, 국가 핵심기술 지정 촉구

■ 기타 정책질의

- 산업단지 노후 배관, 위험 물질 누출 사고 우려 ‘안전관리 고도화사업’ 신속한 추진 촉구
- 미흡한 조직 진단으로 전기요금만 인상하려는 한국전력공사 강력 질타

脫원전 그늘 ‘에너지 정책’ 선진화 선도… ‘자원 強國’ 신기원을 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의원

주요 내용

■ 심도 있는 정책질의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 청사진을 그린다

- ‘태양광E, 전력계통에 책임 있는 역할 해야’ 출력조절 장애 개선책 촉구
- 송·배전망 부족에 따른 ‘원전 출력 제어’ 급증 문제점 최초공개·공론화
-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지연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 부진 문제점 지적
- 발전 공기업 누적 부채에도 막대한 신재생에너지 구입비 논란 집중해부
-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 설계, 對중국 인지전(認知戰) 경계 촉구

■ 핵심 이슈 예리하게 파헤치는 현안질의로 ‘더 나은 민생’을 견인하다

- KT 홍성지사 이전 쟁점 분석 및 ESG 등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 강조
- 티몬·위메프 사태, 배달 앱 수수료 논란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 면밀 점검
- 美 제재 中 CCTV 공공기관 계약 논란 폭로 및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 지원정책 보완 촉구

■ 공직윤리 회복, 공직기강 확립 촉구…‘열사봉공’의 기치를 들어올리다

- 공영홈쇼핑 입점업체 유착비리 추적감사, 강원랜드 슬롯머신 부실사업 저격
- 쿠팡 상거래 교란하는 중유영업체 기승 의혹 집중분석, 특허청 대응 촉구
- 기술보증기금 음주운전 속출, 가스공사 혈세낭비, 특허청 뇌물사건 등 지적

■ 자료발굴 집중분석, 주요언론 심층보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쾌거 달성까지

- [특종] 조선일보(10.16/원전 출력제어 논란), KBS(10.9/공공기관 복지물 유용 백태)
- 한국경제·매일경제 등 일간 경제지 단독 국감자료 지면(紙面) 대서특필
-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일일 우수의원’ 선정(10.11)

前정부 실정에 의한 폐단을 근절하고, 대한민국의 지속발전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

주요 내용

■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지적(산업부, 산단공 등)

- 반도체 특별회계 설치 필요. 직접보조금 지원 등 국무회의 건의 촉구
-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반도체 민간위원 부재 지적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법정 지원계획 부재, 지원 계획안 수립 주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하 ‘반도체소부장진흥센터’설치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 국가 송전망 구축 사업 성공을 위한 소극적인 대응 지적(한국전력)

- 송전망 구축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가능 확인, 기금 지원 요청 주문
- 송전망 구축 기간 단축 위한 ‘인허가 의제확대’ 및 ‘민관협의체운영’ 필요성 제기

■ 재생에너지 과잉공급 해결과 CFE 산업계 적용을 위한 방안 제안(한국전력)

- 호남, 제주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 ‘추가발전허가’ 제동 촉구
- 재생에너지에 국한된 PPA를 원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적 의견개진 촉구

■ 민주당이 ‘정부 공동책임 있다’는 티메프 사태, 알고보니 “민주당 발”

- 2019년 계획한 실시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티메프 입점지원사업이 박영선 前 장관과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그리고 박유진 위메프 창립멤버 임원(現 민주당 서울시의원) 등 민주당 인맥으로 설계됐다는 의혹 제기
- 공모 및 심사절차 부재, 협약으로만 진행해 위메프 등에 특혜 질타

■ 특정라인의 인사 독점 등 창업진흥원, 부실 운영의 총체적 난국

- 국고손실 야기한 김용문 前 원장 중기부 감사로 해임건의 됐으나 결국 자진사퇴 처리 질타, 구상권 청구방안 마련 주문
- 특정 라인 인사 및 기관운영 독점, 역대연봉 근태부실의 전문위원회 지적

여당 의원도 할 말은 한다. 정책실패 따끔하게 지적한 정책국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 태양광 사업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검직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태양광사업을 영위한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함
- 유턴기업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여전히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산업부의 유턴기업 관리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함
- 文 정부의 AMI사업 관련 정치적 유착관계 의혹을 지적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관련 기업이 여전히 산업부 사업을 수행 중인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함
- 산업부가 최근 5년간 민간 로펌에 700억이 넘는 과도한 통상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1명 수준인 내부 통상 법률전문가를 확충할 것을 요구함

■ 중소벤처기업부

- 위법성을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청년 리셀러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선의의 청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부가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함
- 티메프 사태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중기부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대책 마련을 요구함
- 재난지원금 3조2천억원 오지급 문제에 관한 중기부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지적하고, 관련 감사실시계획을 요구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 (한국전력) 한전의 해외 태양광 투자 실패 문제를 지적하고, 투자 결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게 한 정치적 외압이나 입김은 없었는지 투자 시스템 점검을 촉구함
- (한국가스공사) 분식회계에 가까운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 축소발표 문제를 지적하고, 추후 도시가스요금 인상 발표 시 합리적인 통계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함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이 수행하는 대한대출제도 관련 행정 편의적인 대출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촉구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을 위한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나경원** 의원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에너지·통상·에너지 정책 재정립 촉구

- 첨단산업 선도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 R&D, 규제완화 등 정책 재설정 강조
- 11차 전기본 발전목표량 충족을 위한 계획 보완 및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한 원전 발전량 확대 당부
- ‘자원 3개사(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석유공사)’에 자원 안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촉구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정책 수립 강조

■ 민생 안정과 중소·벤처기업 성장 위한 적극 역할 강조

-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관련 ‘배달앱-소상공인 상생 방안’ 도출 요구
- 티메프 사태 초기 대책 미흡했던 점 지적. ‘원스톱 서비스’ 도입 촉구
- ‘부익부 빈익빈’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실태를 지적.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부정유통을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하도록 촉구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조항 완화 및 적극적인 지원 촉구
-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및 정보 보호 위한 고시 제정 적극 참여 촉구
- 저출산·인구 위기 대응, 아이키우기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산단 내 어린이집 확충 촉구

■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실정 및 정책 과오 시정 주문

- 탈원전 정책하에서 제정된 ‘원전 계속운전 경제성평가지침’의 조속한 개정 촉구. PSR(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7조원이 넘는 국가적 손해를 초래한 책임 질타
- 원전 중수와 같은 전략물자 수출 관련 현행 제도의 정비를 촉구
- 전력 수요와 전력망 고려 없이 신재생에너지 늘려 출력제어·기동정지 급증, 국민부담 증가 문제 지적. 전력이 필요한 곳 바로 인근에 신재생에너지·SMR 등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도입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 촉구
-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을 한국전력이 보전해주도록 되어있는 신재생에너지 제도(‘RPS 제도’)의 개선 촉구
-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이 중진공 방콕 센터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산업, 에너지, 자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실질적이고 빈틈없는 제도개선 강력 주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의원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거짓 선동 팩트체크,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대응기구’ 설치 주문

- (산업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회 산자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해 지원 필요 강조
- (산업부) 산업부의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산업기술유출 방지대책 문제점 지적

■ 방만경영과 임직원 등 도덕성 해이 문제 질타

- (한국전력공사)출자회사 켄코솔라의 끊임없는 비리와 의혹 경찰수사의뢰 주문
- (공영홈쇼핑) 전 대표의 내부감사 결과 낙장대응, 제조업체 유착관계 의혹, 허수아비 본부장의 방만 경영, 대리 출근 문제 등 도덕성 해이와 내부 문제 지적
- (한국수력원자력) 회삿돈 사적유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에서 물취한 계약금,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사용 지적
- (중기부) 공영홈쇼핑의 도덕적해이·방만경영 등 산하기관 관리 부실 지적

■ 국민 혈세 낭비 지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한국석유공사) 사업철수·업무부주의로 920억 손실, 재발 방지 노력 주문
- (한국가스공사) 누적 미수금 14조, 개선을 위한 혁신적 방안 마련 촉구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외 채권 4조 2,321억 원 회수 위한 적극 노력 촉구
- (공영홈쇼핑) 소비자 적립금 694억 증발, 적립금 관리 회계 계정 부실관리 지적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자금의 부정사용 문제 발생 사전 방지 주문

■ 민생·중소기업 지원, 안전사고 예방 대비 철저

- (산업부) 재난관리주관기관장 기준 모호, 노후 산단 발생사고 보고 절차 지적
- (중기부) 기술이전 느는데 담당 예산 삭감, 인력 총원 없는 탁상행정 지적
- (중기부) 관련 법령 있음에도 빈 점포 정책 없이 외면하는 주무부처 태도 지적
-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적합 전기차충전시설 안전점검과 화재예방대책 마련 촉구

원전 생태계 회복과 소상공인 권익보호 강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박형수 의원

주요 내용

■ 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의 문제점 지적

- 현 지침은 중수로인 월성원전의 경제성이 나오지 않도록 되어있음
- 월성원전의 중수판매 및 중수 저장시설 공사로 인해 월성원전 폐로 추진 의혹도 불거진 상황
- 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정하여 정확한 경제성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함

■ 배달앱 수수료 인상 문제 있어

- 입점업체 모집 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행태 문제점 지적
- ‘락인’ 효과로 인해 입점업체의 고통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중기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요구

■ 티메프 사태 위험 신호 간과한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적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티메프와 수년간 협업을 해옴
- 올해 4월 신용 문제로 티메프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 못하자 중기유통센터는 「국가계약법」에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수취 가능하다는 내부적 법률 검토를 통해 보증보험을 현금 보증금으로 대체해 계약을 체결함
- 하지만 공고문에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 필수’라고 자격조건을 못 박아 둔 상태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법률 해석임을 지적함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실효성 제고 촉구

- 일본, 미국의 경우는 전문가가 재생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 스스로가 경영진단을 하여 폐업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함

국익 향상을 위한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의원

주요 내용

■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한 ‘원전 르네상스’

- 지난 7월 체코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를 선정함.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바라카 원전 수주 금액(20조원)보다 크고 유럽 시장 강자인 프랑스를 제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24조원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고 ‘덤핑’, ‘급조’ 운운하며 정치권 일부에서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섬
- 무조건 비판을 하고 발목잡기를 할 것이 아니라 ‘팀코리아’로서 총력을 기울여야하며 체코 원전 수주로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복원,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해야함

■ 조선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선박의 발주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대형 조선사들도 슈퍼사이클을 맞고 있음. 그러나 조선업이 밀집된 거제, 울산, 부산, 경남 지역은 조선산업의 호황기를 체감할 수 없음
- 경제활성화와 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대신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숙련된 국내 조선 인력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조선기자재 국산화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LNG 화물창임
- 현재 LNG화물창의 원천기술이 없어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약5조원, 연1조원가량 지급. ‘국부유출 방지’와 ‘기술독립’차원에서 반드시 국산화 필요
- 셋째, 지난 7월 처음으로 국내업체가 미국 군함MRO사업에 진출. 전 세계 군함MRO시장 규모는 약 80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국가·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대로 된 추진 촉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바로 세워야

-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폐해 지적. 문 정권 5년간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만 22조 9,000억원 발생, 또한 30년까지 예상되는 발생 비용 24조 5,000억원
-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경제성 조작까지 불사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1차 운영허가 만료를 앞두고 문정부가 갱신 절차를 미리 밟지 않아 고리 2호기에 이어 3호기도 발전 중단
- 계속운전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허가를 받더라도 10년 뒤 또 연장심사를 받아야 함. 발전 중단에 따른 직원·장비 낭비 및 전력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미리 연장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허가기간도 단축시킬 것 촉구. 또한 현재 프랑스식과 미국 모델을 결합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에너지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안보 차원에서 중요. 지금도 체코 원전, 동해가스전과 관련해 많은 공격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권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민만 보고 소신을 갖고 제대로 된 정책 수립 및 추진 촉구

■ 중소·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 거둬 수 있도록 해야

-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5년간 938억 원. 부정사용 기업들로 인해 정말 어려운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 중기부, 중소·소상공인 지원정책 다수 추진하고 있지만 집행을 낮은 상황. 지원대상 확대하는 식으로 집행을 높이고 있어. 세심한 정책 설계 통해 어려운 시기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줘야.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정상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의 역할 강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호영 의원

주요 내용

■ 원전 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무부처의 적극적 노력 주문

-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상황에 따라 탈원전 회귀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원전 반대 진영을 설득할 것을 촉구
-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신규 원전 노형 APR플러스가 차기 원전 건설과 수출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
-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상실된 원전 관련 기업, 전문 인력, 노하우 등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문

■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중소기업의 선별 지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 주문

- 주요 국가들에 비해 3~4배 높은 자영업자 비율로 자영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다양한 상권 정보를 제공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장기적으로 자영업 비중을 줄일 시스템 구축 촉구
- 정책자금을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발맞춰 국내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

■ 에너지 공기업 재무부실 심각, 부채 감축 없는 자구안의 허점 지적

-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부채율만 감소하고 총 부채는 증가하는 문제 지적
- 자산매각 등 조치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회사채 발행 여력을 확보하기 요식행위로 실질적인 부채 감축이 이뤄지지 않음
- 산업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실효성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마련할 것을 요구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 개혁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주요 내용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

- 필수의료 위기 해소 위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공정한 수가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등의 조치 필요
- 지역의료 정상화 위해 의료적 측면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접근 필요
- 지방의료원 활성화 및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 마련

■ 세대 간 형평성 고려한 연금개혁

- 청년세대 부담 완화 및 제도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실질적 대책 필요
- 민법(구하라법) 개정사항 국민연금 반영 필요
- 원활한 연금개혁 논의 위한 조속한 국회 특위 구성
-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특정 지역매체에 집중된 연금공단 광고비 집행 및 홍보방식 개선방안 마련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 건강보험 재정 수지 산정 시, 정부지원금 제외하는 별도 관리방안 논의 필요
- 재정 누수 방지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논의 필요
- 공정한 수가체계 위해 의료비용분석 정확도 담보하는 적극적 조치 방안 마련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 및 미래세대 부담완화 위한 건보율 인상 논의 필요

■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 실현

- 보호출산제 홍보 강화 및 지역상담기관 인력조정 필요
- 고위험 산모를 위한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지원 확대
-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 코로나 백신 피해자 위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 입법 필요
- 부산혈액원을 비롯한 노후혈액원 신축 및 인프라 개선 필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적 및 대안 제시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주요 내용

■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학대 지적 및 장애인 활동지원 필요성 제시

- 요양원 등 노인의료기관에서의 강박 등 신체적 제한에 대한 엄중한 대처 지적
-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선택권 부여
- 중증장애인 조기노화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 수령제도 도입
- 활동지원 사각지대 부정수급에 대한 낙인 방지 및 관련제도 개선 촉구

■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 장애인 접근성 향상 필요성 지적

- 화장품 용기, 포장 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코드 표시 의무화
- 배리어프리 인증 민간시설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촉구
- 장애인정책 주무부처 공공앱 접근성 개선 촉구
-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1차 의료기관 접근성 확보 및 다학제팀 구성, 수가체계 개선

■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접근성 확보 지적

-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 파악 및 품목확대를 통한 의료선택권 보장
- HPV 백신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선택권 보장
- 소아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촉구
- 중증아토피 치료제 교체 적용으로 환자치료 접근성 확대
-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수면내시경 가능한 인력 및 설비 확보
- 해외 출국 시 과도하게 청구되는 양압기 요양비급여 정비 지적

■ 장애인 자립 및 소득 등 권리보장 제도 개선 및 방안 제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기관 확대를 위한 기관영향평가 등 대책마련 촉구
- 보건복지부와 산하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촉구
- 장애인개인예산제 본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선택권 확대 요청

정부, 저출생 및 의료대란 등 해결에 진정성 보여주고 설득시켜야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 주요 내용

■ 저출생 문제 ‘국가적 재난,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 범국가적 역량 총결집 필요

-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의 동참 필요
-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개선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필요

■ 의료대란 문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위해 노력 필요

- 정부가 지켜만 보면 안 되고 찾아가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설득시켜야 한다고 지적

■ 연금개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

- 세대별 보험요율 인상속도 차등 방안 문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세부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내 연금특위 설치하고 여·야, 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 필요

■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체계 강화 필요

- 온라인의 특수성으로 인한 의약품 및 식품의 부당광고 형태가 지능적이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지적
- 부당광고 위반 게시물 차단 56일 소요는 심각한 사항으로 건전한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계획 마련 필요

■ 흡연 관련 질환으로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지출 증가, ‘담배회사 소송’

- 지출된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10년이 지났다고 지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적 지지여론과 국회 차원의 지지 필요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허술한 정책 및 부실 현안 개선요구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증가로 부정수급 적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퇴팔이 술 총대장군군 검출 및 납탄 소고기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 강조
- 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서비스 누락대상자 방지 근거법 마련 필요
- RSV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항목 도입 등 예방 계획 수립 강조
-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보완 및 지원 방안 지적
- 노인일자리 사업, 중도포기 및 대기자 증가로 인한 사업고도화 및 참여인력 관리 필요
- 장애인개발원 유일한 장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복지정책 선진화를 위한 기능 확대 필요

응급이송·실손보험 의료체계, 약자복지 사각지대 개선 강조, 국민건강 위한 정책대안 제시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

주요 내용

■ ‘이재명 특혜’, ‘응급실 뺑뺑이’ 개선위한 응급이송 체계 개선 강조

-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불거진 응급헬기 규정 미비 지적
- 경증환자 응급센터 신설, 중앙응급의료센터 개선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지적

■ 국민건강 위해 미비된 규정 마련 촉구

- 산후조리원 내 감염관리 등을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화 필요
- 취지에 맞지 않는 치매안심센터의 고령자 운전면허갱신 절차 개선 필요
- 비흡연 환자 포함 폐암 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 검진 제도 개선 필요

■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소외되는 곳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 가정 내 아동 재학대 사망으로까지 이어져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 취약계층 유·사산 문제 및 심뇌혈관질환 치료환경 개선 필요
-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 제공하도록 사회서비스원 운영 개선해야

■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제도 마련 필요성 강조 및 대안제시

- 필수의료 망가뜨리는 실손보험 제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개선필요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필요

■ ‘마약과의 전쟁’, 중독자 치료·재활 위해 부처간 권한과 역할 정립

- 각 기관의 마약류 중독자 대상 사례관리(재활) 센터가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중복 업무 개선 지적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빈틈없도록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 역할 촉구

대한민국 보건복지의 현재를 짚고 미래를 말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

주요 내용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연금개혁 촉구

- 기금 투자 수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최우선 개혁 과제임을 지적함
-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개편 또는 권한 변경 필요성 지적함
-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다층연금체계를 통해 보완해야 함을 강조함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명의도용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내국인 건강보험 명의도용의 56.4%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명의도용이 마약범죄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 지적
- 타인 사진 넣어도 제작 가능한 모바일건강보험증 때문에 손 쉬운 명의도용. 유명무실한 요양기관 본인 확인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 주문함

■ (식약처) MTS(미세칩) 미용기기 중간지대 놓여있어 식약처 규정 필요

- 최근 인기 끌고 있는 MTS(마이크로 니들)미용기기는 화장품도 의료기기도 아닌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국민 건강 위협. 이에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 위해 식약처의 제대로 된 규정 마련 주문

■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 경계선지능청년은 우리 사회 소중한 인적자원임에도 국가 차원의 고용 촉진 및 체계적 지원 제도 부재. 복지부 중심으로 필요 조치 마련 주문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시스템과 미비한 심리지원제도 지적. 해외제도 벤치마킹 통해 세심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함

■ (심평원)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국민 건강 위협 및 건보재정 악화 우려 지적

- 의료 과다 이용은 유사 마약류 오남용, 방사선 피폭 등을 초래,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보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음
- 관련 법령 마련과 시스템 구축으로 진료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함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주요 내용

■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 촉구

- 「장애평등정책법」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
- 장관은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복지부 내 인력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장애영향평가 제도의 구체적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촉진할 계획

■ 신기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화 및 예산 통합 방안 제안

- 신기술 보조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 포함을 위해, 관련 절차와 단기·중장기적 방안을 수립해 의원실에 보고 요청
- 장애인 보조기기의 건강보험과 개인예산제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안
-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예산 통합 및 신기술 보조기기의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할 의향을 이사장에게 주문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촉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적 및 시기 기준의 개선 필요성 제기
-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장기적 정책 수립 요구
- 편의시설 설치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촉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건설적 대안 제시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

주요 내용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겠습니다>

- 문다혜 사건으로 인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 지적
 - ☞ 주류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 도입 필요성 제시
- 가향담배(향을 첨가한 담배)의 흡연률 상승효과 지적
 - ☞ 가향담배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국가책임 요구
 - ☞ ‘사법입원제’ 도입 촉구

■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지적
 - ☞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강조
- 비의료인의 시체(카데바) 영리목적 사용 지적
 - ☞ 영리목적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도입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지적
 -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시범사업 추진 촉구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계약생산)기업 지원법 제정 촉구
- 민간퇴직연금 수익률 저조 지적
 - ☞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참여 필요성 강조
-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노인복지정책 지적
 - ☞ 고령인구의 연령별 세분화를 위한 연구용역 필요성 제시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환경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과 기후위기 및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국감 실현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주요 내용

■ 노동약자 보호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앞장

- 대폭 증가한 임금체불 부정수급으로 인해 대지급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동약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마련 촉구
- 임금체불 근로자의 민, 형사상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노동법원 설치의 적극적인 추진 주문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한국고용정보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아직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도입 촉구와 함께 성숙한 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연구 및 토론 필요성 강조
- 최근 법원의 산재 판례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실태를 지적하며, 공단의 산재 기준에 관한 적극적인 재검토 주문

■ 기후위기와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촉구

- 홍수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에 있어 ‘지역의견 수렴’, ‘피해 최소화’, ‘지원 및 소통강화’ 원칙을 준수하며 치수대책 추진할 것을 강조
- 수위예측 사각지대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 확충 주문
- 홍수기 때 수해 예방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 필요성 강조
- 기상청 지진정보시스템 직접연계, 광역지자체(100%) 대비 저조한 기초지자체와의 연계(9.6%) 확대 촉구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앞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 최근 석포제련소에서 허가기준치를 초과하여 카드뮴이 배출된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엄정한 대응 촉구
- 안동댐 녹조의 비점오염원 해소를 위한 낙동강 상류지역의 축산단지 매입 검토 및 녹조 관리 컨트롤 타워인 국가녹조대응센터 필요성 강조

기후 위기를 기후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

주요 내용

■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에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 해외 주요국 대다수는 하나의 부처가 주무부처 역할을 맡아 기후대응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컨트롤 타워 부재, 이에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 과거 ‘NDC목표 줄속추진’, ‘유명무실한 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 적응기술 부진’등 환경부가 기후 대응에 미진했던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 (기상청) 기상예보 정확도 결정 3요소 모두 부족한 기상청

- 기상 예보 정확도는 ‘관측 품질’, ‘수치 예보’, ‘예보관 역량’이 결정. 그러나 AWS 등 기상관측장비의 지역별 편중 심각, 차세대수치예보모델단장 1년 공석, 높은 업무강도로 신규 예보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3요소 모두 부족한 상황 지적

■ (수자원공사) 국제테마파크 용지 3,000억 혈값 매각 특혜, 수사의뢰 요구

- 직원이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혈값매각해 공사에 최소 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지만 징계 수준으로 마무리 된 것 지적하며,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과 특혜 의혹의 구조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적극 재검토 할 것을 주문

■ (국립과학환경원) 이차전지 폐수 관련 보고서 허술하게 작성한 국립환경과학원

- 인체 유해물질 리튬이 이차전지 폐수처리공정으로도 제거되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환경부와 환경원은 ‘미규제물질’로 방치, 현재까지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태 지적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환경·노동 정책 제시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

■ (고용노동부) 대형로펌만 배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

- 중처법 시행 후 작년 재해자수 역대 최대 기록. 중대재해사건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형로펌이 238건(46.7%)을 차지하는 등 안전한 작업현장 조성보다 대형 로펌 선임에 비용을 쓰는 것 아닌지 지적
- 대기업만 처벌을 피하고 있는데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기업에 대한 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법 시행 후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일자리 대란, 적극 대응 필요

-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 폐지 예정. 52,306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이며 비정규직 8,418명의 고용위기는 더 심각. 하지만, 일자리·미래세대특위에서 산업전환 일자리 지원 얘기는 9번 회의 중 2번, 발전소 폐지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음
- 선진국은 정부와 합심해서 해결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도생이라며 일자리 전환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

■ (근로복지공단) ‘총체적 난국’, 산재보험 부정수급·산재 카르텔 관련

- 특정감사 두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486건 적발되었는데 매년 300여 건만 적발되는 것 지적. 보험금 산정 및 징수, 지급의 공정성, 환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출 것을 주문
- 아울러, 산재 진료와 관련한 사무장 병원 적발 문제와 노무법인 중심의 산재 카르텔 척결 촉구

■ (종합감사) 장애인 고용의무 & 프랜차이즈 업계 청년 근로자 노동권 보장 관련

- 상당수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돈으로 때우고 있는데 표준사업장 확대 등 장애인 고용을 제고방안 제안
- 프랜차이즈 업계 청년 근로자 노동권 보장 필요성 지적하고, 정례 합동 점검 등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 국민 10명 중 9명 계속고용 찬성, 초고령사회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촉진 필요

- 10월 2~4일 진행, 의원실 자체 여론조사 의뢰 결과(PMI, 성인 800명)
- 국민 91.3% 계속고용 찬성, 특히 20대(91.5%) 30대(92.2%) 찬성률 평균보다 높아 계속고용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대갈등 우려 불식
- 찬성 국민 87.7%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공감, 특히 50대(64.7%) 60대(71.1%) 임금 감액 의견 평균보다 높아 임금수준보다 더 일하는 게 중요
-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 확인

■ 정년 넘긴 직원 재고용 사업장 역대 최다, 노사정 대타협 통해 국민 공감할 재고용 제도 마련해야

- 지난해 기준 정년제 도입한 사업체(36만3817개) 가운데 재고용 제도 운용 사업장 36.0%(13만981개) 달해
- 5년 전 2019년 28.9% 비해 7.1%나 높아진 수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기업들의 자구책으로 재고용 제도 적극 활용한 결과 해석
- 초고령사회 맞춰 고용 패러다임 이미 변화 중인 사실 통계로 확인, 국민 공감할 재고용 제도 조속히 뒷받침 해야

■ 이상기후에 하천·댐 쓰레기 역대 최대 발생, 정화 활동 강화 필요

- 이상기후의 나비 효과로 지난해 전국 하천·댐 쓰레기 8만8564톤 발생
- 쓰레기 방치하면 수질오염, 녹조로 이어져, 사전 정화 활동 및 하천 쓰레기 집중 피해 지자체 추가 선별 지원 나서야

■ 상하수관 노후화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증가, 위험관로 선별 후 조치해야

- 2022년 기준, 21년 이상 관로 노후율 상수관 36.4%, 하수관 43.0%
- 노후관로의 손상 및 공사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사고 지난 5년간 560건
- 노후관로 정비사업 우선순위 재설정 시급, 특히 지반침하사고 집중되는 하수관망 현대화에 행정력과 재정 집중할 필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자율적 근로시간, 기후대응담 필요성 강조 및 중처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의원

주요 내용

■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의문, 위험요인 개선 위한 실질적 확대 고려 필요

-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형사 책임에서 중처법 상 의무들의 해태 여부 확인 어려움. 실제로 중처법 각 항목 별 조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조치가 보고서 위주로 요구
- 위험성 평가보다 이후의 개선 여부가 더 중요한 만큼 실효성 부족한 ‘안전컨설팅’보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시설, 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용자 · 인센티브 사업 확대 등) 마련 시급

■ 기초수급 · 연금개혁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고령층 고용을 통한 연금고갈 해법 제시, 연금소득과 노동소득을 함께 고려해 연금개혁 진행돼야
-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지자체 · 해외 ‘명품’ 기업 실태 및 근로소득 발생 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 되는 문제점 지적 등 개선 요구

■ 일률적 주52시간제 대신 자율적 근로시간 도입 고려 필요

-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부업자 43.2만 명에서 57.5만 명으로 33% 급증, 자발적 근로까지 막아 실제 가계 수입 감소가 원인
- 한노위 · 국회도 못 지키는 주52시간제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 기업 경쟁력 저하 · 근로자의 수익 감소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종별, 산업별, 노사 합의된 자율적 근로시간 도입 주장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물그릇, ‘기후대응담’ 필요성 강조

- 권역별 주요 수원인 소양강담, 충주담, 안동담, 보령담 등의 계약률이 90%이상으로 신규 수자원 확보가 절실하고, 장래 용수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어 신규 물그릇 확보 필요
-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홍수 · 가뭄)에 대비한 신규담 증설 추세
- 담 후보지에 실질적 도움 마련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한 원활한 물그릇 확보 당부

오직 民生!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과 고질적 임금체불 근절 방안 마련 촉구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

주요 내용

■ 2030NDC 40% 수송부분 목표 달성 위한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강구 필요

-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충전시설 123만대 보급이라는 도전적 목표 세웠지만 전기차 화재 급증으로 ‘전기차포비아’ 현상 심각
- 과충전(화재 원인) 방지 가능토록 완속충전시설에 PLC 모뎀 장착 의무화
- 화재 안전성 위한 노후전기차 조기폐차 지원·소비자 안전교육 강화·배터리셀 전수조사 등의 대책 촉구

■ 환경오염 주범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강력 촉구

- 석포제련소는 ‘13~’22년까지 80건의 환경법 위반이 적발되고 103가지의 조건을 전제로 사업장 허가를 받았음에도 지난 2년간 13건 위반
- 제련잔재물 처리, 토양오염 정화, 지하수 오염 농도 정상화 등 통합환경허가조건 기한내 이행 불가능 예측
- 환경법상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가능, 이행조건 미준수시 법 적용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시행 5년, 제도 재설계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도입으로 상사의 부당한 행위라도 참아야하는 관행은 이제 법적으로 부당한 일. 제도 도입 5년차에 제도의 허점 노출
-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모호해 ‘기타’로 종결되는 사례 다수 발생. 제도 첫 시행 ‘19년 ‘기타’로 종결되는 건수가 770건→지난해 7402건으로 폭증
- 해외국가가 괴롭힘 정의에 ‘지속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고 있는 것처럼 괴롭힘 기준을 명확히하고 객관성을 높일 필요 있음

■ 형사처벌 체불임금 해소 미흡, 근로자 중심의 대책 필요

-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고 기록,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인 2조원으로 전망
- 민·형사로는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선 ‘노동 법원’ 및 체불된 임금채권을 변제대위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공적 기구 설립, 대지급금 금액 인상과 지급 요건 완화 및 건설업, 조선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필요
- 우리나라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은 사용자의 준법 의식 결여,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경시 풍조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 이를 위해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

주요 내용

■ 기후위기 대응

- 맞춤형 기후 변화 지도 마련(농산물 생육환경 반영 등)
- 이상 기후 대응을 위한 예보관 확충 및 지자체 파견 촉구 *기상법 개정안 대표발의('24.8.21.)

■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와 대기 환경 개선방안 제시

- 식수 관리
 - 정수장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전면 도입 촉구
 - 수입 생수 불법유통 사각지대 개선 촉구
- 대기 환경 관리
 -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응축성 미세먼지의 관리 필요성 강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24.11월 중)
 - 공동폐기물처리장 암모니아 배출 규제 개선 및 현장 목소리 반영 촉구

■ 국민 생활 환경 문제 개선 촉구

- 불법유통 유해 생활용품 관리 대책 마련 촉구
- 탄소저감 대책으로서의 분리배출 제도 및 분리수거 차량 운영 개선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경제체제 구축 필요성 강조

■ 노동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불공정행위 금지

- 임금체불,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채용사기 근절을 위한 감독 강화 촉구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24.10.04.)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미비점 지적,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 산업안전보건교육 인증기관 사칭 방지대책 마련 촉구

■ 근로자 안전대책 강조

- 미운영 산업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신속한 재개 및 안전교육 확충
- 건강관리카드제도, 직업성 암에 대한 지원 대상 물질 확대
- 노동위 조사관 및 근로감독관 근로조건 개선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국토교통위원회

대한민국의 인구소멸위기 극복위해 사활걸고 지방균형발전 추진 해야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 수도권 주택 매입에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지원해준 국토부 소관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들의 균형발전 역행 행태 지적 및 개선방안 촉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사업 실적 부진('23년 기준 총예산 대비 0.45%에 불과) 지적 및 지역발전 기능 및 투자 확대 촉구
-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BMS 업데이트 불가 차량 별도 관리 방안 ▲전자 장치진단기 보급 확산 방안 마련 촉구
- 수도권에 집중된 신도시, 철도, 공항 시설 투자 사업 실태 지적 및 지방균형발전 중심의 기조전환 촉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문제 심각. 서민 주거복지 내실화 방안 마련 촉구
- LH 건설임대주택 내 홈네트워크시스템 부실공사 지적 및 예비전원장치 등 입주민 안전·보안을 위한 시정 촉구
- 무자본 갭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예방을 위한 HUG 차원의 신속한 시스템(임대인 보증사고 위험도 공유) 마련 촉구
- 지방 미분양 문제 개선을 위한 HUG CR리츠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청년들이 디딤돌, 버팀목 대출 수탁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상품취급을 거절당하는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대구시-철도공단 간 행정문서·국토부 고시 등 통해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냄
- 고속도로 관리를 위한 PSO 보전과 동서측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촉구
- 국내 MRO 산업 경쟁력 퇴보 지적, LCC의 정비능력 향상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오물풍선으로 인한 운항 중단 등 피해 지적 및 선제적 동시추적관리체계 구축 촉구

불공정 관행 청산, 주거복지 강화, 공사 재정건전성 향상, 국민안전 확보!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세 의원

주요 내용

■ 인천공항 교통약자 등 우대출구의 불투명한 운영 개선 촉구

- 항공사위원회의 확인하에 공무상 필요시 이용하는 인천공항 교통약자 등 우대출구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항공사위원회가 공무목적 확인해야 하나, 既날인한 사용서를 항공사에 배포해 깜깜이 이용 중. 대장 관리도 부실
-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개선 방안의 문제점 지적
-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록보존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공공임대주택 공가 문제 지적 및 실질적 주거복지 향상 노력 당부

-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입지선정과 주택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
- 매입임대 약정체결 이후 실입주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노력 필요
-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증가 등으로 인한 보증중단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재무 구조 안정화 노력 촉구
- 경매 진행 이후 잔여 채권 회수율 향상 대책 마련 필요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

- 빈발하는 항공기 정비지연 원인 파악 및 점검 필요
- 건축안전모니터링 확대 및 제도개선 필요
- 설계안정성 검토 후속조치 개선 필요
- 취약열차 승무 내실화 노력 필요

한국도로공사 전관유착 및 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사(부영) 악덕임대 형태 개선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

주요 내용

■ 한국도로공사 관제 시스템 비위 및 전관유착 의혹 제기 감사원 감사 요구

- 레이더식 돌발상황검지시스템·다봄CCTV·도로전광표지판 기술개발제품 관련 허위 성능검증 및 부실 준공 검사 등 한국도로공사 방만 경영 문제 지적
-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및 직원과 업체간 전관 유착 의혹 제기
- 한국도로공사 관계 업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감사원 감사 요구 촉구

■ 서민 두 번 올리는 부영(건설), 부당이득 및 하자보수비용 과다청구 문제

- 집 없는 서민의 자금으로 형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건설하는 부영, 분양전환 부당이득 및 하자 보수비용 과다청구 등 악덕 임대 행태 문제 지적 지적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리·감독 미흡 인정 및 대책 방안 수립 답변

■ 한국철도공사 10년간 공공기관과 KTX 단체계약 체결 주말 KTX 예매 대란 가중

- 한국철도공사, 10년간 각종 공공기관과 매년 단체계약 체결
- 공공기관, 임직원 금~월 KTX 별도 예매 및 편의 제공
- KTX 예매 대란 가중 문제 지적 및 한국철도공사 연내 폐지 답변

■ 특정 건설사,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에 일명 벌떼입찰로 시장 교란 행위 문제 지적

- LH 공공주택에 몇몇 특정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형식의 자사회들을 동원 소위 벌떼 처럼 응찰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를 공급받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심각성 지적 및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오직 민생,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

주요 내용

■ 공공사전청약 입주지연, ‘알면서 밀어붙임’ 문제인 정부

- 주민 반대 등 입주지연 사유 미리 인지했음에도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 대상”이라며 국민 속이고 분양가 상승 당첨자에게 전가한 문제인 정부
- 국토부, LH에 분양가 상승 부담 최소화 요구, 종합감사에서 기존에 약속한 시점으로 분양가 산정하겠다는 답변 끌어냄

■ 사라진 철근...‘철근누락’ 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 2023년 철근누락 아파트를 대상으로 철근 설계량과 실제 반입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량보다 오히려 많은 철근이 현장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
-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인 설계변경도 없이 준공이 이뤄진 점 등 LH의 전반적인 조사를 요구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 올해부터 시행된 8천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피해가기 위한 보험 이중계약, 다운계약서 등 다양한 꼼수를 밝혀냄
- 다운계약서를 통해 차 한 대당 수천만원의 관련 세금을 덜 냈을 수 있는 탈세 정황도 포착

■ 빌라왕은 죽지 않았다...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 법인, 다시 성행

- 허그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임대인 구상권 청구를 통해 경매에 부친 주택들을 특정 법인들이 헐값에 낙찰받아 허그에게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재임대를 해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을 밝혀냄
- 심지어 해당 법인들은 허그와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모든 소송을 하나의 법무법인이 대리하고 있어 허그의 취약점을 노린 악의적인 행태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함

야당의 가짜뉴스, 특혜 의혹 제기 비판, 오직 민생! 국민의 주거, 교통, 안전을 위한 노력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

주요 내용

■ 야당 제기하는 특혜 의혹 비판, 성남시 백현동 특혜가 진짜 특혜 강조!

- 야당의 끝나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생산, 전문가 검증위원회로 노선검증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강조!
- 대통령 관저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야당이 제기하는 특혜의혹은 모두 가짜뉴스라는 점 지적, 진짜 특혜는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백현동 개발사업임을 지적

■ 구명난 LH 혁신안, 기강해이 LH 직원들 강력 질타!

- 영업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하고 사업 수주 계속하는 부실업체 행태 지적, 혁신안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 안 내도 되는 총부세 250억 납부한 LH 지역본부 기강해이 실태 지적
- 공공임대주택 장애인용 월패드 접근성 편의성 확보 필요성 강조

■ 이용객들 편의를 위한 교통 관련 민생 질의!

- 코레일, 잔여좌석 일부를 별도의 여행상품과 연계한 상품석 운영의 꿈수 구매 실태 지적, 관광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취지 강조
- 한국도로공사,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휴게소가 지방에 편중된 문제점 지적, 무인영업 시스템 도입등 구인난 해결책 제언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들 결격사유있어도 임명되는 문제점 지적, 제조사 출신 위원이 하자 심의하는 불공정, 처벌규정 마련해 재발 방지해야!

■ 공공기관 불공정 지적, 재발 방지 및 대안 마련 촉구!

- 국토부, 전세대출 제도 개선 요구 16차례한 HUG의 요청 묵살한 문재인 정부 국토부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요구
- HUG, 전월세 전환율 고려하지 않아 월세 520만 원짜리 초고액 반전세 주택에도 대출 보증 지원하는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촉구
- 인천국제공항공사, 연간 3,000만원 이상 과도한 해외파견직원 자녀 학비 지원 지양 필요성 강조 관련 규정 개정으로 방만경영 지양 필요성 강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오로지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

주요 내용

■ 장기간 방치된 도심 내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지 정주여건 개선 촉구

- 전국에 안전조치 시급한 불량 등급(3, 4등급) 빈집만 1만 7천호,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빈집 철거는 연평균 1천호 불과, 문재인 정부시절 수백억원 들여 추진된 빈집 정비 시범사업은 성과 매우 저조(5개 지역 중 3개 지역 취소, 빈집 철거 11호 불과)
- 무허가 빈집은 실태조사 및 정비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및 범죄 장소 악용되며 도심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점 지적
-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무허가 빈집도 실태조사 및 정비대상 포함 등 제도개선 수용

■ LH 임대아파트 및 고속도로 터널 내 동파방지 발열선 미인증, 불량제품 시공으로 화재 위험성 지적

- 임대아파트 및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대비 시공한 소화수배관 동파방지 발열선, 관련 법률 및 규정까지 위반하며 미인증, 불량자재를 사용해 화재 노출 심각 지적
- 특히 LH는 특정 업체의 미인증 제품을 LH 공사 시방서에 넣어 표준 설비기준으로 둔갑시켜,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부정행위 심각 지적
- 미인증, 불량 발열선과 부속자재 시공 실태 파악 및 특혜 등 부정행위 감사 촉구

■ 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자 구제 마련 촉구, 정부 및 기관 제도개선 수용

- 악성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로 인하여 HUG가 임대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HUG의 임대보증을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의 피해(99세대, 126억원) 속출
- HUG의 임대보증 취소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촉구,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대위변제 회수율 저조 실태 지적 및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활성화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방지 대책 마련 주문

부조리 개혁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 정책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

■ 심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관리부실, 제도개선 촉구

- ▲수년간 방치된 채 곰팡이 핀 임대아파트 공기안전매트, ▲제도 미비로 포르쉐 등 고가차량 보유하고 임대아파트 재계약 가능한 임차인만 수백명, ▲품질평가에서 탈락한 임대아파트 관리업체가 다른 단지 임대아파트 관리업체로 회전문 선정,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법률 위반 임대아파트 실태 등 LH 임대아파트 관리의 총체적 부실 문제점 지적 및 제도개선 촉구

■ 안전사각지대 개인 전동킥보드 배터리, 안전사고 관리대책 마련 주문

- 전동킥보드 관리를 위한 등록제 실시 및 번호판 부착 검토 주문
- 전동킥보드 배터리 검사제도 신설 및 배터리 인증제 포함 촉구

■ 아파트 사전방문과 품질점검제도 현황 점검 및 부처 입법 개선 관철

- 건설사의 사전점검 일정 담합 및 전문업체 대동 시 AS 미처리 겁박 등 건설사 횡포,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처리기간 미준수 등 아파트 하자 문제점 지적 및 제도개선 촉구

■ 주요 내용

■ 부조리 개혁

- 감정평가업체간 평가액 10% 이상 차이 시 재감정 및 징계 규정으로 인한 구조적 담합 문제 지적 및 제도 개선 촉구
- 항공편 전체의 25% 지연에도 불구하고 제재 규정 無, 항공사 책임 시 제재 규정 신설 촉구
- 신축아파트 승강기 준공 전 공사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 고장 9.13% 지적,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촉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조속 추진 및 전 임원진의 전향적 대응 촉구
- 철도 경쟁 체제 안정화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요청
- 국산 위장 중국산 CCTV의 전수 조사 및 교체 요구
- 미승인 자재 사용 업체 징계 및 벌점위원회 조사, 제도개선 촉구
-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의 과도한 이익잉여금 개선 및 퇴직 인사 재취업 심사 제도 개선, 전시공연의 특정 재단 몰아주기에 대한 선정 절차 개선, 폭발물 우려가 있는 무단 적치물의 체계적 관리방안 개선 등 촉구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실적 미미 지적 및 개선 촉구
-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가액기준 현실화 및 주차면수 부족 지적, 국가유공자에 대한 임대주택 퇴거 소급 적용 금지 및 요건 완화 주장
-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이 본래 계획 대비 변질되어 추진되는 상황 및 기획부동산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촉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주택사업 확보 물량 대비 공급 10% 미만 지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촉구
- 신축 아파트 입주 사전방문(점검) 하자보수 요청 건수 폭증에 따라 사전방문 절차 및 대동 업체 자격, 주관부처 실태관리 체계 도입 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尹정부 민생안정 주력... 주거안정·주거복지·교통안전 강화 필요해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민생 정책 추진

- LH 카르텔 혁신으로 지연된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 신속 추진 촉구
- 온산선 황산 수송으로 인한 지역 주민 안전 위협 우려
- 부산시 혼잡도로 건설 조속 추진 및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 지방 소규모 상가 공실 증가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지역 쿼터제 도입 등 대책 마련 촉구
- 청량TG 교통 정체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MBK의 고용유지 보장과 핵심 기술 유출 금지, 지역 사회 안전 보장 촉구

■ 주요 내용

■ (민생) 청년층 주거지원 및 주택시장 과열해소, 사전청약 지원대책 주문

- (국토부) 2030세대에 40대까지 영끌 주택마련, 청년층 핀셋 대책 필요
 - 20·30대 '21년 45% → 올해 40% / 40대 '21년 27% → 올해 38%
 - 5억이상 고액대출 '21년보다 145.7%급증, 고액대출 10건 중 9건이 청년층
- (LH) 文정부 부활 공공사전청약 지연에 분양가 상승 부담 지원 필요
 - 본청약 지연시행 13단지, 사전청약보다 분양가 상승에 986억 추가부담
 - 본청약 지연단지 2만500가구, 분양가 상승으로 7300억 추가부담 우려
 - ☞ (개선) 본청약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분은 LH가 부담하도록 함
- (국토부·부동산원) '로또청약' '줍줍' 청약 과열 및 부정청약 개선필요
 - 올해 '줍줍'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명... 지난해보다 5.6배 늘어나
 - '60회 이상' 과다청약 1669명...전국 돌며 싸늘이 '청약 쇼핑' 기승
 - 외국인 전세보증 사고 급증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안전) 철도사고 근절 및 전기차 화재 예방,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 주문

- (코레일) 끊이지 않는 철도사고 재발 방지 및 부정승차·기강해이 개선
 - 2019년 이후 총 284건 사고 발생, 현 사장 취임 이후에도 47건 사고 발생
 -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코레일 임직원 징계 총 654명에 달해
- (국토교통부)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및 견인료 제도 개선 필요
 - 공유 전동킥보드 앱 GPS 오차 등으로 견인구역 인식 못하는 경우 많아
 -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의 모호성과 견인료 자동청구로 견인건수·견인료 급증
- (도로공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3곳은 전기차 화재 무방비
-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시행 3년, 대형 운송사 배만 불렀다
 - 대형운송업 5社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차 운송마진, 시행 전보다 29% 급증

국가 SOC 구축에 있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해야!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석 의원

■ (산업·환경) 중국산 시멘트 수입 및 오염저감시설물 허술운영 개선 주문

- (국토교통부) 값싼 중국산 시멘트, 국가 기간 산업 기반 위협
 - 서울아파트 분양가 (30평) 대비 시멘트 가격 고작 0.17% 차지
 - 수입 제품 종속 시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 (국토교통부) 부실 관리로 방치되는 '오염저감 시설물' 관리대책 개선
 - 토사 가득 쌓여있거나 시설물 점검 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허술운영 질타

■ 주요 내용

■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수단,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3.4배

- 올해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이 수도권 108.9%, 비수도권 82.1%
- 저상버스 도입률 지역간 격차 또한 최고 3.4 배로 전국 평균 39.7%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 지속

■ (국토부) 비수도권 국가 철도망 완성도 25%...균형발전 저해

- 국가 철도망 구축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각
- 철도망 완공실적과 사업비 지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2배 이상 높아
- 수도권의 완공 철도 노선은 계획 대비 45%였으나, 비수도권은 25%에 그쳐

■ (국토부) 지방공항 억제하는 수도권 중심 공항정책, 균형발전으로 전향해야

- 인천국제공항에는 10년간 10조원이 투자된 반면, 김해국제공항에는 4,700억원, 기타 지방 공항은 3,7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짐
- 이러한 불균형으로 비수도권 공항은 국제 교류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비수도권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노후교량 7곳 교체·보강 필요

- 1977년 이전 건설된 곳 중 29% 내하성능평가 미통과 안전성 우려...2015년 안전평가 실시 허술 의심

■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전체 도로 싱크홀 점검까지 40년 걸려

- 올해 관리원의 점검 대상 구간 도로는 총 2천286km로, 전체 관리 대상 도로(약 8만5천km)의 2.5%에 불과

■ (LH) 공공주택 하자 4년간 15만건 증가

- 올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대하자율, 공공분양주택의 2.5배

■ (HUG)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게 7천억 원 이상의 보증 사고금이 몰려

- 시스템적으로 사전 악성, 신용불량 임대인에 대한 보증제한 필요

■ (코레일) 철도용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필요

- 철도전기요금 3년간 40% 이상 급증, 영업손실 절반 차지, 신규투자 및 노후열차 교체 한계
- 철도전기요금체계 불합리한 요소 제거 필요

부동산 시장 공정화 및 건설·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

주요 내용

■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촉구!

- 건설현장에 남아있는 노조 파업 및 불법행위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가 공사비 인상으로 국민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건설현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 강조
- LH가 정부의 부동산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핵심 역할 외의 기능들이 지나치게 커져 시장 독점, 지배적 지위 남용, 조직 비대화의 부작용 발생하는 만큼,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구조 개선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 주거 안전 및 주택 품질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문제 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토부의 자체적인 관리 대책 마련 촉구
- LH에서 공급한 주택 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제기된 관련 소송을 보면 법원에서 LH의 설계상 하자를 인정한 판결이 상당수인 만큼 부실설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마련을 위한 방향 제안!

- 계속되는 북 오물풍선 살포로 인천공항 활주로 운영제한이 반복되는 가운데, 활주로 운영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가 부족한 바, 국토부 차원에서 협조체계를 정비 해줄 것 당부
- 한국철도공사 열차 기관사들의 근무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는 한편, 철도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도입했던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정상화 조치 촉구
- 소수 업체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과점과 이를 위해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재취업 심사 제도 정비를 비롯해 전관예우 및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거짓 뉴스를 바로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국토 교통 분야 발전 방안 제시!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

주요 내용

■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및 오도된 여론 확산 차단

-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정상적 절차를 거쳤고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입증
-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하여 진행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진상을 규명,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재개 필요성 강조
- 창원산단 후보지 사전유출 의혹 관련하여 당시 신청 지자체 대부분인 78%가 선정되는 사업이었고 언론 등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공개적인 사안임을 확인

■ 국토균형발전 및 경남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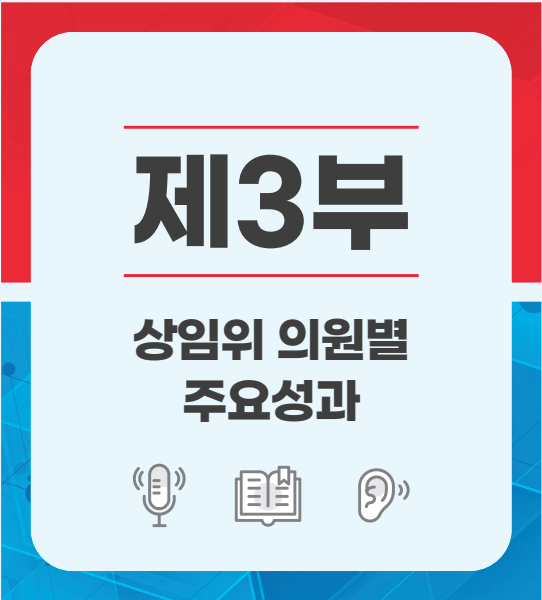
-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 용역 추진의 내실화 촉구
-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관심과 노력 당부
- 경남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촉구
-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대책 마련 당부

■ 국민의 안전·생명 위협하는 건설·교통·철도 분야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 건설사고부상자 51% 증가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및 관리강화 강조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율이 67%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센터의 전국적 확산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총 9만 8천대 적발에 따른 대책 마련 당부
-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1억 건 적발 현황 파악, 상습 미납 차량 단속 강화를 비롯한 한국도로공사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촉구
- 철도시설물 하자 4건 중 3건 방치 상황 질타, 신속한 보수 대책 마련 촉구

■ 국토교통부와 소관기관의 잘못된 행정실태를 지적하고 대안 제시

- 한국토지공사의 전관 특혜, 기강해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응책 마련 강조
- 임대인의 계약서 위조로 주택임대차보증보험이 취소된 사례를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대책 필요성 제시
-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552억 원 투입 대비 활용률 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공항 광고물 계약해제 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졌음에도 과도한 복구 요구하며 무단점유료 부과하는 한국 공항공사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제시



여성가족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촉구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

주요 내용

■ (디지털성범죄 종합 대책 마련) 정부의 대응 체계 강화 촉구

-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은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종합 대책은 아직 준비 중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부족 및 익명 신고 처리 문제 등 해결이 시급
-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 (딥페이크 영상물 사전 차단) 플랫폼의 탐지 및 차단 의무 강조

- 딥페이크 영상물의 사전 탐지와 차단이 중요하며, 플랫폼 업체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여성가족부는 관련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됨
- 청소년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여가부와 협의하여 좀 더 강화해야 함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 국정감사에서 실질적 지원 방안 논의

- 이번 국정감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다룸
-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접근
- 여성가족부 등 수감기관에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함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보호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조사와 건강·교육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 점검 필요
- 가정 밖 청소년 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확인
- 고립된 청소년 지원을 위한 원스톱 체계의 운영 필요성 강조

딥페이크 등 여성대상 범죄 척결을 위한 대안 제시

여성가족위원회 김상욱 의원

주요 내용

■ 한국 여성 대상 외국 온라인 성범죄 대응방안

- 2019년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조사에서 한국 딥페이크 범죄 위험 우려 제기하였으나 당시 정부 및 여성가족부의 미온적 대응에 따른 상황 악화 문제 질타
-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상 성행위 인증에 대한 법적 제재 장치 전무 문제 지적

■ 청소년 일탈행위의 온상 만화카페

- 만화카페에서 청소년들의 조직적 일탈 행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주 등 만화카페 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문제 지적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대응방안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발생 건수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문제 지적
- 성희롱·성폭력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2차피해 사건에 대해 사건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부과를 부과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2차피해 사건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 강화 필요성 제기

여성가족부 조직 기강 및 정책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여성가족위원회 서범수 의원

주요 내용

■ 조직 기강

- 본부 8인 고위공무원단 중 2인의 인사 공백과 직무대리 규정을 어긴 대행 체제의 기형적 구조, 양평원 무보직 파견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기획관과 권익증진국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제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비위 사례와 가해자에 대한 미조치에 대한 지적.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등의 부적절한 인사 문제 및 책임있는 후속조치와 감사원 감사 요구
- 양육비이행관리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정원 97명, 현원 86명)하여 선지급 제도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가칭)양육비 선지급제 준비단 발족도 지연 중인 문제점 지적
-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관련하여 일부 NGO 단체들이 정치적 성향을 띠며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로비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사전 개입을 예상하지 못하고 방치.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 방지 대응책 마련 필요

■ 정책 강화

- 은둔형 청소년 지원사업 전체 대상 실태 조사 미진으로 인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해 추정치로 추산. 추정 대상의 0.3%만 지원하고 예산도 구분되지 않는 등 졸속 추진에 대한 질타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 촉구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는 12만 2천, 돌보미는 2만 8,071명으로 공급 부족이 심각하며 대기 기간이 4배 증가(2020년 8.3일 → 2023년 33일). 민간등록제 도입에 대한 민영화 우려가 제기되나, 여가부는 정책 실행 준비와 실태조사 부족으로 불안감 해소에 대응 미흡

■ 디지털 성범죄 대책

-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외 사이트 삭제나 차단요청 불응에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며, AI 탐지 시스템 구축과 반복 유포 제재, 생성물 표시 의무 논의가 요구됨
-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 사이트로, 방심위·경찰의 협조체계 구축 및 공신력 강화 요구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여성·아동·청소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촉구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 회복 노력 촉구

-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최근 정치 집회에 나와 여전히 ‘위안부 할머니 팔이’를 하고 있음. 이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여성 가족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안락한 여생을 위한 여성가족부 노력 촉구

■ (여성가족부) 유명무실한 가족친화인증제도…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적·질적 노력 촉구

- 일·가정 양립 문화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도’ 확대 도입 필요
-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양적 확대 및 제도의 질적 기준 개선 촉구

■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기구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참여기구의 기능 중복 및 유사 기구 문제 지적
- 정책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의 실효성 제고 및 홍보 활동 강화

여성 청소년 정책의제 관련 정부대응 현황 점검 및 사각지대 해소위한 대안 제시

여성가족위원회 조은희 의원

주요 내용

■ 여가부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시정명령 불복에 혈세로 과태료 지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노동청의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조치 시정명령에 불복해 국민세금으로 과태료를 지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실태 지적
- 여가부, 최근까지 양육비선지급제 도입에 주력해온 한가원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데 공감, 해당 기관장과 함께 “대안 찾겠다” 답변

■ ‘교제살인’ 김레아 사건 계기로 본 근거법령 및 지원통계 정비 필요성

- 교제폭력이 현행 형법, 스토킹법, 가정폭력법 등에서 적용 대응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지적, 현재 계류 중인 대응 법제의 신속한 마련 필요성 당부
- 10대 교제폭력 피의자가 6년 전 대비 70% 폭증했음에도 성인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만 제공되고 있는 상황 지적, 개선 요구
- 교제폭력 피해자가 상담지원을 받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지원실적 통계 역시 가정폭력 중심으로 수집 보고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 지원통계 정비 요구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 불응 건수 3배 증가, 방심위 차단 무력화하는 해외 불법성인 사이트 대응책 필요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에도,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 사업자의 삭제불응 건수가 3년 전 대비 3배 증가한 점과 함께 사업자들의 방심위의 접속차단을 우회하는 기술을 적용해 차단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
- 구글 등 해외검색엔진의 검색결과를 통해 재유포된 디지털성범죄물이 여과없이 공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방심위·여가부, 대응에 미진한 부분 있음 인정하고 차단 조치 개선 및 해외검색엔진과의 협의 진척 후 결과 보고키로 답변

■ 양성평등정책기능 및 청소년 정책 점검

- 양성평등담당관 제도의 상설화 존치 결정 확인 통한 야당 공세 일축, 제도의 운영 내실화 주문
-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 쉼터 입소 규정 개선 필요성 지적

여성·아동 등 사회적약자 정책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

여성가족위원회 한지아 의원

주요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촉구

-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인당 할당공간기준(6.6㎡)이 최저주거기준(14㎡)에 절반에도 못미쳐 거주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
-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동반 아동까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1인당 할당공간 기준 확대 및 아동 동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 촉구

■ 양육비 이행 격차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 분원 설치 촉구

- 23년도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체 소송 사건 7,056건 중 양육비 이행률이 높은 직접 소송은 21.5%(1,519건)에 불과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심각한 지역 격차가 발생하는 점 지적
- ☞ 양육비 이행 지원과 관련한 불공평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 마련 주문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실태조사 촉구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는 신분에 가로막혀 교육권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지적
- ☞ 돌봄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문

2024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발행일 | 2024년 11월
발행처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국민의힘
전화 | 02-6288-0200

2024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